

# INSS 국가행동 분석

김숙현, 김승배, 김태주,  
남기정, 오승희, 이정환

일본

Japan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

Japan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INSS  
국가행동  
분석

INSS

# I N S S

# 국 가 행 동 분 석

●  
일본 Japan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머리말: 왜 ‘일본의 국가행동분석’인가?	06
1. 문제 제기	06
2. 연구의 구성과 한계	08

Part

## 01

탈냉전과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1. 서론	14
2. 외압반응형 국가의 폐기	17
3.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꿈, 삶, 앓, 함	21
3-1. 일본의 꿈, ‘보통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	25
3-2. 전후 일본의 삶, ‘기지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존재론’	30
3-3. 동맹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의 중첩: 일본 국가행동의 ‘인식론’	33
3-4. ‘9조’와 ‘미·일 안보’의 매트 릭스: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론’	39
4. 결론	47

Part

# 02

##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재구성: 탈냉전 시기 미·일 안보 거버넌스와 수상 자문그룹의 역할

1. 서론	56
2. 일본 수상 자문그룹: 미·일 협력과 보수주의 평화헌법 담론	60
2-1. 수상 자문그룹	60
2-2. 헌법 개정론과 일본 보수주의	62
2-3. 평화헌법의 전략적 가치와 미·일 동맹	65
2-4. 인도·태평양 전략	70
3. 결론	73

Part

# 03

##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의 특징과 함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역할과 내용 분석

1. 서론	82
2.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의미와 역할	84
2-1. 간담회의 조직과 기능	84
2-2. 간담회의 역할	87
3. 주요 시기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내용 분석	90
3-1.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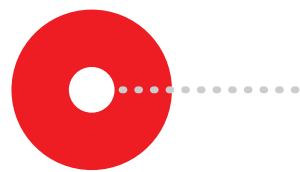
3-2.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92
3-3.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96
3-4.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99
3-5.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102
4.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 추이와 특징	104
5. 결론	109

Part

# 04

##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서론	114
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	117
2-1. 싱크탱크의 유형 및 역할	117
2-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	120
3.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 프로그램	123
4. 싱크탱크의 일본 외교로의 공헌	133



# I N S S

# 국 가 행 동 분 석

●  
일본 Japan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4-1. ‘창조적 구상력’ 제시	134
4-2. 글로벌 연계를 통한 국내외 여론 조성	138
4-3. 일본 외교 정책의 강화	142
5. 결론	145

## Part 05

### 『국제문제』의 일본 외교안보 담론 분석

1. 서론	152
2. 2000년 이후 『국제문제』의 내용과 저자	153
3. 『국제문제』의 국제질서와 일본	157
3-1.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옹호자	157
3-2.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의 관계성	158
4. 『국제문제』의 중국 인식과 안보 담론	160
4-1. 관여적 대중정책의 지속	160
4-2. 대중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전환	163

4-3. 대중정책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165
5. 『國際問題』의 동아시아 인식 변화	167
5-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시대	168
5-2. 동아시아 지역주의로부터의 이탈	170
5-3.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막	172
6. 결론	176

## Part

# 06

### 『世界』의 외교안보론

1. 서론	180
2. 평화헌법의 수호	183
2-1. 평화헌법의 옹호자	183
2-2. 개헌반대와 반아베 전선	186
3. 미·일 관계의 조정	188
3-1. 미·일 안보와 헌법	188
3-2. 미·일 안보와 기지	190
3-3. 미·일 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191
4. 중·일 관계의 심화	194
4-1. 대중 포괄적 관여 정책	194
4-2. 중국위협론 비판	196

4-3. 중국 이해를 통한 중·일 신뢰 조성	197
5. 지역 구상의 기반	199
5-1. 한반도와 일본의 지역구상	199
5-2. 남·북 정상회담과 일본	202
5-3. 균형자 일본의 역할	203
6. 결론	204

## Part

# 07

### 결론

1.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212
2. 수상 자문그룹의 존재와 역할	214
3. 수상관저 '간담회'의 역할과 활동	215
4.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역할	217
5. 『國際問題(국제문제)』로 보는 보수 주류의 외교안보 담론	219
6. 『世界(세카이)』로 보는 평화주의 안보 담론	220
7. 요약과 제언	221

부록	224
----	-----

참고문헌	239
------	-----

## 머리말: 왜 ‘일본의 국가행동분석’인가?

남기정 (서울대학교)

### 1. 문제 제기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3년 2월 22일,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의 제목이다. 아베는 직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신뢰와 유대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민주당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본이 미·일 동맹의 강력한 파트너로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한 연설이다. 그러나 아직은 말뿐이었다. 그 의지를 표명했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 동맹의 대등화가 필요했다.

미·일 동맹의 비대칭성은 평화헌법이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에 가하는 제약들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 제약들을 뛰어넘어 일본이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통국가가 완성되어야 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일본에는 ‘암반과도 같은 평화주의 여론’이 있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완결되는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2015년의 평화안보 법제 성립은 우회로를 통한 헌법 개정이었다. 이를 ‘해석 개헌’이라고 한다.

아베는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해석’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 평화안보법제였다.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등장이었다. 일본이 국제 안보

질서에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등장한 것이다. 이제 정말 ‘일본이 돌아왔다.’

‘행동하는 국가’ 일본이 능동태 구문을 스스로 작문하여 그 안에서 주어 가 되어 선제적으로 행동한 최초의 실천이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였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이른바 ‘보편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이자, 아베는 스스로 트럼프의 교사를 자처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옹호자로 나섰다. 이어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남·북 화해로 나갈 뜻을 비치자, 지역질서의 현상변경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이에 교정자로 나설 생각을 굳혔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또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속도를 내자 일본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리고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실현되자, 일본은 바로 다음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개입해 들어왔다. 2018년 봄, 일본을 ‘모기장 밖(蚊帳の外)’으로 내보내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일본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물론 일본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의 모든,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이 워싱턴을 무대로 전개했던 대미 외교가 그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

1 田中明彦·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編, 『提言, 日米同盟の組み直し: 東アジアリスクと安全保障改革』,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7, p. 17.

●

확인된다.<sup>2</sup>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던 아베의 움직임을 농침으로써 그 속도가 둔화되고 결국 좌절하고 말았던 경위는 한국의 대외 정책 구상과 실천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아베 시기를 거쳐 국제정치의 적극적 행위자로 나선 일본의 국가행동을 분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연구의 구성과 한계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탈냉전과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남기정)에서는 일본이 1990년대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외압반응형 국가’를 폐기처분하고 보통국가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제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했다고 전제하고, 그런 일본의 국가적 목표와 존재적 조건, 상황 인식과 행위를 나누어 고찰했다. ‘보통국가’의 목표와 ‘기지국가’의 조건을 전제로, 일본은 주관적 객관적 상황 인식에 근거하여 전략을 산출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표와 존재는 거의 상수인 부분인 데 반해, 일본의 행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는 ‘상황 인식과 전략 산출’ 부분이다. 이를 일본의 ‘현대적 고전’이 된 ‘마징가Z’에 비유하자면 로봇의 뇌수에 꽂히는 ‘호버 파일터’에 해당한다. 2장 이하는 이에 대한 분석들에 해당한다. 이들 분석에서 주목한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호버 파일터’ 역할을 담당하는 수상관

---

2 존 볼턴, 『그 일이 일어난 방: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 시사저널사, 2020. 특히 11장.

저, 그곳에서 이루어진 전략구상들, 이에 영향을 미친, 또는 그로부터 산출된 담론들, 그리고 수상관저에 모인 전략가들이 상대했던 비판 담론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상의 자문가 그룹(제2장), 특히 탈냉전기 이후 수상관저에 설치되었던 ‘간담회’들(제3장)과 이에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싱크탱크들(제4장),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통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침투해 들어갔던 여러 담론들(제5장)과 이들의 사상적 격투 상대였던 비판 담론들(제6장)이다.

제2장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재구성: 탈냉전 시기 미일 안보 거버넌스와 수상 자문그룹의 역할」에서 김태주는 수상 자문그룹의 형성과 이들을 통해 보수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과정, 이들이 탈냉전 시기 국가 재건과 안보 담론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복기했다. 이를 통해 탈냉전 시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정치 속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스스로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줄 것이다.

제3장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의 특징과 함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역할과 내용 분석」을 담당한 김숙현은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 자료가 되는 수상관저 ‘간담회’ 자료들을 분석했다. 특히 2004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간담회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자들은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흐름을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서 오승희는 일본 외무성의 전문가 간담회 자료와 ‘외교 안전보장 조사연구 사업비 보조금’ 사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

●

업비 조성금' 사업 등에 대한 내용 파악을 통해 일본 외교 안보 싱크탱크들의 활동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은 '창조적 구상력'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장악하여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5장 「『國際問題』의 일본 외교안보 담론 분석」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國際問題』를 소재로 일본 보수 주류의 외교안보 담론의 성격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國際問題』는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해당하는 월간지로서, 이정환은 『國際問題』의 대표성과 시의성에 착목하여,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이른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 조정기에 이에 실린 글들을, 국제질서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중국 인식과 안보담론, 동아시아 인식 변화 등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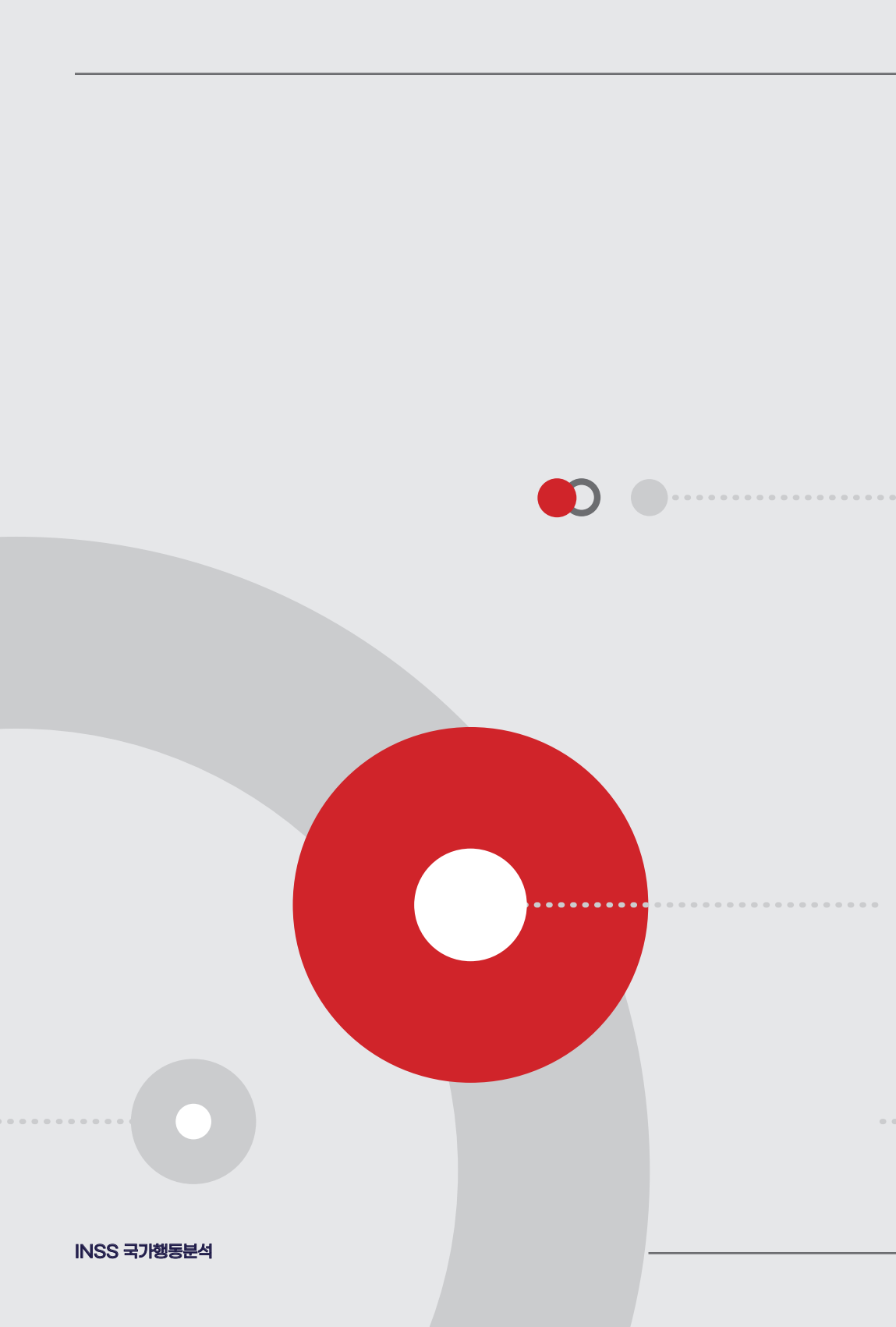
제6장 「『世界』의 외교안보론」은 제5장과 쌍을 이루는 글이다. 전후 평화주의의 이상을 대변하며 전후 논단을 주도한 대중교양잡지 『世界』는 『國際問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의 적극적 안보론은 물론,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국제정치 담론에 대해서도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담론은 『世界』와의 사상적 격투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착목하여 김승배는 『世界』를 무대로 전개된 안보론을 평화헌법, 미·일 동맹, 중국문제, 동아시아 지역구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괄에서는 이들 논의를 종합하여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인식이 지향하게 될 방향과 그 실천이 진행될 속도를 가늠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시론에 불과하다. 1장에서 시도한 모델링은 전후 일본에

서 전개된 방대한 안보 담론들 가운데에서 각 그룹의 대표적인 저작을 한두 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전략구상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장 이하 6장까지의 각 장에서는 분석되어야 할 저작과 보고서 등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자료들의 미시적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짧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과욕의 결과다. 반성의 재료로 삼으며, 각자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주어진 시간의 제약 속에서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커다란 흐름을 짚어 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일본의 국가행동 분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제들과 영역, 자료들을 망라해서 소개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향후 대일 외교를 전개하는 데,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작업에서 이 연구를 하나의 준거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



---

Part

# 01

## 탈냉전과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1. 서론

2. 외압반응형 국가의 폐기

3.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꿈, 삶, 앞, 함

3-1. 일본의 꿈, '보통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

3-2. 전후 일본의 삶, '기지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존재론'

3-3. 동맹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의 중첩: 일본 국가행동의 '인식론'

3-4. '9조'와 '미·일 안보'의 매트릭스: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론'

4. 결론



---

## 1. 서론

일본의 국가행동 분석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일본의 국가행동 분석을 그림으로써, 조선은 왜란을 막지 못하고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식민지로 전락해서는 일본의 국가행동을 분석하는 주체적 능력을 갖지 못한 채, 일본의 전쟁과 패전 속에서 한반도 국가는 온전한 주권 회복에 실패했다. 해방 이후 닥쳐 온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도 한국에게 일본 국가행동 분석은 쉽지 않은 과제로, 1965년 체제로의 과정과 그 이후 시기의 한·일 관계가 보여 주듯, 빈약하고 때때로 그르친 분석으로 인해 한국은 국익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냉전 시기 그 손실의 크기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는, 일본 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국가행동이 수동적 반응적인 것이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일본의 대외적 국가행동 기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크리스토퍼 휴즈(Christopher Hughes)는 요시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요시다 독트린은 실용적이면서 저자세(low-profile)의 외교안보 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절제적인 방위태세,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과도하지 않은 의존, 그 대신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외교적 유대의 재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신해서 아베 독트린은 이념적이면서 고자세(high-profile)의 외교안보 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반군사적 제약을 벗어난 적극적인

방위태세, 미·일 안보 이익의 일체화, 동아시아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한 ‘가치 지향’ 외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이 ‘요시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탈냉전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외교안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히구치 보고서(樋口レポート)」였다. 보고서의 핵심 주제어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지역외교’였으며, 이를 통해 미·일 관계를 안정시켜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었다. 유럽에서 탈냉전을 직접 목격하던 와타나베 아키오(渡邊昭夫)의 맹아적 구상이 후에 히구치 보고서에 다각적 안전보장협력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sup>2</sup>

「히구치 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한 ‘방위문제간담회’가 발족된 것은 1994년 2월이었다. 보고서의 이름은 좌장에 아사히맥주 회장 히구치 히로타로(樋口廣太郎)가 취임했던 것에 기인한다. 히구치 간담회는 6개월의 작업 끝에 1994년 8월 12일, 무라야마 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간담회 위원들은 ‘냉전 후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지적 공백이 일본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지적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았다고 회고했다.<sup>3</sup>

1 Hughes, C. W.,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Palgrave Macmillan). 2015. p. 114.

2 渡邊昭夫, 「冷戦後の米中ソ関係と日本外交の選択」, 1990, pp. 46-47.

3 河野康子·渡邊昭夫, 『安全保障政策と戦後日本, 1972~1994: 記憶と記録の中の日米安保』 (東京: 千倉書房, 2016), p. 140.

간담회는 냉전 종언에도 국제질서의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일본에 지니는 의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 특히 중·일 간 군사력 격차에도 미·일 동맹이 있기에 일본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안보 시스템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sup>4</sup> 여기서 냉전 시대에 확립된 안보 시스템이란 다각적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의미했다.

이후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히구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탈냉전기에도 일본 외교의 퍼포먼스는 외형적으로는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반응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는 탈냉전기와 냉전기 일본의 안보 태세에서 어느 정도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외교는 ‘미국이나 아시아나’의 양자택일을 신중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sup>5</sup> 「히구치 보고서」에도 그러한 특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일본이 외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외교는 주로 대미외교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 반면 냉전기에도 이미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주외교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 아시아의 부상이 뚜렷해지면서 그러한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다. 냉전 후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일본 외교가 주체적인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전략의 대상과 범위에서 표적이 되는 국가들, 특히 북한과 중국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과거 일본 국가의

4 위의 책, p. 144.

5 宮下明聡·佐藤洋一郎, 『現代日本のアジア外交: 対米協調と自主外交のはざままで』(ミネルヴァ書房, 2004), p. 1.

한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압반응형 국가를 벗어나는 외교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sup>6</sup> 그리고 2012년 겨울에 등장해서 2020년 여름까지 최장 내각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적극적 안보정책으로 일본의 국가행동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 2. 외압반응형 국가의 폐기

전후 일본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수상은 일본에 전통적으로 국가주의적 과격파와 리버럴한 온건파의 두 조류가 있어서,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은 이들 사이를 왕복하는 갈지자 행보의 역사를 보여 왔다고 갈파했다. 이를 ‘진자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전쟁 중 군부가 지배하는 일본이 결국은 다시 영미와의 협조를 기조로 하는 리버럴 온건파의 일본으로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여, 조셉 그루(Joseph C. Grew) 등 미국의 온건파들이 일본의 온건파들에게 기대를 걸도록 설파하는 이론이었다.

“외교감각이 없는 국민은 반드시 쇠락한다(ディプロマチック・センスのない国民は、必ず凋落する)”라는 말은, 요시다가 1932년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의 외교교문으로 파리 평화회담에 참석했던 에드워드 하우스(Edward M. House) 대령에게서 들었다는

6 최은미, “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일본 외교의 변화와 연속성”, 『일본연구논총』 제49권 (2019), p. 137.

말이다. 이후 요시다는 이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실패는 영·미 국가와의 협조 외교의 길에서 이탈하여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전쟁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sup>7</sup> 이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전후 요시다 총리가 세운 최대의 외교 원칙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국가와의 친선 노선이었다.

요시다 노선이 지배했던 일본의 전후는 리버럴한 온건파의 시기였다. 그러나 요시다가 자신이 대변하는 리버럴의 복귀를 설파하던 진자이론은 이제 거꾸로 일본의 진동추가 국가주의자들로 이동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논리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다시 서서히 국가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자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베이즘’이라는 ‘신국가주의’의 일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자들에게 일본 국가의 자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은 일본을 전범국가로 지목하여 제어하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역사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반중, 역사수정주의, 주장하는 외교의 세 가지 요인이 복잡한 조합을 이루며 전후의 무대 전면에서 밀려나 있던 국가주의자들의 트라우마 속에 자리 잡고 있다.<sup>8</sup>

아베가 발신하는 활자와 발언을 주의 깊게 들어 보면, 과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과 다른 그 만의 색깔이 강렬히 드러난다. ‘국가’가 핵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그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담아 펴낸 두 권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 『새로운 나라로(新しい国へ)』에 모두 ‘

7 吉田茂, 『回想十年(1)』(中央文庫, 1998), pp. 22-24; 細谷雄一, 『外交: 多文明時代の対話と交渉』(有斐閣, 2007), p. 191.

8 添谷芳秀·田所昌幸·ディヴィッド·A·ウェルチ, 『「普通」の国·日本』(千倉書房, 2014) p. 110.

9 柿崎明二, 『検証·安倍イズム: 胎動する新国家主義』(岩波書店, 2015) p. 3.

나라=국가'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이를 들어 아베 자신이 국가주의(또는 전체주의)를 직접 지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고 방식과 정치수법에서 일본이 국가주의로 경도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그것이 과거와 같은 위로부터의 강제적 국가주의라기보다는, '국가'의 출현을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불려 나오는 형태로 태동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전후 일본'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반발에 기초하고 있다. 전후 일본 외교에 대해 전통적 평가는 사후 대처에 치중한 소극적인 외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가령 '현안 처리와 위기관리 지향형'으로 '철학'이 빈곤하며,<sup>11</sup> 이미 일어난 일에 '대처(coping)'하는 데 급급하여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적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을 수행한 뒤,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sup>12</sup> '국제경제의 여러 압력에 대해 무난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국익으로 생각한다<sup>13</sup>는 등의 평가였다.

켄트 칼더(Kent Calder)가 제시한 외압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의 이미지는 이러한 통설들을 이론적인 정밀함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칼더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

10 위의 책, p. 223.

11 入江明, 『新·日本の外交』(中公新書, 1991) p. 210.

12 Blaker, M., "Evaluating Japan's Diplomatic Performance", In G. L.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M.E.Sharpe, 1993), p. 3.

13 Rix, A., "Dynamism, Foreign Policy and Trade Policy", In J. A. A. Stockwin et al. (Eds.), *Dynamics and Immobilist Politics in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p. 298.

다고 해도 좀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본이 주요 정책을 변화시킬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더는 그 요인을 일본 국가권력의 분산적 성격, 즉 국내 정치의 구조와 특징에서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그로 인한 부수적 현상인 파벌정치와 이익유도형 정치 때문에 오래 집권 여당으로 군림해 온 자민당이 결단력과 자주성을 구비한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4</sup> 이에 더해 일본형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종할형(縦割り型)' 행정시스템은 '정치'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냉전기 '전후 일본'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낸 요인이기도 했지만, 냉전이 끝날 무렵 성청이기주의, 관료의 부패 스캔들,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극복을 내걸고 1990년대 이후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이 진행되었다. 행정개혁의 목표는 수상관저에 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2009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 주도'로의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민주당은 관료들과 전면 대결관계에 들어서 버렸다.<sup>15</sup> 결국에는 3·11 동일본대지진 직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

14 Calder, K. E.,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 40, Issue. 4 (1988), pp. 519-531; 宮下明聡·佐藤洋一郎, 앞의 책, pp. 4-5.

15 牧原出, 『崩れる政治を立て直す; 21世紀の日本行政改革論』(講談社, 2018), p. 208.

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관료들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 이반을 낳고 말았다. 간 내각에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 들어서서는 이를 바로잡아 관료와의 관계를 복구하려다가 거꾸로 관료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민주당 정치는 ‘정치 주도’의 실패를 자초했다.

이를 확인했던 제2차 아베 내각은 ‘정치 주도’를 재정의하고 관료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14년 4월 내각인사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관료 주도였던 간부 인사를 내각인사국으로 일원화하게 되어, 아베 수상관저가 성청 관료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9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자민당에서 총재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16</sup>

### 3.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꿈, 삶, 앓, 함

탈냉전기 이후 전개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외교의 내용도 통상 업무와 같은 일상적 경제외교에서 위기 대응의 안보외교로 중심이 이동했다. 그에 따라 일본 외교를 분석하는 틀로서 관료정치 모델은 유효성을 상실해 갔으며, 대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졌다.

16 권연이, “제2기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요인”, 『일본연구논총』 제54호 (2021), p. 20.

고전적 현실주의에서 국익은 소여된 것이며 불변하는 것으로서, 안보, 독립, 권력, 부의 추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실주의 이론에서 정책입안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서, 수단과 목적의 긴장 속에서 항상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sup>17</sup> 여기에서 합리적 선택 모델이 고안되었다. 이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이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내외 환경에 대응해 복수의 선택지 가운데 합리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해서 집행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가설에 입각해 있다. 이는 나아가 국가를 의인화해서 단일한 행동주체로 파악하려 한다. 그 결과 합리적 선택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발전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한 국가의 대외행동을 설명하는 대외정책 결정 과정의 대표적인 분석틀이다. 국가를 의인화해서 하나의 행위 주체로 간주하여 그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러나 대개의 정책 결정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조직과정모델’과 ‘관료정치모델’을 동원하여 그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sup>18</sup>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면서 일본의 행정학자인 후쿠이 하루히로(福井治弘)는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염두에 두고 아래로부터의(바텀업)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일상(日常)형 결정 과정과 위로부터의 탑다운 방식의 비상시(非常時)형 결정 과정의 구분을 도입했다.<sup>19</sup> 또한 발레리 허드슨(Valerie M. Hudson)은 관료정치 모델이나 조직과정 모델과는 또 다른 소집단 모델을 제시하여,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유용성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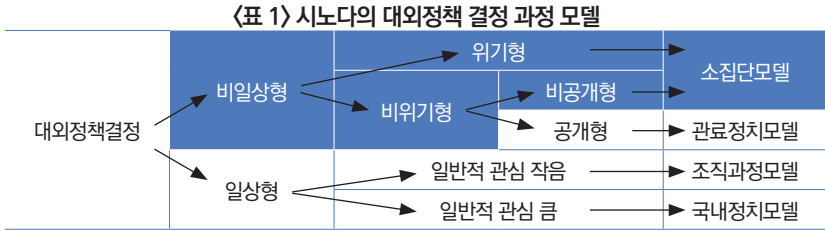
17 添谷芳秀·田所昌幸·ディヴィッド·A·ウェルチ, 앞의 책, p. 33, 1장 각주 3.

18 Allison, G.,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1971).

19 福井治弘, 「沖繩返還交渉の政治過程」, 『国際政治』 52号 (1975), p. 99.

20 Hudson, V. M., *Foreign Policy Analysis: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Rowman

이를 종합해서 시노다 도모히토(信田智人)는 <표 1>과 같이 대외정책 결정 과정의 유형화를 시도했다.<sup>21</sup>



<표 1>에서 보듯이 일상적인 이슈 가운데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는 정책 결정은 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는 국내정치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일상적 업무이면서 국민 일반의 관심을 적게 받는 정책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 처리의 결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직과정모델로 설명된다.

한편 일본 외교에서도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이면서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직접 책임을 지는 소집단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래 일본 정치가 관저 중심, 정치 중심의 면모를 갖게 되고, 특히 내각인사국 발족 후 수상관저가 관료를 장악하고 관저관료가 힘을 갖게 된 이후로는 수상관저가 정책

& Littlefield, 2007).

21 信田智人, 「対外政策決定: 『小泉外交』における政治過程」, 日本国際政治学会 (編), 『学としての国際政治 (日本の国際政治学1)』 (有斐閣, 2009), p. 97.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무성마저 배제되었던, 2019년 여름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부처(일본의 경우 성청)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돌아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가운데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되어 나올 수 있다. 이는 관료정치모델로 설명할 수 있으나, 탈냉전기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핵심에 가깝고 직접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합리적 행위자로서 소집단, 특히 수장관저는 일본의 대외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소집단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주체적 조건으로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객관적 조건으로서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행동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영선은 이를 하나의 민족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각각 목적론,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의 문제라 포착하고 이에 각각 꿈, 삶, 앓, 합의 문제라고 이름 붙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sup>22</sup> 이러한 분석들은 일본의 국가행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원용될 수 있다. 일본 국가행동을 목적론,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22 하영선,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한울아카데미, 2019), pp. 210-213, 233-239.

### 3-1. 일본의 꿈, ‘보통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은 일본의 꿈과 관련한 논의들로 구성된다. 일본의 꿈은 전범국가의 명예를 벗고 군사적 보통국가로서 일본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주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 붕괴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보통국가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93년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일본개조계획』이 출판되었다. 이른바 ‘보통국가’론의 효시다. 이후 ‘보통국가’론은 평화국가라는 ‘우상파괴’를 시도하여 점차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sup>23</sup> 보통국가론의 등장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헌법 제9조의 존재, 즉 전쟁 및 군대 보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며, 둘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국제적 안전보장 문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사실이었다.<sup>24</sup>

오자와가 보기에, 일본은 정당한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타국과 협력함으로써, ‘보통의 국가’로 거듭나야 했다. 그러나 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국내 정책 결정구조, 그리고 능력이나 임무 수행 면에서 자위대에 가해진 제약이었다. 즉 일본이 ‘보통이 아닌’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표준적 요구에 대응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보통국가론자들이 보기에 보통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요인들은 헌법, 반군국주의 정서, 정치적 관

23 添谷芳秀·田所昌幸·ディヴィッド·A·ウェルチ, 앞의 책, p. 52.

24 위의 책, p. 21.

료적 제약 등이었다.<sup>25</sup> 이 가운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었고, 이에 기초해서 국시의 반열에 오른 반군국주의 또는 평화주의의 이념이었으며, 그 국내적 적용의 결과 형성된 전후 정치 관료 시스템이 이를 이념과 제도 면에서 일본 사회에 착근시키고 있었다.

55년 체제하의 일본에서는 관료와 족의원(族議員)이 주도하는 바텀업형 정책 패턴이 정착되어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은 제도화된 냉전체제하에서 소극적인 안보정책의 외압반응형 국가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으로 국제질서가 유동화하자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면서 ‘보통국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대응해 정책 결정 패턴의 개혁 노력이 진행되어 2001년 봄에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관저 주도(菅野)의 탑다운형 정책 결정이 도입되고 구조개혁이 단행되었다. 고이즈미 내각 후 몇 번의 단명 내각을 거친 후에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내각에서도 정치 주도 정책 결정 패턴의 도입 노력은 지속되었고, 이는 아베 내각에 들어와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보통국가 노선은 전면화, 가속화되었고, 개혁의 일정표가 정치권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개혁을 통한 보통국가의 완성은 자민당의 입당(창당) 선언과 강령에도 나타나 있다. 1955년 창당하여 두 차례의 아주 짧은 시기(1993~1994, 2009~2012)를 예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기 집권 정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주독립의 회복 또는 완성을 창당의 이념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1960년에 개혁을 적극 추진하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안보투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으로 하야한 뒤, 자민당

25 위의 책, pp. 13-17.

의 개헌 주장은 보수 우파 강경세력의 목소리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아베 시대를 거치면서, 개헌은 이른바 당내 온건 리버럴의 적통을 자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를 포함하여 자민당의 일치된 주장으로 전면화했다. 그 꿈을 아베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구호로 표현했다.

아베 내각은 2019년 11월 20일에 통산 재임일수 2,887일을 기록하며 가쓰라 타로(桂太郎) 내각을 제치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내각이 되었다. 2020년 8월 24일에는 연속 재임일수에서 2,798일을 넘겨,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가 가진 기록을 갱신했다. 제2기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 9월 퇴임까지 7년 6개월의 최장 재임 기록을 가진 내각이 되었다. 그동안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미·일 동맹의 ‘빈틈없는’ 방위태세 정비가 급진전했다.

그런데 아베 시기 점령기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벗어나 일본의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들은, 정책 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미·일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했다.<sup>26</sup> 이것이 바로 ‘기지국가’로서의 존재에 기인하여 반복되는 전후 일본의 행동-결과 패턴이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점령기의 국가체제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재편된 국가체제였다. 그런 일본의 자주와 자립을 위한 행동들이 정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에야 교수는 헌법 제9조와 미·일 안보조약을 두 축으로 하는 전후 일본

26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直す: 「九条・安保体制」を越えて』(東京: NHKブックス, 2016), p.

의 외교, 방위,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틀을 '9조-안보체제'라 불렀다.<sup>27</sup> 평화 헌법 9조와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가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것이 '9조-안보체제'라고 할 수 있다. 소에야가 지적하는 일본 외교 노선의 세 가지 분화는 이에 대한 반응 또는 대응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즉 보수 우익 쪽에서 '개헌, 재군비, 미·일 관계 대등화'라는 노선이, 혁신 좌익 쪽에서 '호헌, 비무장중립, 미·일 안보 반대'의 노선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헌법 유지, 경무장, 미·일 안보견지'의 노선이 갈려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내각의 안보정책은 모두 좌우의 극단을 배제하며 중도 노선으로 수렴해 왔다. '9조-안보체제'가 중도 노선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후 일본에서는 좌와 우의 모든 방향에서 변화를 시도했던 모든 노력들을 '9조-안보체제'의 틀 속에 수습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에야 교수의 핵심 주장이다.<sup>28</sup>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용인 가능했다. 그 결과 '9조-안보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sup>29</sup> 바로 이 '9조-안보체제'가 기지국가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아베 내각에 이르러서 '9조-안보체제'는 더욱 분명히 드러났고, 기지국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sup>30</sup>

---

27 위의 책, p. 12.

28 添谷芳秀, 앞의 책 (2016b), pp. 38-39.

29 위의 책, p. 12.

30 위의 책, p. 12.

냉전 후 일본은 ‘보통의 국가’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의 ‘보통의 국가’가 반드시 ‘보통의 군사강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 말기에서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능가할 것만 같던 경제강국의 이미지는 ‘보통의 국가’에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 시기 일본이 지향했던 것은 소에야의 표현에 따르면, ‘보통의 미들파워’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편승하여 강화된 국가주의적 충동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서 ‘보통의 미들파워’로의 이행에 혼동이 발생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직면하여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9조-안보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재생산되고 있었다.<sup>31</sup>

소에야는 이 막연한 불만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불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고, ‘9조-안보체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에야는 ‘리버럴 개혁론자’로서, ‘미들파워’ 외교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에야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아베가 시도하는 과거 지향의 개혁이 아니라 미래 지향의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전후 평화주의 진영에서 나와야 할 목소리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sup>32</sup>

그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소에야는 ‘전후’에 대한 불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이 ‘9조-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그로부터 ‘전후’에 대한 불만이 다시 고조되는 악순환을 잘 그려냈다. 나아가 ‘보통국가’론은 소에야 요시히데를 통해, 그의 지론인 ‘미들파워’ 외교론을 만나, ‘보통의 미들파워’론으

31 위의 책, p. 14.

32 위의 책, pp. 15-16.

로 정교화되었다. 소에야의 평가에 따르면, 요시다 노선은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대국간 권력정치의 무대에서 내려가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의 미들파워 노선을 지지하는 ‘전후 일본의 국민적 합의(戦後コンセンサス)’를 체현하고 있었다.<sup>33</sup>

### 3-2. 전후 일본의 삶, ‘기지국가’: 일본 국가행동의 ‘존재론’

이렇듯 일본의 꿈은 ‘보통국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희구는 ‘전후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이 아닌 것을 상상하는 것이 꿈일진대, 일본이 벗어나기를 갈구했던 현실이란 ‘기지국가’의 현실이었다. ‘기지국가’의 현실이 ‘전후체제’의 내용이며, ‘기지국가’는 전후 일본의 존재론을 구성하고 있다. ‘기지국가’는 일본이 한국전쟁에 후방기지로 편입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후방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전후 국가 일본의 특질을 포착한 용어다. 이는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요청에서 기지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sup>34</sup> 일본이 ‘기지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은 일본의 안보논쟁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했다.

사실 전후 일본의 안보논쟁은 미·일 안보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것이었지만, 이는 안보조약 그 자체와 관련한 ‘정책적’인 것이기보다는

33 添谷芳秀·田所昌幸·ディヴィッド·A·ウェルチ, 앞의 책, pp. 101-105.

34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b).

그 실시를 위한 행정협정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특히 초기의 미·일 안보 교섭의 대부분은 기지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기지 문제’는 안보조약 체제하의 미·일 관계, 그 자체의 출발점에서 일관해서 존재했다. 그것은 기술적이고 무미건조한 문제였으나,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였다. ‘기지 문제’는 일본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였음에도 그것이 ‘정책’의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방위시설 주변정비법(기지기본법, 1966.6.)’의 성립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그 후, 미·일 안보 연장과 관련한 ‘1970년 안보’ 문제와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미묘하게 동기화한 것을 배경으로 ‘오키나와 기지 문제 연구회’가 발족했으며, 이것이 ‘안전보장 문제 연구회’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지 문제’는 일본 정치의 핵심이었다.

‘오키나와 기지 문제 연구회(기지연)’는 오키나와 반환에 수반하는 시정권, 교육제도 문제 등과 관련한 구상을 검토한 사토 수상에 자문기구 ‘오키나와 문제 등 간담회’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1968년 2월부터 1969년 3월까지 20회 개최되었으며, 오키나와에 핵을 배치할 필요는 없으며, 오키나와 반환 시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사전협의 제도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토 수상에게 제출했다.<sup>35</sup>

이어서 ‘안전보장 문제 연구회(안보연)’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국의 전방전개 병력이 삭감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안보조약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었다. 가령, 주일미군기지가 유사시 주둔군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인가, 일본에 요구되는 미군 지원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등이다.

35 東京新聞, 2020. 1. 14.

안보연이 직면하고 있던 1970년대는 미국 패권의 쇠퇴와 국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던 시대였다.

‘종합안전보장’ 그룹을 이끌던 고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가 오히라 총리의 정책연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1970년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의 명백한 우위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료했다는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자조의 노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미·일 간의 전반적 우호관계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정리했다. 고사카와 함께 ‘안보연’의 일원이었던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는 ‘미·중·일 삼각관계에 내재하는 불기파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시아 신질서’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이 시기 ‘안보파’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기지연’이나 ‘안보연’은 미·일 안보체제하 미군기지 문제를 검토하고 제언하는 것을 자임하며 출범한 조직이었으나 미·일 안보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전망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기지연’과 ‘안보연’에 참가한 식자들은 미·일 간의 새로운 관계, 즉 보다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부담 분담의 재편(미군의 유사 주둔군화를 포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일 동맹의 역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부여했다.

‘안보연’의 최종 보고서는 1970년 12월에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냉전 상황이 만들어 낸 서방 측의 동맹관계가 결정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인식하에, 미 주둔군과 기지 정리 및 축소 문제를 미·일 동맹관계의 대등성 강

화와 이를 통한 안정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sup>36</sup> 요컨대 ‘기지국가’라는 현실과의 격투가 일본 안보논쟁의 전선이었던 셈이다.

### 3-3. 동맹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의 중첩: 일본 국가행동의 ‘인식론’

여기까지는, 즉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과 ‘존재론’은 일본의 국가행동을 분석 평가하는 데 당분간 변화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이미 주어진 상수로 볼 수 있다. 즉 ‘기지국가’의 현실을 존재의 조건으로 하고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 움직이는 것이 일본 국가행동의 기저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지국가’로서의 존재와 ‘보통국가’의 목적 사이의 영역이,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용어를 빌리자면, 현재 일본 국가행동의 ‘집요저음’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국가행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그 위에 ‘본질’이 외화하여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일본 국가행동의 주선율이 펼쳐지는 실천의 영역이며, 본질과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인식의 공간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일본 국가행동 분석에서 실천론의 영역은 ‘전략구상 및 안보담론’의 공간이다. 그 결과들은 일본 국가행동의 연기(performance)로 나타나,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갈등하거나 협력하는 계임을 펼치기도 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생의 복합 연기를 보이기도 한다.

36 河野康子·渡邊昭夫, 앞의 책, pp. 6-20.

한편 인식론이 차지하는 영역은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그룹들에 정보와 인식의 틀을 투입하는 경로들로 채워져 있다. 수상관저에서 구성되는 여러 ‘간담회’들과, 이 간담회들에 기초적 참고자료와 이론틀을 제공하는 ‘싱크 탱크’들이 이 경로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위자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II장 이하 VI장까지의 개별 장들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 국가행동의 ‘인식론’에서 다뤄야 할 주된 내용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위의 ‘존재론’이 주변 환경에 대응해 일본이 스스로 획득한 주관적 조건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다면 이 장에서 다루는 ‘인식론’은 일본을 둘러싼 객관적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일본에게 동맹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라는 중첩된 딜레마의 문제로 다가왔다.

2015년 안보법제의 성립은 전수방위의 소극적 안보정책에서 탈피한 일본이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적 규모의 국제안보질서 속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아베의 장기적 정책방향에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일본 안보 방위정책이 변화하는 배경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척은 일본의 안보 방위정책에 가지는 의미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역질서의 현상 변경으로 받아들여, 안보 방위정책의 적극화가 더욱 강조되었다. 과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중·일 군비경쟁은 진행 중이었으며, 일본발 안보 딜레마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헬기탑재함 ‘이즈모’의 개조 완료가 유발한 긴장 고조가 그 예다. 2021년 10월 3일, 시코쿠(四國) 연안 태평양상에서 ‘이즈모’에 미 해병대 F-35B기의 이착륙 훈련이 실

시되었다. 이에 대항하듯 중·러 합동함대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쓰가루해협(津輕海峽)을 통과해서 일본 동남부 태평양에서 함재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고 오스미해협(大隅海峽)을 통과해서 동중국해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 서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으로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일 동맹이 기본적으로 비대칭동맹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평화헌법의 제약에 가로막혀 일본이 해외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 특징이다. 미군 병사가 흘리는 ‘피’와 일본이 기지로 제공하는 ‘땅’이 불평등 교환되는 미·일 동맹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미군과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 왔다.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노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베-스가 내각을 거치고 기시다 내각에 이르면서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고 미·일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버림받을 위험’보다 ‘말려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맹 딜레마에 더해 안보 딜레마도 현실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여 ‘신냉전’의 시나리오가 회자되면서 오히려 일본에서 중·일 관계의 신중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일 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구상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보완과 조정이 필요해졌다.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처음 천명한 것은 2016년 아베 수상의 케냐 연설을 통해서였으나, 그 기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15년 3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일본 외교: 중견국 및 스윙국가에 대한 대응(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Seco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하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 해양에서 일본의 기존 국익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계기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간지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일본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및 필리핀 등 스윙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언하고 있다.

2015년 6월 일본국제포럼(日本国際フォーラム)에서 진행된 공동연구 보고서 「신단계 미·일 동맹의 그랜드 디자인(新段階の日米同盟のグランドデザイン)」은 부제를 통해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일본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실시된 공동연구 성과인 「희망의 미·일 동맹(希望の日米同盟)」도 해양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와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등 아베 수상의 외교안보 브레인이 대거 참여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안보 목표가 ‘해양국가로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 항행자유원칙을 옹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2016년 아베 수상의 케냐 연설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수상은 201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서 실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발표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중요 지역으로 규정하고, 2개 지역을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연결한 지역 전체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자유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여 경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도 그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 있었다.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당시 외상이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을 통해 제시되었다. 첫째,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의 보급 정착, 둘째,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연결성의 강화 등에 의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셋째, 해양법 집행 능력의 향상성 지원과 방재 등을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 전략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구상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이었다.

애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과 2018년의 『외교청서』 특집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외교청서』부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고, 본문에서도 이는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문건들에는 ‘구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전략에서 구상 또는 비전으로 그 수준을 낮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 빈 공간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협력 대화기구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메우고 있었다. QUAD를 주도했던 것도 일본이었다. 그 기원이 아베 총리가 프로젝트 신디케이드에 발표했던 논문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사

각형(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sup>37</sup>

그런데 QUAD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2차 QUAD 외상 회담에서는 아시아판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극적인 미국에 대해 인도가 난색을 표하고 일본도 한결음 물러나는 등 전선에 균열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가 체결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더욱 구체화한 형태로 ‘서태평양연합(西太平洋連合; Western Pacific Union)’ 구상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타오카 신이치가 새로 제시한 개념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중간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기타오카는 이 개념 아래, 그동안 일본이 공들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인 서태평양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일본의 국가 전략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 유럽연합이 있고,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연합이 있는 것처럼, 태평양의 서쪽에서 일본이 주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서태평양연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종래 ‘허브 앤 스포크스’로 존재했던 동아시아의 안보 아키텍처를 대신할 그림으로 보인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QUAD’ 등, 일본이 먼저 제창한 지역질

---

37 Abe, S.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검색일: 2022. 4. 22.).

서 구상에 미국이 호응해서 이 지역의 국제질서 재구축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외압반응형’의 국가에서 ‘선제주도형’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3-4. ‘9조’와 ‘미·일 안보’의 매트릭스: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론’

이상 존재와 목적으로 구성되는 일본 국가행동의 본질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구상을 안보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의 중첩 속에서 확인해 보았다. 이제 존재와 목적, 인식의 외화로 나타나는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들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일본 국가의 대외행동이 나타내는 연기(performance), 즉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론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기지국가의 현실, 즉 ‘9조-안보체제’에 대한 대응의 유형화로 가능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에야는 헌법 제9조와 미·일 안보조약을 두 축으로 하는 전후 일본의 외교, 방위,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 틀을 ‘9조-안보체제’로 불렀다.<sup>38</sup> 이 기본 틀로 인해 ‘전후레짐’으로서 헌법 9조 개정 여부는 필연적으로 ‘미·일 안보’에 대한 태도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미·일 동맹으로 보완해 온 역사가 기지국가로서 살아온 전후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헌법에 대한 태도’와 ‘미·일 동맹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8 添谷芳秀, 앞의 책 (2016b), p. 12.

즉 ‘헌법 수호-동맹 해소’의 평화주의자들의 공간, ‘헌법 개정-동맹 해소’의 국가주의자들의 공간, ‘헌법 수호-동맹 강화’의 자유주의자들의 공간, ‘헌법 개정-동맹 강화’의 현실주의자들의 공간 등이다. 이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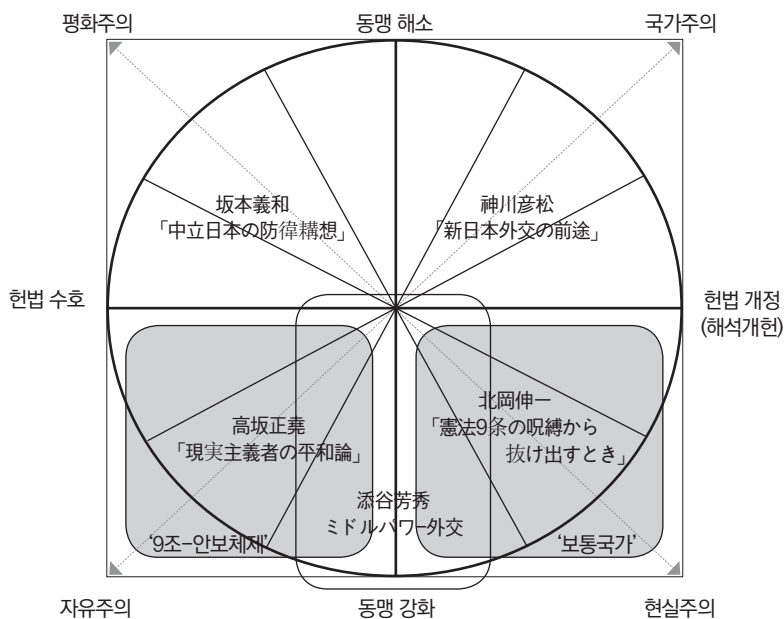
여기에서 ‘헌법 수호-동맹 강화’의 공간이 일본의 삶, 즉 기지국가로서 일본 국가행동의 ‘존재론’의 영역이다. ‘헌법 개정-동맹 강화’의 공간은 일본의 꿈, 즉 보통국가로서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의 영역이다. 보통국가화는 기지국가로부터 보통국가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이른바 ‘우경화’란, 안보담론이 평화주의에서 자유주의, 그리고 현실주의로 이동하고, 나아가 국가주의로 이행하려는 현실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꿈에 평화주의자의 꿈과 국가주의자의 꿈이 있으며, 이들 꿈이 현실주의자의 꿈인 보통국가의 대항 담론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

---

39 이하는 남기정, “자위대에서 군대로?: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일본연구논총』 제43호 (2016a), pp. 156-158을 재구성한 것이다. 남기정 외에도 일본의 안보담론을 매트릭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무엘스, 로즈만, 파일, 모치즈키, 하라타 등의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무엘스는 ‘미국과의 거리’와 ‘군사주의 여부’를 두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 Samuels, “Securing Japan: The Current Discours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33 No.1, 2007, p. 128; 최은미, 앞의 책, pp. 113-114). 즉 미·일 안보에 반대하며 군사적 기여 또는 관여에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pacifist), 미국과의 협력에는 찬성하지만 비군사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중견국 국제주의자(middle-power internationalist)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위해 군사적 역할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통국가론자(normal nationalist), 미국에 대해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안보 대국을 지향하는 신-자주국방론자(neoautonomist) 등이 그것이다. 또한 파일은 진보주의자(progressives), 중상주의자(mercantilists),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자(liberal realists), 신현실주의자(new realists) 등으로 유형화했다.

〈그림 1〉 일본의 전략 구상 공간



맹 해소를 통한 자주국가의 꿈이 비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꿈은 몽상에 가까운 것이다.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고사카 마사타카, 기타오카 신이치, 가미카와 히코마쓰(神川彦松) 등은 네 가지 안보 담론을 각각 대표한다.

사카모토는 대표적 평화주의자다. 그는 1959년에 발표한 논문 「중립국가 일본의 방위구상(中立日本の防衛構想)」에서 핵시대의 중립국가 방위 구상을 전개했다. 즉 미·일 동맹하에서는 미·소 간 전면 핵전쟁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가 동원되는 국지전에서도 “일본의 모든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경고하고, 미·일 동맹론과 비무장중립론에 대신하는 제3의 길로 중

●

립적인 국가들이 제공하는 부대로부터 UN 경찰군을 만들어 일본에 주둔하게 하고, 경찰예비대 정도로 축소한 자위대를 UN 경찰군의 보조부대로 참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사카는 「현실주의자의 평화론(現實主義者の平和論)」을 발표하여 사카모토의 논의가 전면 핵전쟁이나, 전술핵의 국지전만 상정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래무기에 의한 침략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방어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이 극동에서 세력균형 상태를 만들어 전쟁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다.<sup>40</sup>

고사카와 비슷한 시기 현실주의 안보론을 전개한 나가이 요노스케는 헌법과 안보의 이중구조를 현교(다테마에; 建前)와 밀교(훈네; 本音)라는 비유로 표현한 바 있다. 나가이는 요시다의 외교노선을 ‘요시다 독트린’으로 명명한 사람이다. 나가이는 요시다 독트린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입각해서 목표로서 동맹과 안보, 수단으로서 복지(경제)를 중시하는 입장을 요시다 독트린 이래의 ‘정교’라 이름 붙이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리얼리스트’라고 불렀다. 이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로 고사카 마사타카와 자신, 그리고 에토 신키치(衛藤瀧吉)를 들었다. 이에 비해 목표로서 자립 또는 독립을 내걸고 수단으로서 ‘군사’를 우선하는 사람들을 ‘신정교’의 신자들로서, ‘군사적 현실주의자’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가 포함되어 있다.<sup>41</sup> 위의 <그림 1>의 매트릭스에서 볼 때, 나가이는 경제를 중

---

40 初瀬龍平, 「総論」, 初瀬龍平 (他編), 『国際関係論の生成と展開: 日本の先達との対話』(ナカニシヤ出版, 2017), p. 20.

41 永井陽之助, 『現代と戦略』, 文藝春秋, 1985, pp. 18-21; 村田晃嗣, 「リアリズム: その日本的特

시한다는 점에서 고사카와 함께 자유주의자의 영역에 속하며, 그가 정식화한 신정교주의,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영역은 <그림 1>에서 현실주의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찍이 평화주의자에서 국가주의자로의 변신을 시도했던 인물이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다. 그는 1980년에 『쇼쿤(諸君!)』에 「핵의 선택: 일본이여 국가가 되어라!(核の選択: 日本よ, 国家たれ!)」를 발표하여, “전후의 일본은 국가(군사력)이기를 그만두고, 사회(경제활동)가 되었다”고 단정하고,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의존에서 자립해서 다시 ‘국가’가 될 것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시미즈는 일본에서 ‘전후 평화주의’의 기원이 되었던 ‘평화문제담화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지식인이었다. 평화주의로부터 국가주의로 전향한 것이었지만, 안보조약 반대, 반미의 입장에서는 일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반미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일본 사회에 수용되지는 못했다.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담론이 평화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이행하는 매개로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의 ‘글로벌 시빌리안 파워’론이 있다. 1990년대 초 후나바시는 일본이 지향할 새로운 국가정체성으로 ‘글로벌 시빌리안 파워(글로벌 시민국가)’론을 전개했다. 1999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수상이 설치한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이를 일본이 취할 노선으로 채택했다.<sup>42</sup>

냉전 붕괴를 계기로 평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영역이 중첩되고, 이를 통해 자유주의의 영역이 확장되던 시기, 종래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보였던 공간

徵], 『日本の国際政治学1: 学としての国際政治』(有斐閣, 2009), pp. 51-52.

42 添谷芳秀·田所昌幸·デヴィッド·A·ウェルチ, 앞의 책, p. 112, 3장 각주 10, 11.

은 현실주의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현실주의 담론으로 보통국가론이 정식화되었다. 그 대표 주자가 기타오카 신이치다. 기타오카는 헌법 제9조의 전반(1항)과 후반(2항)을 나눠, 1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면서, 병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1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평화주의의 규정인데 비해, 2항은 엄밀히 말하면 비군사주의의 규정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도 힘든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기타오카는 UN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라도 각국은, UN이 독자적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UN에 차출할 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sup>43</sup> UN에 의한 평화를 위한 병력보유론이라고 할 수 있다. UN이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논리는 '미·일 안보에 의한 평화와 이를 위한 병력 보유'로 대체된다.

한편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楯彦)는 일본형 현실주의가 전후 평화주의라는 이상주의 국제질서관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유지와 강화에 매달리게 되면서, 동맹 자체를 대상화하는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본래적 시점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sup>44</sup>

이에 반해 국가주의 안보담론은 원론에 충실한 이론으로 등장했다. 일본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소수자로서 국가주의적 안보담론의 대표주자인 가미가와는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 미·일 행정협정의 세 조약이 동시에 발효되자, 이를 통렬히 비판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가미가와는 이 세 조약의 발효로 일본 전토가 미국의 기지로서 식민지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아직 일본이라는 것이 지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국의

43 北岡伸一, 「憲法9条の呪縛から抜け出すとき」, 『This is 読売』(1999. 3.).

44 豊下楯彦, 『安保条約の論理その生成と展開』, 柏書房, 1999, p. 28.

식민지의 지위에 처한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진실한 자주 독립을 향유하는 일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sup>45</sup> 그 연장에서 그는 국제정치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미군 철수와 일본의 자주방위를 주장하게 되었다.<sup>46</sup>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주의 안보담론을 주장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였다. 그는 국가개조를 위한 ‘혁명’에 직접 나서면서 격문(「檄」)을 발표하여 미·일 안보 조약하에서 “일본인은 스스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는 것을 이를 갈며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일갈하고, 일본이 자주적 군대를 갖고 스스로 국토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위대는 영원히 미국의 용병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자주국방의 독립국가’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1970년 11월 25일). 그러나 아무도 이에 호응하지 않자 미시마가 방위청에서 자결로 목숨을 마감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다.

일본이 ‘대미 종속의 굴욕’에서 벗어나 미·일 동맹을 해소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나아갈 경우, 핵무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의 보수우익 진영 최고의 논객이었던 니시베 스스무(西部邁)의 안보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니시베는 『보수의 유언(保守の遺言)』에서 전후 일본이 ‘평형각각으로서 전통을 포기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위’로 말미암아 독립국가로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전후 일본이 대미 종속

45 神川彦松, 「半独立日本の外交」, 『改造』(1952. 8.), p. 72.

46 神川彦松, 「新日本外交の前途」, 『実業之日本』(1953. 1.), p. 70; 上野友也, 「神川彦松: 独自の国際政治学の体系化を目指して」, 初瀬龍平(他編), 『国際関係論の生成と展開: 日本の先達との対話』(ナカニシヤ出版, 2017), p. 90.

의 굴욕 속에서 안전과 생존을 얻었는지언정, 이로 말미암아 전후 일본인의 자립심과 자존심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편, 니시베는 전쟁(침략)이 언제나 예측 가능한 위험(리스크)으로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기(크라이시스)로서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장은 “강력한 위협의 도구”로서 국제질서의 중심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즉 니시베가 보기에 핵무장을 터부시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일본의 대미 종속을 영구화하는 일인 것이다. 당연한 결론으로 니시베는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방군 창립과 핵무장 준비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선언했다.<sup>47</sup>

자주독립의 정신은 냉전체제하 미·일 안보체제에 포섭된 뒤 꺼져가는 장작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의 욕망은 대미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대미자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일 안보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의 주권과 자주독립을 확인하려는 헌법 해석이 등장했던 것이다. 대미 종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 개정의 의지가 살아남아 있는 한, 나아가 그것이 자주헌법 제정의 의지로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태는 불가피했다.<sup>48</sup>

탈냉전을 배경으로 1994년 무라야마 내각이 등장해서 사회당의 노선을 자위대 합헌과 미·일 안보 용인의 방향으로 크게 전환한 것은 좌로부터의 9조-안보체제 해체를 시도했던 노력이 9조-안보체제로 흡수되었던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일본의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아베의

47 西部邁, 『保守の遺言』(電子書籍版)(平凡社, 2018), pp. 44-49, p. 250.

48 佐藤太久磨, 「自主憲法の精神, その起源と揺曳」,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第105号(2015), p. 91.

‘우’로부터의 해체 시도 역시 다시 9조-안보체제로 수렴하고 있다. 소에야는 이러한 상황을 ‘우’로 기운 채 균형이 깨진 상황으로 인식하고 9조-안보체제의 폐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제3의 길을 구상하고 있다.<sup>49</sup>

소에야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이란, 좌우의 대립을 넘어선 것으로, 우파의 역사관을 극복하여 침략전쟁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좌파의 일국평화주의를 극복하여 국제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안보 태세는 한국, 호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과의 미들파워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일본 스스로의 방위력과 미·일 안보 메커니즘 정비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sup>50</sup>

## 4. 결론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장기집권을 거치면서, 요시다 노선의 일본에서 아베 노선의 일본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는 요시다 스스로 자신의 노선을 정당화했던 진자이론에 따르면 진자추가 자유주의적 국가노선의 상한에 다다른 뒤 후퇴하면서 국가주의 국가노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요시다가 부정하고 극복하려 했던 노선이다. 그것은 요시다가 ‘악마의 자식’이라며 거침없이 증오의 감정을 표출했던 도조 히데

---

49 添谷芳秀, 앞의 책 (東京: NHKブックス, 2016), pp. 208-210.

50 위의 책, pp. 210-218.

키의 노선이다. 요시다가 보기에, 영국과 미국 등 이른바 해양세력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에 스스로 맹주가 되는 독자적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귀축미영(鬼畜米英)’을 적으로 한 동아시아 침략전쟁에 돌입했던 천황제 파시즘의 국가를 해체하고, 다시 세계사의 주류인 해양세력과 함께 하는 자유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이라고 하는 정치의 암을 절개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sup>51</sup> 1946년 제정된 전후 헌법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요시다를 설계자로 하여 재구축된 전후 국가는 ‘9조-안보체제’의 국가였다.

이를 다시 <그림 1> 위에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패전 직후 일본의 정치지형은 <그림 1>의 윗부분에서 형성되었다. 큰 흐름으로 국가주의의 일본에서 평화주의의 일본으로의 이행이 시도되면서 만들어진 스펙트럼이 그것이다. 이는 냉전기 내내 진행되면서 그 사이의 진자운동의 결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그림 1>의 하단 좌측의 자유주의 국가로서 ‘9조-안보체제’의 국가였다. 이는 마치 변증법적 ‘정(正)-반(反)-합(合)’의 과정과도 같아서, 국가주의와 평화주의의 대립으로 만들어진 ‘정-반’의 전선에서 그 ‘합’으로 자유주의 국가가 생겨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냉전기 다시 ‘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탈냉전과 함께 이에 대한 반동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그것이 현실주의자가 이끄는 ‘보통국가’ 노선이며, <그림 1>의 하단 우측에 위치한다. 그 결과 탈냉전기 일본의 정치지형은 <그림 1>의 하단의 좌우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서 다시 ‘합’이 모색되고 있다. 앞서 소에야가 제시했던 ‘제3의 길’이 그것이다.

51 남기정,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과 리더십』, 손열 편,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EAI, 2013), p. 48.

실제로 쇼에야가 말하는 제3의 길은 아베와 기시다의 정책 노선의 수렴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아베는 미·일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국 안보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조 노력이 기본이지만, 핵억지력과 극동지역의 안정을 생각할 때,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결하다고 하여,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경제력,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sup>52</sup> 나아가 개헌은 미·일 동맹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불가결하며, 자위대를 둘러싼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이미 성숙 과정에 들어섰기에,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53</sup>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의 완결판으로 『새로운 나라로(新しい国へ)』를 2012년 간행했는데, 여기에 마지막 장을 추가하여 헌법 개정 의욕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 의지는 납치일본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단호한 어조를 보였다. 즉 일본국 헌법이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여,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의 필요성을 집단적 자위권 해석의 변경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그 예다.<sup>54</sup> 이와 같이 아베는 “일본을 되찾는다”는 구호하에, “전후의 역사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를 일본 국민의 손에 되찾아 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위해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sup>55</sup>

스가 내각에 이어 등장한 기시다 내각은, 본래 그의 정책그룹이 자민당

52 安倍晋三, 『美しい国へ』(キンドル版)(文春新書, 2006), p. 103, p. 185.

53 위의 책, p. 115, p. 185.

54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 完全版)』(キンドル版)(文春新書, 2013), p. 2684, p. 2738.

55 위의 책, p. 2701, p. 2738.

내에서 아베의 정책그룹과 대립되는 정책 지향을 갖고 있었음에도, 아베 내각이 만들어 놓은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자신의 저서 『기시다 비전(岸田ビジョン)』에서 자신이 속한 파벌 고치카이(宏池会)의 존재 의의에 대해 “고치카이는 헌법 9조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데 땀 흘려 노력해 온 정책집단”이라는 자부심을 피력했다. 고치카이의 원류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다. 재군비를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경무장 경제 중심 노선을 관철시킨 요시다와 이케다가 요시다 독트린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시다에게서는 리버럴파의 대표 주자로서 전후 보수의 원류, 보수본류의 긍지를 엿볼 수 있다.<sup>56</sup>

고치카이가 배출한 총리 가운데 기시다가 특히 강조해서 언급하는 것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총리의 리더십, 그리고 스즈키 내각의 연기였다. 미야자와 총리는 ‘세계평화질서에 대한 공헌’을 내걸고 국회에서 PKO법안 성립을 이끌었고, 그보다 전에 오히라 총리는 군사 면뿐만 아니라, 경제, 에너지, 식량, 방재 등을 포함한 ‘종합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구축했으며, 스즈키 내각에서는 9명의 대신으로 구성된 ‘종합안전보장관계 각료회의’가 설치되었다. 기시다도 고치카이가 배출한 총리들이 모두 ‘헌법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일본 정치사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또한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충실하면서 엄혹한 국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그 현실적 논의의 선두에 설 각오를 피

---

56 岸田文雄, 『核兵器のない世界へ: 勇気ある平和国家の志』(Kindle版)(日経BP, 2020), pp. 735-880, p. 2938.

력했다.<sup>57</sup> 그런 한편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독자외교를 견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는 이를 좌우 두 바퀴로 비유했다.<sup>58</sup>


그런 기시다가 아베를 현실주의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아베가 “매파로 내셔널리스트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베 총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정치 리더”라고 평가하고, 헌법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통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헌법 관련해서는 아베는 ‘개헌’, 기시다는 ‘호헌’의 입장에 있지만, 아베 총리가 헌법의 ‘평화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만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민당 개헌안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의 ‘호헌’은 ‘헌법 9조 유지의 호헌’으로, 이를 골격으로 남기는 개헌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헌법 제9조의 1항과 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시다의 입장에서 아베는 내셔널리스트가 아닌 리얼리스트이며, 이러한 아베라면, ‘친미 리버럴 보수’를 신조로 하는 기시다와 협력이 가능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아베와 기시다의 상호침투는 요시다 노선과 아베 노선의 수렴이다. 그 수렴은 전후 정치의 ‘정-반’ 사이의 ‘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행동하는 일본’이 완성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아베에 의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기시다에 의한 헌법 개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 의미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의 등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 의 일상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며 ‘행동하는 국가’ 일본이

57 岸田文雄, 『岸田ビジョン: 分断から協調へ』(Kindle版)(講談社, 2021), p. 70, p.199.

58 위의 책, pp. 73-74, p. 199.

59 岸田文雄, 앞의 책 (日経BP, 2020), pp. 973-1083, p. 2938.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전자의 일본이나, 실제로 '대응해야 할 상대'는 후자의 일본이다.





---

Part

# 02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재구성:  
탈냉전 시기 미·일 안보 거버넌스와 수상 자문그룹의 역할**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서론

2. 일본 수상 자문그룹: 미·일 협력과 보수주의 평화헌법 담론

2-1. 수상 자문그룹

2-2. 헌법 개정론과 일본 보수주의

2-3. 평화헌법의 전략적 가치와 미·일 동맹

2-4. 인도·태평양 전략

3. 결론



---

##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미국이 점령국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1946년 제정 공포한 소위 말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그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평화헌법 제9조, 즉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일본의 무력 사용을 영원히 금지하는 조항이다.

「일본국 헌법」 제2장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sup>1</sup>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이론은 근대국가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하지만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미군정 기간 평화헌법 제정은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이라는 이론적, 경험적 전제를 깨고 전후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즉 정규 군대 없는 국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전쟁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국가통합의 가

---

1 김영일·김유정, “일본 헌법 제9조 해석 변경의 배경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886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4).

장 원천적인 수단인 폭력이 박탈된 패전 국가 일본은 전후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식적인 무력행사의 권한 없이 제한된 전수방위 원칙만으로도 외교적 협상력과 국가적 통합 그리고 응집력 있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왔다.

저명한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은 통산산업성(通商産業省,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성공적인 발전국가모형을 분석하고 일본의 경제관료 집단과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 리더십 그리고 국가발전모형을 성공적인 국가통합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했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경제관료 중심의 지배 구조와 근대국가발전모형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역할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좁은 의미의 획일적인 국가 리더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제관료들 역시 비즈니스 리더들의 로비와 때로는 저항으로 그들이 의도하지 못했던 제한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관료사회와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정치·경제적 목적이 빈번히 좌절됐다는 사실을 많은 미국의 기밀문서들이 보여 준다.<sup>3</sup>

---

2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3 Department of State: Airgram (Subject: Specified industries Bill Fails of Passage for Third Time), Embassy Tōkyō. “The controversial bill entitled Provisional Law for the Promotion of Specified Industries, presented for the third time to the last session of the Diet, was caught in the legislative log jam and again failed to pass … [I]ts failure to pass was primarily due to the ambivalent and half-hearted support for the bill in the Japanese business community. Important elements in the business community suspect the real purpose of the bill is to perpetuate the power of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to control and regulate industry and trade, which it is losing with liberalization … the bill’s stated purpose was to ‘modernize’



일본을 다년간 경험한 언론인 카를 반 볼페렌(Karel van Wolferen)은 1980년대 까지 서구의 수많은 무역 상대국들을 압도하는 일본의 놀라운 정치적, 문화적 통합 능력, 그리고 이는 경쟁력 있는 경제 발전과 성장 그리고 급속한 수출시장 확대 등 효율적인 발전국가모델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독특한 경쟁력과 통합적인 국가모델은 수많은 서구 학자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볼페렌에 따르면, 성공적인 발전국가모델인 일본의 정치 문화와 리더십을 선도하고 창조하는 힘의 원천은 사실상 실체를 알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무정형의 사회적 세력이다.<sup>4</sup>

그렇다면 전후 일본은 어떻게 근대국가의 보편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 없이, 즉 보통의 주권국가가 누릴 수 있는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 능력 없이 정당하게 국가의 권위를 확보하고 국가 간 협상과 외교를 수행할 수 있었는가? 평화헌법하에서 전후 일본은 어떻게 통합된, 안정적인 정치 구조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일본 시민사회로부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1950, 1960년대 평화헌법에 대한 논쟁과 극심한 이념 논쟁의 혼란기를 겪은 후 일본 수상 자문그룹은 전후 평화헌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하고,

---

Japan's industrial structure and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o meet the challenges following trade liberalization. Industries falling within the purview of the bill included automobiles, automobile tires and tubes, petrochemicals, special steel, synthetic fibers, steel alloys, and electric wires." (July 9, 1964).

4 van Wolferen, K.,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New York, NY: Vintage Books, 1990), p. 1-49.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역할을 새롭게 강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문그룹 구성원들은 전후 혼란기 일본 사회의 새로운 통합의 비전과 미·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전략과 발전모델을 수립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장에서는 우선 자문그룹이 자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되는 과정으로서 헌법을 국가 통합과 미래 비전 그리고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이를 수호하여 보수 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키는 과정, 즉 냉전 이후 새로운 국가 재건과 국제 담론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수상의 자문그룹이 전후 헌법적 구조와 미·일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본이라는 국가를 독점적 폭력 행사의 ‘대리적인’ 주체로 재확인하고 미국이 재구성한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의 구조적 조건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한다. 전후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당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으로 평화헌법의 전제 혹은 수호를 통해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적 의미로 재생산하고 이는 국가의 폭력적 지위와 정당성을 재창출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상 자문그룹의 공고화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탈냉전 시기에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본 평화헌법은 여전히 미·일 상호의존의 중요한 구조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점증하는 미·중 갈등, 비전통적인 위협의 증대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일본 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수상 자문그룹의 변화/공고화 하는 전략적 사고와 역할을 조명한다.

## 2. 일본 수상 자문그룹:

### 미·일 협력과 보수주의 평화헌법 담론

#### 2-1. 수상 자문그룹

2013년 자민당 아베 신조 제2차 내각에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신설한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기초하여 전쟁을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하에 미국의 CIA 혹은 NSC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 부서나 별도의 상설 안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 취임 후 수상 자문그룹은 NSC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령탑의 구성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 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Japan)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그리고 방위상이 참여하는 상설 기구이며 그 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초대 사무국장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제도화와 법제화를 이끌었던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외무성 차관이 임명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상 자문그룹이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탑 기구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그 좌장인 야치가 안전보장 사무국 수장에 임명됨으로써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전의 자문기구 좌장들은 많은 경우 수상의 브레인 트러스트로 국가 미래 비전과 안보 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으며 이들의 역할은 자민당 주류 사회의 담론, 다시 말하면 전후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교육과 역사 인식을 포함해 요시다 라인의 핵심적인 국가모델과 국가전략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구체화해 왔다는 것이다. 해양국가론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경제 중심 발전국가론은 대표적인 일본의 대전략으로 그 일례이다.<sup>5</sup>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늘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보수 자민당 정권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문그룹은 크게 4개의 사회적 그룹들이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참여한다. 곧 ① 정치인(수상과 내각 관방장관을 포함한 관료와 내각 혹은 의회 구성원), ② 영향력 있는 유력 언론인, ③ 사회과학자(대학교수), ④ 비즈니스 리더들이다. 이들의 지속적인 자문그룹 참여는 사회 정치적 리더십의 탑 라인을 형성하면서 전후 일본 사회 구조의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collective governance). 예를 들면, 사회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컨설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들의 정당성 있는 정책 결정은 대중적인 퍼포먼스의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이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전체 사회와 공유하게 된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발전적 근대화 과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패전 후 경제발전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요시다 라인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경제 관료들과 함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요약하자면 국가 거버넌스의 전문적 지식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 즉 사회과학자들(대학교수)이

5 高坂正堯, “海洋国家日本の構想”, 『中央公論』第79卷 第9号 (1964), pp. 48-80; 北岡伸一, “海洋国家日本の戦略: 福沢諭吉から吉田茂まで” (防衛庁, 2019).

중산층의 핵심적 가치와 이상인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담당하는 전문직들(정치인, 비즈니스맨, 언론인, 의사, 법률가, 과학자 등등)을 대학을 통해 배출하고, 이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공유하는 사회과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 지배구조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4개의 주된 그룹(정치인, 언론인, 사회과학자, 비즈니스 리더들)이 일본 전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후 냉전 시기에 미국이 일본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그들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인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으며 어떻게 전후 폭력에 대한 독점을 상실한 일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국가의 권위를 재구성할 수 있었을까?

## 2-2. 헌법 개정론과 일본 보수주의

일본 전후 최장기간 자민당 총재와 수상을 역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재임: 2006~2007, 2012~2020)는 그의 재임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1945년 패전 후 1947년 미군 점령 시기에 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재임: 1957~1960)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A급' 전범으로 분류 되었지만 이후 연합국 총사령부(GHQ/SCAP) 당국에 의해 석방된 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했던 전직 총리였다. 아베는 2013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 한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중국의 부상과 그 행동이 날로 공격적임을 고려할 때 아직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믿을 만하다고 여집니까, 아니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믿고 그 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아베는 중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일본에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에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2015년 9월 아베 내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가능토록 하는 안보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전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법제화했다. 전후 역대 보수 자민당 총리들이 기시 노부스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아베 신조(安倍晋三)뿐만 아니라 관료적 성향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그리고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자민당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헌법 개정이 보수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일본 보수 세력(수상 자문그룹까지도)을 하나의 통합된 그룹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냉전기에 급박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동서 군비경쟁이 최정점을 지날 때조차도 이들은 전적으로 통합적이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정치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국가적, 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기에 자문그룹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비전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냉전기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사회적 역할의 정형화된 정체성에도 불

구하고, 냉전이라는 틀이 붕괴되면서 미·일 관계를 비롯해 냉전기에 당연 시되던 일본이라는 국가의 역할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이익 그리고 행동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근간을 이루는 이슈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1946년 평화헌법이었다. 헌법 개정 논쟁은 연합국 점령 기간이 끝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은 그동안 국가들의 행동, 의도, 이익, 정체성 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왔던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을 불러왔고,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준의 깊고 넓은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그 상징적인 예가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불분기 시작한 역사논쟁이다. 이는 새로운 국제적 환경 속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이익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과거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이해하고 규범적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즉, 과거 국가의 정당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평가와 재정의의를 통해 국가가 견지해야 할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세우고 미래의 협력과 공존을 위한 구조적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헌법 개정 움직임의 득세는 이러한 새로운 불확실성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며 새로운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국가적 정체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고 미·일 안보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냉전 중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일관된 미·일 안보협력의 논리적 토대였다. 최근 2022년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역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전략문서'를 개정하여 이러한 추세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기시다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했다. 헌법 개정과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노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미·일 동맹과 협력을 더욱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기시다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론과 미·일 협력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신 패권 이론에 바탕을 둔 지배구조 공고화(hegemonic domination)의 측면에서 분석한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는 미·일 관계의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행위 패턴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예를 들면, 전후 보수자민당 정권의 절대적인 리더십과 확고한 미·일 동맹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헌법을 개정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 2-3. 평화헌법의 전략적 가치와 미·일 동맹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 수상 자문그룹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던 소에야 요시히데는 당시에 전후 미·일 협력을 주창해 왔던 '미·일 협력파'들의 최대 특징은 일본을 둘러싼 주변의 우호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구조적 힘을 일본의 전후 부흥과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소에야는 요시다 시게루와 이케다 하야토 등 미·일 협력파(협조파)들이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사토 에이사쿠 등 자주 독립적인 일본을 기치로 내걸었던 단기 전략적 친미 세력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정치 경제구조를 형성한 미국의 힘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세력들이라고 간주한다. 반면에 대미 자주파들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패권적 틀 안에서 일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독자성과 자율성의 한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sup>6</sup>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단기 대미 협력은 일본이 부국강병을 통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시기까지의 협력을 의미한다.

보수 자민당 정치가들과 더불어 전후 지식인들, 즉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강성 보수 문학 비평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지식인이자 전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등 보수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헌법 개정론 역시 ‘일본 자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탈냉전 이후 정치적 담론의 장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켜 왔다. 이들의 담론 역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주적 일본(“Japan That Can Say No”)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보수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에토 준(江藤淳) 역시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대표적인 헌법 개정론자로 보수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대표적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 등의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다른 지식인들과 달리 에토는 나카소네 수상 재임기에 교육 개혁과 국정 분야에서 전반적 자문그룹 멤버로 활동하며 정부의 미래 전략과 정책에 심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는 패전 후 점령기 미군이 제정한 평화헌법은 일본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령기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추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주권적 독립 헌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6 添谷芳秀, 『日本外交と中国』(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97), p. 256-257.

이러한 대중적 논리의 대두와 점증하는 인기는 한편으로 억압받던 개인의 자유와 인권으로 대표되는 냉전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러한 동서 냉전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받던 개인을 동원하여 냉전 기간에 또 다른 전쟁(즉, 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적 회복과 부흥 그리고 전전부터 이어져 온 서구와의 근대화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재창출했던 에토와 다른 비슷한 수상 자문그룹(사회과학자들)의 반제국주의 의식 속에서 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냉전기 일본의 근대화론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들, 즉 에토를 비롯해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 이노키 마사미치(猪木正道), 고사카 마사타카 등 현실주의를 대표했던 지식인들은 미·소 대립으로 만들어진 억압적이고 폭력적인(냉전)구조를 생산성 결여와 시장경제 비효율성의 원천으로 간주하며 열린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와 개인주의를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시장 확대와 성장의 원천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권의 부정, 즉 국가 간의 열린 교역과 상품, 사람, 지식, 돈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하는 요소는 최대의 장애 요인이었다. 특히 전후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다시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은 미국의 냉전 봉쇄정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공산 진영과의 국지적 충돌과 지속적인 반공 봉쇄정책으로 일본의 에너지, 원재료 등의 자원네트워크(공급망) 구축 그리고 상품 교역 시장의 형성에 지속적인 방해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냉전 시기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전 수행 가능성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일본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시나리오였으며, 한편으로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일본 주권론 혹은 자주권은 가장 핵심적인 방어 이데올로기였다. 점령기 헌법 제정으로 전후 재무장이 금지된 패전국 일본에게

●

는 핵전쟁이 미·소를 상호 전멸시킬 수 있는 단계(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이른 것은, 전면전 가능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미국의 국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상시적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했다. 일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 미국의 봉쇄 정책과 이로 인한 공산 진영과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특히 한반도를 필두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국지전쟁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폭력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안보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며 전쟁할 수 없는 일본이 항시 대비체제를 갖추기 위해 경제안보를 적극 추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본의 미국 대리전 수행 가능성을 우려한 중도 보수우파 지식인 자문그룹 멤버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을 대변한 이노키 마사미치, 전후 일본 국가전략과 비전의 핵심 설계자였던 고사카 마사타카 등은 일본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일본이 미국의 창(槍)이 되어 대리전을 수행할 것인지, ② 아니면 미국의 힘을 방패로 경제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것인지이다. 이들은 패권국 미국과 일본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현재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치(지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내-국제정치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대리전 수행 가능성의 증대와 일본 재무장은 당연히 전전의 국수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미국이 제정한 평화헌법 수호를 통해 재무장 가능성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차단하고, 일본의 국익에 따라 헌법을 재해석하여 특정한 시기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본이 추구할 수 있는 대전략이었다. 미국은 냉전 초기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곧

평화헌법에 의한 비무장 일본이 유연하게 최소한의 군사적 역할과 비용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열린 국제 자유주의와 인권(인도주의), 제3세계 개발과 원조를 통한 국제 시스템의 안정 등 평화헌법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인권과 국제 자유주의)와 연동하여 보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국제 자유주의 질서의 추구는 강대국의 패권적인 이익과 의도, 지배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일본의 국가적 자율성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방패삼아 미·일 관계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동아시아의 정치적 환경과 구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 없는 일본은 미국과 국익의 일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은 곧 일본의 군사력과 동일하다는 방정식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외교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화헌법으로 제거된 무력 사용의 권한을 미국이라는 더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서 미국과 미국의 힘을 외교정책 실현과 협상의 도구로서 정의하며 시민사회를 설득했다. 이러한 중도 보수의 호헌론(혹은 자주 독립파의 단기적인 미·일 협력론, 즉 헌법 개정 전단계로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진보 세력들의 도덕적인 평화헌법 옹호론과 다른 의미를 노정하지만 공통으로 헌법 수호론을 통해 비폭력적인 발전국가와 전후 근대화모델을 재생산해냄으로써 중요한 좌우 협치와 공존의 국내정치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비판적인 일본 보수 자문그룹 학자들은 미·소 냉전 구도와 미국의 봉쇄 정책, 군사적 개입을 전전의 제국주의와 동일시했다. 다시 말해서, 1930년대에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던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열리지 않은 폐쇄적인 일본 중심 시각의 대동아 공영권 그리고 이로 인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

일본 군국주의화의 원인이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개인들(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즉 역동적인 전후 근대화와 국가 개조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1970년대 초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의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발전론, 즉 지역과 소수자들의 권익을 강조하는 균등한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 통합과 안정, 제3세계 개발 등 평등하고 열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제사회의 건설을 역설하며 1970년대 중반 후쿠다 독트린으로 구체화된다.

#### 2-4.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은 2007년 아베 신조 수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이래로 이를 아시아 정책 구상에서 핵심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핵심 개념으로 채택하고 바이든 역시 이를 계승하여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중국에 대항하는 가치 동맹의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한다. 사실 벤 잭슨(Van Jackson)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미국의 힘과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이는 미국에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룩할 수 있었던 안정과 평화는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이익과 책임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전략적인 자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산이 없는 인도양으로의 확대전략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힘의 효율적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sup>7</sup>

일본은 탈냉전 시기에 미국을 활용하여 인도를 포함하는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를 통해 미들 파워 전략과 새로운 21세기 리더십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인도·태평양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력해 나간다. 일본이 구상해 왔던 아시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미들 파워 리더십과 안보체제를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핵심 이익과 일체화함으로써 확보하고,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 없이도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전략이다. 물론 평화헌법 개정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는 않다. 열린 인도·태평양과 자유주의 가치 동맹으로 일본의 미들 파워 리더십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조화로운 아시아 국제질서와 안보를 주창하고 이를 보다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틀로 강화하려고 한다. 인도는 중국 대안으로 아시아에서 시장과 경제 그리고 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의 리더십 구상은 1930년대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도 있었던 범아시아주의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제국주의자들은 근대화를 위한 리버럴리즘(liberal imperialism), 천황의 가족주의적인 리더십하에서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를 서구 제국주의와의 경쟁 모델로 구상했다.

도쿄대학 교수와 고쿠사이대학(國際大學) 총장을 역임하고 일본 동

---

7 Jackson, V., "America's Indo-Pacific Folly: Adding New Commitments in Asia Will Only Invite Disaster", *Foreign Affairs*, Snapshot (March 12, 2021).

남아시아 개발의 핵심 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수상 자문그룹의 좌장 기타오카 신이치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단순히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미·일 협력 안보 메커니즘이 아니라 일본의 (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경험과 독특한 발전전략(경제안보 전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해양 루트는 전전에도 일본에게 중요한 루트였으며 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 것이 대영제국과의 영·일 동맹이었다. 전후에는 이를 미·일 동맹이 보장했지만 미국의 힘도 부침이 있었고 중동의 정정 불안과 오일쇼크의 발생과 함께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도 증가했다. 예를 들면, 걸프 지역에 대한 개발 원조 제공, 9·11 테러 사건 이후 인도양에서 보급 지원 활동, 자위대 파견, 해적 퇴치 활동, 태평양과의 연결성 강화 등등이 있다.<sup>8</sup>

기타오카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가치는 자유로운 무역, 해양의 자유, 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의 지배이다. 이 지역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1950,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독재 국가로 분류되었고 그런 국가들의 민주화를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수카르노(Soekarno)의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를 서구는 ‘훈육받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서 조소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훌륭하게 자유선거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전후 배상으로 인프라가 건설되었고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

8 北岡伸一, “演題: 今後の日本の国際協力”(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0. 8. 28.), p. 63.

출 기업이었고 이들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근절이 절실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고, 고용을 창출했으며,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이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 구상은 긴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으며 장래에 지켜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동맹의 비전이다.<sup>9</sup> 기타오키는 평화헌법 구도하에서 미·일 협력이 이러한 가치 동맹의 구조를 지켜 나가고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고 역설한다.<sup>10</sup>

### 3. 결론

일본 수상 자문그룹은 전후 일본 정치 사회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는 핵심적인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쟁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전제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로 인식하고 일본 국가의 지위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왔다. 국가 간 갈등과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기에 공식적 여론 (public opinion) 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자문그룹 멤버들은 미국의 군사적 힘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그 틀 안에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이익, 의도 그리고 행동을 평화헌법 체계 속에서 (또는 평화헌법이라는

---

9 위의 글, p. 62

10 위의 글, p. 62

●

매개체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후 일본 사회의 주류 보수 세력으로 등장하고 탈냉전기에는 비전통적 위협의 등장과 정치 경제 군사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국가이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탈냉전 시기에 일본 수상 자문그룹의 구성은 냉전 시기에 비해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그룹 멤버들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도 더 이상 일체화되고 통합된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와 충돌하고 갈등, 대립하며 서로를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들의 존재는 지금의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하나의 정치세력에 의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에 직면하여 다양한 보수 그룹들이 경쟁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복잡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지금의 보수화 과정은 항구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단계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점증하는 국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자문그룹의 헌법 개정론은 자주 독립파(단기적인 미·일 협력과 부국강병)와 중도 미·일 협력파(장기적인 미·일 협력파) 등 보수 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구조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단기적으로 미·일 협력론에 있어서는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정학적인 한계와 평화헌법하에서 비무장 일본의 고착화로 인하여 미국이 형성한 지정학적인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이용하는 단기적인 미·일 협력은 일본의 대전략에 있어 일본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정치 공학과 환경적 특수성은 보수 헌법 개정론자들조차도 기술적으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 논의

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개정 여부를 떠나 보수 세력을 전체적으로 결집하고 개인의 역할을 국가발전의 목표 속에서 재구성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 보수주의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즉 개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여 국가 중심적인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의 격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성장,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와 위기는 일본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격화되는 중국,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경쟁관계는 민족주의, 즉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변영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우월성의 강조, 전쟁의 미화 등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일본의 도약과 통합된 사회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보수주의 동향과 더불어 자문그룹의 정치 사회적 담론에 드러난 일본의 미래 비전은 앞으로 일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 중의 하나다.

아베 신조와 같은 독립자주파의 득세와 그들의 헌법 개정론은 현재 일본 보수정치의 핵심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일본 보수주의는 중도 우파 미·일 협력파로 대변되는 헌법을 통해 미국이 디자인한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일본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본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세력들과의 미묘한 공존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한쪽의 힘과 영향이 더 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러한 세력이 다른 하나를 압도할 수 있는 보수 획일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 개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이러한 분화된(분열된) 보수의 완전한 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 서로

●

권력을 위해 경쟁하는 이들에게 전략적인 제후는 있을 수 있지만, 보수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획일적인 특정 보수 일변도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동아시아에 급격한 혹은 예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즉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안보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획일화된, 즉 재무장 일본을 추구하는 독립론자의 압도적 득세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힘과의 일체화를 통해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정당화하고 실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일본의 이익이 되어 버리며 결국 일본의 독자적인 국가이익 수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독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미 협력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오면서 미·일 협력의 프레임 속에 갇혀 버리고, 결국은 독립론자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약화하며 초기에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였던 미국이 이제는 목적이 되어 버리는 함정에 함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수주의자들조차도 이제는 미국의 힘을 일본의 국가이익 구조 속으로 일체화하지 않고는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를 상상할 수 없는 자가 당착의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미·일 협력파를 대변하는 중도 보수주의 사회 세력들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그 어느 두 국가도 똑같은 이익과 공유된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힘을 이용한 일본의 국가이익과 행동의 정당화 그리고 이의 구조적 고착화는 오히려 종속의 길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일본이 처한 이러한 제약적 구도에 더해 미국의 국방개혁 프로그램 스마트파워(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결합)는 이 민간 자문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 사회단체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미국이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간주하고 자문그룹과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

러한 민간의 역할을 분열된 자유주의 세계를 재통합 하는 데 있어 핵심 도구(civilian tool)로 활용하려고 한다. 즉 바이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강화 정책의 핵심은 격화하는 미·중 대립 속에서 미·일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정의하려는 미국의 강화된 노력이다. 미국의 의도는 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헌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헌법 수호를 통해서 등장했던 자문그룹의 힘과 역할을 약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미국이 의도했던 새로운 강화된 미·일 파트너십의 형성이라는 미국의 의도를 오히려 불안정화할 수 있다.

냉전 후 비전통적인 위협이 더 중요해지고 비폭력 분쟁 해결(Non-violent conflict resolution)이 주목받으면서 냉전 기간 미·일 관계를 새로운 협력과 파트너십 관계로 이끌었던 일본 수상 자문그룹이 수행했던 민간의 전략적 대화와 역할은 비전통적인 위협에 직면한 탈냉전기에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파워 콘셉트를 통한 안보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위협을 보다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군사적인 수단과 민간 레벨의 역할 분담을 통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 즉 리버럴한 타협의 메커니즘은 냉전 시기를 넘어 탈냉전 시기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자유주의로의 이행 단계를 의미한다.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일본 전문가 셰일라 스미스(Sheila Smith)는 저서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에서 일본 시민들은 국가가 보유한 군사적 힘이 의미하는 장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묘사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 역시 외교적 수단에 앞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식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런 스미스의 인상은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와는 상반된다. 1990년대 자위대의 PKO 활동,

대테러 지원법안 통과, 9·11 테러 사건 이후 이라크 파병, 일본판 NSC 창설,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적기지선제공격 능력 법제화 시도 등 일련의 시간적 사건들은 군국주의 역사 지우기 등과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sup>11</sup>

이에 대해 스미스는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과연 주변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혹은 적어도 헌법 제9조의 외교적 갈등을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미스가 보여 준 군사적 역할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자문그룹이 해 왔던 정치 공학적 역할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진보적인 사회 세력들이 해 왔던 반전, 평화운동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문그룹의 역할과 진보주의의 결합이 국수주의 헌법 개정론을 견제하고 이와 대칭을 이루면서 일본 사회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 온 중요한 사회적 결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구도는 당분간 급격한 동아시아 세력 구도의 변화나 충격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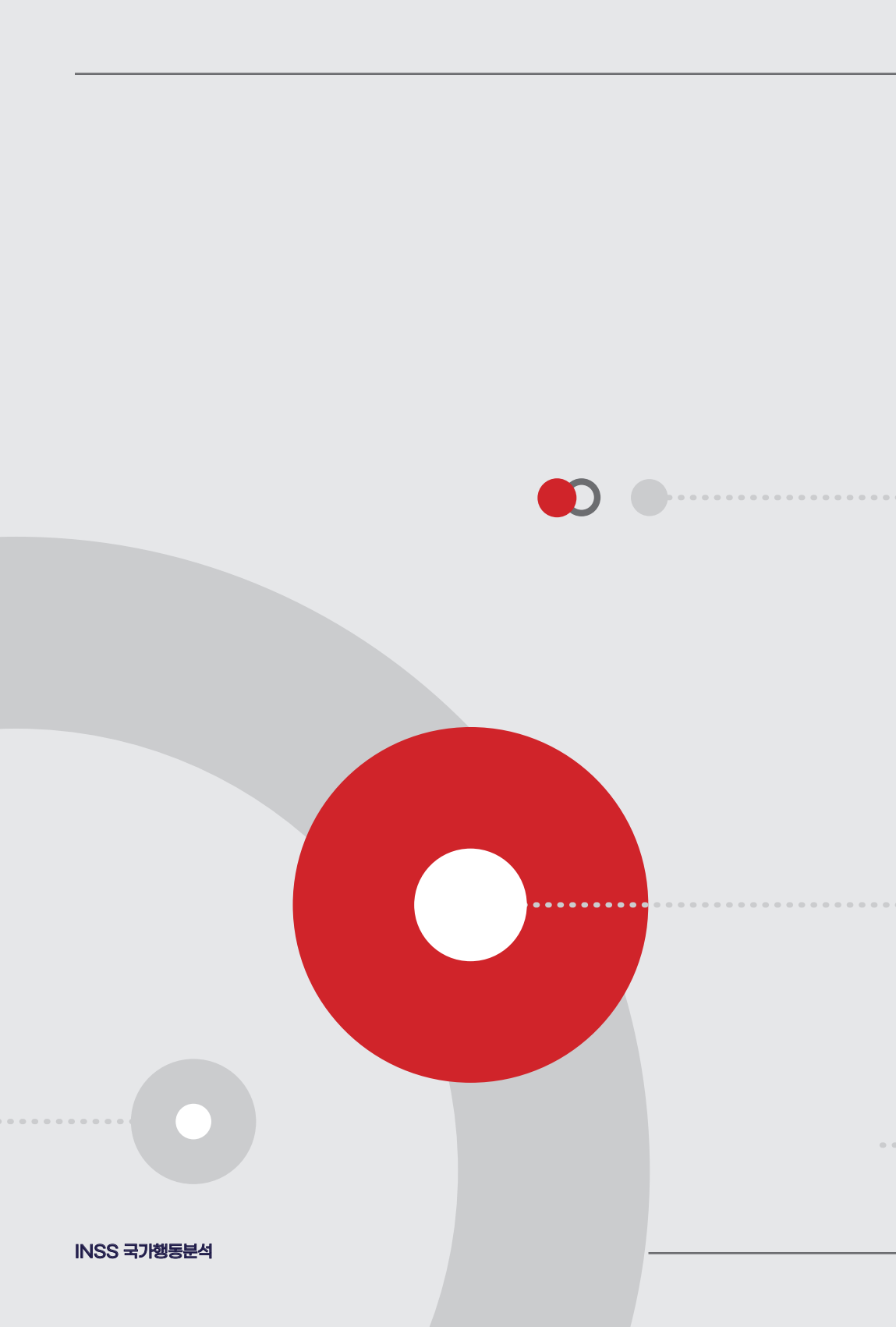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편으로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민간 레벨의 냉전 시기 비폭력적인 갈등 해소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간의 점증하는 역할 확대는 군사적

---

11 Smith, S.,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 1, p. 4.

12 *Ibid.*, p. 5.

인 역할을 중시해 왔던 독립론자들의 역할을 약화하고 동시에 협력적 동반자관계와 가치 동맹을 중요시하는 중도 보수 대미 협력파의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론자들의 일본 독립론은 국제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에서 그 역할의 제약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Part

# 03

##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의 특징과 함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역할과 내용 분석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1. 서론

#### 2.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의미와 역할

2-1. 간담회의 조직과 기능

2-2. 간담회의 역할

#### 3. 주요 시기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내용 분석

3-1.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3-2.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3-3.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3-4.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3-5.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 4.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 추이와 특징

### 5. 결론

## 1. 서론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북한은 일본 외교 안보에서 커다란 과제로 부상했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에 걸쳐 총 6차례의 핵 실험을 했고, 수십 차례에 이르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부근에 낙하했고 일본 정부는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다. 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일본의 안보불안을 자극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를 배경으로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제2차 내각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정책이 추진되었다.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핵심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外交靑書)』 2017년판의 특집,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에 처음 등장했다.

아베 수상은 201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서 실시한 기조연설을 통해 그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중요지역으로 규정하고, 2개 지역을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연결한 지역 전체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유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여 경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도 그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 있었다.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sup>1</sup>

이러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노선 관련 정책 및 외교노선의 결정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각 성청, 자민당 내 관련 연구회 등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및 구체적인 논리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수상관저 홈페이지에는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던 간담회의 시기와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고 간담회 구성원도 공개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정책의 구체성과 방향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 파악에도 중요한 1차 자료가 된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북한은 일본에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견제와 억지 차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지구 의를 부감하는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안보와 외교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안보정책의 흐름과 중국,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이에 대한 견제와 대응책 등이 정책 타당성 및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간담회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내용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간담회의 조직과 기능,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2004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에 있었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내용

1 남기정,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3) 일본의 아시아정책: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전개”, <https://snuac.snu.ac.kr/?p=33249> (검색일: 2022. 5. 2.).



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령 등에는 ‘간담회 등 행정운영상의 모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모임의 명칭에는, ‘간담회(懇談會)’, ‘연구회(硏究會)’, ‘생각하는 모임(考える會)’, ‘검토회(檢討會)’ 등이 있다.

‘간담회 등 행정운영상의 모임’은 행정기관의 사적인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내각법 및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해 정해진 심의회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간담회 의견을 참고로 정책 등을 결정하는 사례도 생겨 국회에서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간담회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1961년에 「간담회 등 행정운영상의 모임 개최에 대해」(1961년 4월 12일 행정관리청 행정관리국장 통달)에서, ‘간담회 등 행정운영상의 모임’은, “국가행정조직법상의 심의회 등과 다르며,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행정기관으로서

---

(예: 총무성설치법), 조직령, 조직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인 총무성설치법, 정령인 총무성조직령, 성령인 총무성조직규칙 등을 통해 총무성 소관 지방지분부국의 설치, 조직, 분상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19개 국가행정기관(부, 성, 위원회, 청)에 38개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무성의 경우 총무성설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지분부국은 관구행정평가국, 종합통신국, 오키나와행정평가사무소, 오키나와종합통신 사무소 등이 있다. 관구행정평가국은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행정평가지국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조직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지역명을 머리에 붙이는 경우도 (都, 부(府), 현(縣)을 빼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국세국(東京國稅局)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도쿄도교통국(東京都交通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의 기관이다. <https://www.gri.re.kr/%EA%B8%B0%ED%83%80-3/?mod=document&uid=812> (검색일: 2022. 2. 15.).

의 의사결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중앙성청 등 개혁의 일환으로 심의회 등 행정운영상의 모임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치 부여와 운영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1999년 4월 27일 「중앙성청 등 개혁 추진에 관한 방침」(각의결정 및 중앙성청 등 개혁추진본부 결정)에서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간담회는 “행정운영상 참고로 사용하기 위해, 대신 등의 결재를 거쳐 대신 등이 행정기관 직원 이외의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구하는 모임에서, 동일 명칭하에, 동일 인물에, 복수 회수, 계속해서 집합을 요청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sup>3</sup>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각 성청에 설치되어 있는 간담회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각 성청별 주요 간담회 조직

성청 명칭	간담회 명칭
내각	교육재생간담회/ 교육재생회의/ 교육재생실행회의/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유식자(有識者)회의
내각관방	전후처리문제간담회/ 특수법인직원상여에 관한 기본문제간담회/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관한 간담회/간부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일억총활약국민회의/일하는 방식개혁실행회의
내각부	고도정보사회에 관한 간담회/ 문화와 교육에 관한 간담회/ 문화외교 추진에 관한 간담회/ 평화문제연구회/ 경제정책연구회/ 황실전법에 관한 유식자회의/ 천황 공무의 부담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회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교육개혁국민회의
총무성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개발정책 간담회/ 인간과 고도정보사회를 생각하는 간담회/ 전기통신분야에 있어 세계 속의 일본을 생각하는 간담회/ 정주자립권구상연구회(定住自立圏構想研究会)

3 간담회의 정의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령(省令), 훈령(訓令) 등을 근거로 개최하지 않는다. ② “설치한다” 등의 항시적인 조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심의회, 협의회, 심사회, 조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간담회 등 정원 및 의결 방법에 관한 의사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 ⑤ 청취한 의견은 담신, 의견서 등 합의체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다.

성칭 명칭	간담회 명칭
외무성	UN 평화유지기능강화 연구회
재무성	3인위원회(금융문제 관련 의견 청취 목적)
문부과학성	차세대 교육을 생각하는 간담회/자녀를 지키고 키우는 체제 만들기를 위한 유식자 회의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장기전망간담회/ 국제협력간담회/ 생명과 윤리에 관한 간담회/ 특정질화대책 간담회/ 국립병원·요양소문제간담회/ 국보(國保)문제간담회/ 연금제도기본구상간담회/ 연금문제간담회/ 중국잔류일본인고아문제간담회/ 국민건강회의/ 전기사업 및 석탄광업에 관한 쟁의행위 방법규제에 관한 법률 조사회/ 노동관계법연구회/ 산업노동간담회/ 고용정책조사연구회/ 임금물가고용문제 간담회/ 공공기업체 등 노동문제 간담회/ 남녀평등취거전문가회의/ 고령화사회문제연구회/ 노동자참가문제연구회/ 노동기준법연구회/ 노동시간문제간담회
농림수산성	농업생산대책중앙회의/ 농지제도연구회
경제산업성	정보화월간추진회의/ 수출보험업무고도화위원회
국토교통성	'6개' 총점검·개수기술검토위원회/ 로드스페이스 간담회/ 첨단기술활용 간담회/ 고속도로 정비방법 검토위원회
환경성	지구적 규모의 환경 문제에 관한 간담회

## 2-2. 간담회의 역할

일본의 역대 정부 내 간담회의 주요 역할은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및 유식자들의 검토와 건의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총리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쟁론 가능성(contestability)의 보장이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던 시기, 일본 내에서는 안전보장정책의 근간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사적 자문기관으로 설치했던 '방위문제간담회'이다. 이 '방위문제간담회'는 좌장

인 아사히맥주 회장인 히구치 고타로를 중심으로 방위차관, 전 주미일본대사, 전 통합막료회의의장, 전 대장성 재무관 등 관료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1994년 2월에 발족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인사로 구성된 ‘방위문 제간담회’는 발족부터 약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1994년 8월에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 21세기를 향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수상으로 막 취임했던 무라야마 총리에게 제출되었다. 간담회 좌장의 성을 따서 이른바 「히구치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제목에서 나타나듯, ‘21세기’라는 시대를 겨냥한, 냉전 종식 이후의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을 구상한 것이라 할 있다. 이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와타나베 아키오 도쿄대학 교수는 1994년 2월 28일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방위정책의 전제로 되어왔던 생각을 다시 재고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라 했으며, 또한 초안을 만들기 이전에 간담회에 제출한 메모에서도 “냉전 후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지적 공백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협이다”라고 명기했다.<sup>4</sup> 와타나베 교수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안전보장의 새로운 구상에 있어 ‘지적 공백’을 채우고 정책의 ‘지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간담회의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히구치 보고서」가 전후 냉전 종식 이후의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고 하면,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조직한 간담회도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제2차 내각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구성을 결정했

4 河野康子·渡邊昭夫, 앞의 책, pp. 139-140.

고, 2013년 2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이미 2007년 아베 제1차 내각에서 같은 이름으로 간담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연속성 차원에서 재개를 한 것이다.

2007년 간담회에서는 안보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헌법과 안보정책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간담회에서는 2007년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 심화된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2013년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은 2014년 5월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후방지원의 확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타국에 대한 대처’ 논의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본 성청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담회, 연구회 등의 역할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기용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책에 대한 지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보고서로 제출되고, 이 보고서에서 검토된 변화된 내용들이 일본의 외교청서나 방위백서에 반영되었다.

### 3. 주요 시기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내용 분석

#### 3-1.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고이즈미 내각 시기인 2004년 4월 20일에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간담회 취지로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진전과 국제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큰 과제로 되어 있고, 이 과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내각 총리대신이 안전보장, 경제 등의 분야 유식자의 참집을 요청,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4년 4월 27일, 제1회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아라키 히로시(荒木浩) 당시 도쿄전력 고문을 좌장으로, 학계 저명인사들과 전 통합막료의장, 전 내각부 관료 등 14명<sup>5</sup>으로 구성된 안전보장과 방

---

5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책은 2004년 당시 직책이다. 아라키 히로시(도쿄전력 고문), 아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真, 고베대학 교수), 사토 겐(佐藤謙, 대장성 관료 출신),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도쿄대학 교수), 조 후지오(張不二雄, 도요타자동차 사장), 니시모토 데쓰야(西元徹也, 일본지뢰처리지원모임 회장, 전 육상막료장, 통합막료회의 의장), 히와타리 유미(樋渡由美, 조치대학 교수), 후루가와 데이지로(古川貞次郎, 후생관료 출신),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 전 외무차관),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 도아대 학장) 등이 외부 유식자이다.

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1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간담회(2004년 4월 27일)와 마지막 간담회(2004년 10월 4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출석하여,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 보고서를 직접 수령했다.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

회차(개최일)	논의 내용
제1회(4월 27일)	고이즈미 총리가 출석하여 간담회 출범 및 안보정책 전체 틀에 대한 설명과 논의
제2회(5월 18일)	일본의 안보상의 과제와 위협 요인에 대한 설명과 논의
제3회(6월 1일)	위협 요인 설명과 논의(테러리즘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설명)
제4회(6월 15일)	해외 평화유지 활동과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설명과 논의
제5회(6월 29일)	아시아-태평양 안보환경 설명 논의. 북한, 중국, 러시아 분석이 주된 내용으로, 중국군의 전력 증강과 일본 근해의 중국 해군 함정 움직임에 대해 논의
제6회(7월 13일)	자위대 현황 설명과 논의
제7회(7월 27일)	논의 정리
제8회(8월 31일)	방위력 정비에 대한 설명과 논의
제9회(9월 6일)	정부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과 논의
제10회(9월 15일)	논의 정리
제11회(9월 17일)	논의 정리
제12회(9월 30일)	논의 정리
제13회(10월 4일)	고이즈미 총리 출석, 간담회 보고서 제출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첫째, 안보환경의 인식에 따른 일본의 전략 변화의 필요성, 둘째, 새로운 방위력 정비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4일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었고 제목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미래의 안전보장·방위력 비전」이다. 이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

다. 제1부는 새로운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제2부는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 제3부는 방위력의 존재 방식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주변지역의 안전이나 세계의 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국의 안정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의 구조도 변화했고, 위협을 가하는 행태도 미사일, 테러, 게릴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어도 한반도, 중국, 타이완 문제가 있어 매우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한다. 제2부에서는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안전보장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4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째는 종합적인 안전보장전략 실현을 위해,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정보능력을 강화하며, 안전보장회의 기능의 강화, 안전보장정책 기반 정비이다. 둘째는 미·일 동맹의 유지 및 강화이고, 셋째는 국제평화협력 추진이며, 넷째는 방위장비 및 기술기반의 개혁이다. 제3부에서는 방위력 존재 방식으로 국제적인 위협방지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3-2.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2009년 1월 7일, 총리의 결재에 따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대한 공표가 있었다. 간담회 설치의 취지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량파괴병기 등의 확산과 국제적인 테러 등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가 과제가 되었고 게다가 국제평화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이러한 안전보장 환경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에 관계하는 분야의 유식자를 위원으로 하고, 이에 더해 같은 분야에 관한 행정실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서 참집을 요청, 의견을 듣기 위함을 목적으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sup>6</sup>

간담회 개최에 대한 공지가 있고 이를 뒤인 1월 9일 시작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도쿄전력 회장을 좌장으로 6명의 대학교수와 3명의 전직 관료<sup>7</sup>로 구성되었다. 제1차 간담회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2004년 현재 방위계획 대강이 결정된 후 4년이 경과했고, ① 국제평화활동이 자위대의 의무로 규정되어, 이라크 및 인도양에서 실적을 쌓은 점, ② 일본 주변 상황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있는 한편, 중국 등 각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 ③ 방위성 개혁에 대해, 방위정책 및 통합운용의 기능강화, 방위력 정비의 일원화, 조달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국제정세를 관찰하고, 안전보장 전략과 방위력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방위 구상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아소 총리의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20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논

6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ampoboue2/dai1/siryou1.pdf> (검색일: 2022. 3. 31.).

7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 아오키 세츠코(青木節子, 게이오대학 교수), 우에키 치카코(植木千可子, 와세대학 교수),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도쿄전력 회장), 기타오카 신이치(吉岡伸一, 도쿄대학 교수), 다나가 아키히코(田中明彦, 도쿄대학 교수),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 교토대학 교수, 전문위원) 가토 료조(加藤良三, 전 주미대사), 사토 겐(佐藤謙, 재단법인 세계평화연구소 부회장, 전 방위사무차관), 다케고우치 쇼지(竹河内捷次, 전 방위청통합막료회의 의장).

의되었던 내용들이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

회차(개최일)	논의 내용
제1회(1월 9일)	아소 총리,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을 포함 10명의 정부 관계자와 11명의 외부 간담회 멤버가 참석 아소 총리 모두 발언 및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월 2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함. 보고서를 통해 2009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할 것 등을 언급
제2회(1월 26일)	정부 측 참석자들의 국제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브리핑 및 금융위기가 향후에 미칠 영향, 특히 러시아 등의 석유 가격 전망에 대해 논의 오바마 정권 출범과 향후 미국의 전략에 대해 논의
제3회(2월 12일)	일본의 안전보장 및 외교에 대해 논의(남사군도 문제, 무역 및 EPA 관련, G8, PKO, 핵군축 및 방위 기본방침 등)
제4회(2월 24일)	관저 의사결정 시스템 관련(NSC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 검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관련 기능 강화 등)
제5회(3월 3일)	PKO법, 미·일 동맹
제6회(3월 26일)	방위산업 기반 유지, 무기 수출 3원칙, 조달 및 유지비용 감소 등
제7회(4월 9일)	자위대 규모 및 배치 양식, 자위대와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8회(4월 2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안, 방위력 향후 과제, 호스네이선서포트(HNS), 장비품 취득 효율성 관련
제9회(5월 15일)	방위력 역할에 대한 논의 신형인플루엔자 발생,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제10회(5월 29일)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의 명확화, 인사교육시책 과제,
제11회(8월 4일)	보고서 제출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첫째, 국제안전보장의 환경 및 일본의 안전보장과 외교의 향배, 둘째, 미·일 동맹, PKO법안 및 자위대의 존재 방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간담회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새로운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으로, 안전보장전략의 이념과 세 가지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유지, 둘째, 지역과 세계의 안전과 번영

의 유지, 셋째, 자유롭고 열린 국제시스템의 유지 등이다. 여기서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방위력의 존재 방식을, 제3장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 재검토를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이 북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 등의 변화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09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의 핵심 내용**

안전보장 이념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및 세계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의 안전보장 확보와 일본의 주변 및 세계의 안전이 중요</li> <li>-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으로의 진입 확보 및 수출입 통로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함</li> </ul>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테러, 대량파괴병기의 확산, 해적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시스템의 존재가 중요</li> <li>- 글로벌 과제는 미국 및 EU등과 협력해 해결</li> <l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세계 평화 및 일본에 대한 위협, 체제 붕괴의 가능성도 내재</li> <li>- 중국의 변화가 일본으로서는 좋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전략적 호혜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li> </ul>
다층협력적(多層協力的) 안전보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협과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다기능탄력적 방위력’을 정비</li> <li>-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역지를 확보하고 미·일 동맹 강화</li> <li>- 위협 발현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이해 증진 및 미·일 동맹 활용</li> </ul>
방위력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적 억지 증시</li> <li>- 정보 우위 확보 및 국제테러 대응, 자위대 역할 강화</li> <li>- 미·일 간 역할과 임무의 구체화</li> </ul>
방위력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대 인적 기반 및 물적 기반, 사회적 기반 강화</li> </ul>
안전보장 기본방침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방위, 군사대국 지양, 문민통제 확보, 비핵화 3원칙 준수라는 기존 방위정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필요</li> <li>- 적극적인 PKO 활동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정비 마련</li> </ul>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에 관한 방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공동 대처 및 집단적 자위권 해석 재검토를 포함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li> <li>-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li> </ul>
새로운 안전보장전략 기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저 기능 강화</li> <li>- 정보능력 및 정보안전체제 강화</li> <li>- 문민 통제 강화</li> </ul>

### 3-3.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2009년 9월,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첫 총리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선출되었다. 그래서 2010년 간담회는 명칭도 ‘새로운 시대’를 기존 간담회 이름 앞에 붙이면서 차별성을 추구했다.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2월 18일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토야마 총리는 2004년 책정되었던 「방위계획의 대강」의 재검토에 대해 신정부 출범 하 새롭게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간담회 논의 및 프로세스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논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했다. 방위체제 재검토는 ‘지속’과 ‘변화’라는 양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5년간, 실제로 방위정책이 방위대강의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주목해야 할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화, 주변국의 군사력 근대화, 사이버·우주 분야 등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0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첫째, 수동적 평화국가에서 능동적인 ‘평화창조국가(Peace-Creating Japan)’로 성장, 둘째, 과거의 불합리적인 정책들을 개선, 셋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

라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방위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또한 간담회 멤버<sup>8</sup>는 외부 7명(위원)과 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는 총 9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14번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표 6>은 간담회 진행일과 논의 내용이다.

**<표 6>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

회차(개최일)	논의 내용
제1회(2월 18일)	하토야마 총리 출석, 간담회 목적과 취지 설명
제2회(2월 24일)	주변국 상황과 군사 동향
제3회(3월 9일)	국제사회의 과제 및 일본의 대응
제4회(3월 17일)	미국의 안전보장전략과 미·일 동맹
제5회(4월 8일)	방위력 지지 기반(생산, 기술, 인적) 전반에 대한 논의
제6회(4월 27일)	자위대의 향후 체제 및 재정 상황
제7회(5월 12일)	정보와 정보 보전(사이버 공격 대처)
제8회(5월 28일)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에 대한 점검
제9회(8월 27일)	보고서 제출

2010년 8월 27일에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는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안전보장전략의 목표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평화창조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포함한 전략과

8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멤버는 다음과 같다. 좌장은 사토 시게타카(佐藤茂多雄, 게이한 전기철도주식회사 CEO), 좌장대리는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위원은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대학 교수), 나카니시 히로시(교토대학 교수), 히로세 다카코(広瀬崇子, 센슈대학 교수), 마츠다 야스히로(松田康博, 도쿄대학 준교수), 야마모토 다다시(山本正,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전문위원은 이토 야스나리(伊藤康成,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고문), 가토 료조(전 주미대사), 사이토 다카시(齋藤隆, 전 방위성통합막료장).

수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일본 방위력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 일본 주변 지역의 안전화, 글로벌 안보환경의 개선, 방위력 기능과 체제에 관해, 제3장은 방위력 지지기반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 제4장은 안전보장전략 기반 정비에 관한 것으로 내각의 안전보장기구 강화, 정보기능의 강화, 안전보장전략 책정 방식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2010년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의 핵심 내용**

안전보장전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안전과 번영, 일본 주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자유롭고 열린 국제 시스템 유지</li> <li>- 자유롭고 열린 국제시스템 유지와 관련 국제질서 유지 및 국제규범의 준수를 위한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심화</li> <li>- 개인의 자유 및 존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 준수</li> </ul>
안전보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및 사회적 세계화, 미국의 압도적 우월의 상대적 후퇴, 미국의 역지력 변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잔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힘의 균형 변화 및 시련인 및 연안 국가들의 불안정 요인 지속</li> </ul>
전략과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목표는 '평화창조국가'</li> <li>- 일본 자기대응력 강화, 동맹국 협력 및 다층적 안전보장 협력</li> <li>- 다양한 외교수단 활용 및 방위력 정비</li> <li>-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새로운 원칙 수립 후 방위장비 협력 및 방위원조 추진</li> </ul>
방위력 존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적억제'에서 '동적억제'로 변환이 중요</li> <li>- 탄도미사일 및 테러 사이버 공격, 재외일본인 구출 및 일본 주변 유사시 사태 대응 강구</li> <li>- 정보 수집, 경계 감시, 한국 및 호주 등과의 방위협력 및 다국 간 협력 촉진</li> <li>-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방위교류, 안보대화의 내실화</li> <li>- ARF나 ADMM+ 등 지역안전보장 틀에 적극 참여</li> <li>- 일본 방위력 정비(자위대의 능력 강화)</li> </ul>
방위력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물적, 사회적 기반 강화</li> </ul>
안전보장 관련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의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체제의 기반 정비</li> <li>- 정부 전체의 정보를 일원화, 내각 차원의 인텔리전스 사이클 효율성 제고</li> <li>- 국내외 과제 대응을 위한 올 재팬 체제 구축</li> <li>-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관련 검토</li> <li>- PKO참가 5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검토</li> </ul>

지적기반의 내실화  
및 강화

- 안전보장에 관한 정부의사결정 과정에 연구자 참여 증가 예상
-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군·안전보장 당국자 및 연구자, NGO활동가 등 폭넓은 전문적 지식 교환이 필수
- 안전보장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 공급에 노력
- 안전보장 분야의 싱크탱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위한 안정적 활동 방향성 검토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부의 정보 전달 강화
- 이러한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 발신 능력 강화

### 3-4.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아베 2차 내각에 들어서서는 2013년 9월 10일 아베 총리의 지시로 9월 12일에 제1차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은 정부 기능의 중요한 책무로, 국제협조주의에 기반,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 확보를 위해 지금 이상으로 적극적인 관여를 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간담회 멤버는 총 8명<sup>9)</sup>으로 구성되었고, 아베 총리가 3차례에 걸쳐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2013년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간담회 개시일이 늦어져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간담회에서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는 것이 처음으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고 국가안전

9)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기타오카 신이치(좌장, 국제대학학장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에비하라 신(海老原紳, 전 주영대사),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방위대신 보좌관),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방위성 고문),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학 명예교수), 후쿠시마 아키코(福島安紀子, 공익재단법인 도쿄재단 상석연구원), 호소야 유리치(芥いよ대학 교수),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외무사무차관).

보장전략의 기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관과 미·일 동맹의 틀이 중요하고, 정보와의 관계 및 장기적인 예측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표 8〉은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이다.

〈표 8〉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

회차(개최일)	논의 내용
제1회(9월 12일)	아베 총리 참석, 향후 간담회 논의 방향 설명
제2회(9월 30일)	국가안전보장의 존재 방식, 국가안전보장 기본 이념, 국가안전보장 기반
제3회(10월 9일)	국가안전보장 기본 이념,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 및 국가안전보장 과제, 안전보장의 전략적 어프로치
제4회(10월 21일)	아베 총리 참석, 논의 내용을 통해 정부 전략책임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을 언급, 국가안전보장전략, 전략적 어프로치, 방위계획 대강 설명
제5회(11월 11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 대강
제6회(11월 27일)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관해 논의
제7회(12월 11일)	아베 총리 참석,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 대강 논의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책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계획 대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 대강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고, 제7차 회의에서 그 내용이 정리되었다. 제7차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계획 대강은 향후 일본의 안전 보장 행태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국제협조주의에 근거,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적 이념과 포괄적인 시책이 담겨 있고, 방위대강은 일본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을 때로는 배제한다는 문제의식과 확고한 의식하에,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한 방위태세

를 강화해 나가고, 정부와 당이 연계하고 정부 내 조절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7회 간담회에서는 국가안전보장과 방위계획 대강의 공통요소로, ① 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하며, ② 최근 그레이 존 사태의 증가와 함께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③ 일본의 안전보장을 지탱하는 기반 강화, 특히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④ 무기수출 3원칙 등에 대해서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이면서 온건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⑤ 일본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향후 한층 강화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⑥ 일본은 해양법과 룰(rule)을 준수하는 해양국가로, 다른 해양국가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⑦ 미·일 동맹 강화를 포함,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국가 전반의 역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편, 2013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① NSC가 중심이 되어 각 성청 개별 전략문서를 수집, ② 적극적 평화주의의 3가지 축은 외교, 방위, 개발 원조, ③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급변하는 사태변화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방위계획의 대강은, ① 방위력의 개념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② 방위계획 대강에 표현된 능력 정비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재정 사정은 좋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며, ③ 해상, 상공 우세(우위)를 기본으로 정보우세(우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④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된 '열린 안정된 해양'이라는 문구를 방위계획 대강에도 강조해야 하며, ⑤ 미·일 협력을 추진하며, ⑥ 외교 및 안전보장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 정권에서 사용했

던 ‘동적 방위력’이라는 용어 사용 권장 등을 언급했다.

### 3-5.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제1차 회의는 8월 29일에 아베 총리가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의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 및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① 안보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② 일본 주변 안전보장환경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방위계획 대강’의 검토가 요구되며, ③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 및 우주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과 ‘우위성’ 확립이 필요하고, ④ 기존 사고의 연장선이 아니라 필요한 방위력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멤버는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신일철주금주식회사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총 9명<sup>10</sup>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은 <표 9>와 같다.

10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멤버는 다음과 같다. 좌장은 미무라 아키오(신일철주금주식회사 명예회장), 좌장대리에는 기타오카 신이치(국제대학원 학장), 아오이 지유키(青井千由紀, 도쿄대학 교수, 탈냉전기 지역분쟁 연구),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전 통합막료장), 가토 료조(전 주미대사), 구로에 데츠로(黒江哲郎, 국가안전보장국 참여, 전 방위성 사무차관), 사카모토 가즈야(坂元一哉, 오사카대학 교수, 2005년부터 아베 신조 관련 자문위원), 쓰치야 모토히로(土屋大洋, 게이오대학 교수), 미우라 루리(三浦瑠麗, 도쿄대학 강사).

### 〈표 9〉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논의 내용

회차(개최일)	논의 내용
제1회(8월 29일)	아베 총리 출석, 간담회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
제2회(9월 21일)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논의
제3회(10월 2일)	일본의 국가안보 방향성
제4회(10월 19일)	2019년 방위계획 대강 재검토와 관련된 논의
제5회(11월 20일)	논의 내용 정리
제6회(12월 5일)	2019년 방위계획 대강 검토
제7회(12월 11일)	2019년 방위계획 대강의 요건 논의

2018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무, 국제환경 및 국제현조, 동맹, 일본 향후 방위력, 안보환경 및 정세인식, 그레이 존(Gray Zone), 미·일 관계 등이 주요 논의되었다. 간담회 6회와 7회에는 2019년도 방위계획 대강의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0〉과 같다.

### 〈표 10〉 2019년도 방위계획 대강의 주요 요소

일본 방위 기본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끝까지 싸운다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자각을 가질 것”</li> <li>- 그레이 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견지</li> <li>- 국제협력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계 강화”가 중요</li> <li>- 전수방위, 군사대국 지양, 문민 통제의 확보, 비핵 3원칙 준수</li> <li>- 일본에 의한 방위체제, 미·일 동맹 강화, 안보협력, 핵위협에 관한 미국에 의한 확대 억지 중요</li> <li>-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연계</li> </ul>
일본 방위 기본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일본·미국·호주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도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 ASEAN 일체성 후원, 한국과 폭넓은 안보협력 촉진 및 한·미·일 연계 강화</li> <li>- 영국·프랑·캐나다·뉴질랜드·NATO·EU 등과 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국제적 행동규범 준수 및 투명성 향상 촉구, 러시아와의 상호이해 촉진 및 2+2 대화 교류 촉진</li> </ul>

방위력 강화  
우선 사항

- 예산, 인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
- 육해공 자위대 통합추진
- '침략사태'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요 범위에서 방위력을 유지하되,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
-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확보
- 방위력의 핵심은 자위대원이며, 자위대 장비체계의 검토 필요
- 자위대의 우주영역 전문부대 및 사이버 방위부대 마련

#### 4.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변화 추이와 특징

3절에서 검토한 2004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에 있었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2000년대 이후 주요 시기별 안보 및 방위력 관련 논의 추이

연도	주요 논의 내용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협을 가하는 행태도 미사일, 테러, 게릴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변화</li> <li>- 냉전이 종식되어도 한반도, 중국, 타이완 문제가 있어 매우 특수한 상황</li> <li>- 종합적인 안전보장전략 실현을 위해,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정보능력을 강화하며, 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의 강화, 안전보장정책 기반을 정비</li> <li>- 미·일 동맹의 유지 및 강화</li> <li>- 국제평화협력력 추진</li> <li>- 방위장비 및 기술기반의 개혁</li> <li>- 전수방위, 군사대국 지양, 문민통제 확보, 비핵화 3원칙 준수라는 기존 방위정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필요</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테러, 대량파괴병기의 확산, 해적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시스템의 존재가 중요</li> <li>- 글로벌 과제는 미국 및 EU등과 협력해 해결</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세계 평화 및 일본에 대한 위협, 체제 붕괴의 가능성도 내재</li> <li>- 중국의 변화가 일본으로서는 좋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전략적 호혜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li> <li>- 전수방위, 군사대국 지양, 문민통제 확보, 비핵화 3원칙 준수라는 기존 방위정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필요</li> <li>- 적극적인 PKO 활동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정비 마련</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목표는 '평화창조국가'</li> <li>- 일본 자기대응력 강화, 동맹국 협력 및 다층적 안전보장 협력</li> <li>- 다양한 외교수단 활용 및 방위력 정비</li> <li>-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새로운 원칙 수립 후 방위장비 협력 및 방위 원조 추진</li> <li>- '정적 억제'에서 '동적 억제'로 변함이 중요</li> <li>- 탄도미사일 및 테러 사이버 공격, 재외일본인 구출 및 일본 주변 유사시 사태 대응 강구</li> <li>- 정보 수집, 경계 감시, 한국 및 호주 등과의 방위협력 및 다국 간 협력 촉진</li> <li>-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방위교류, 안보대화의 내실화</li> <li>- ARF나 ADMM+ 등 지역안전보장 틀에 적극 참여</li> <li>- 일본 방위력 정비(자위대의 능력 강화)</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중심이 되어 각 성청 개별 전략 문서를 수집</li> <li>- 적극적 평화주의의 3가지 축은 외교, 방위, 개발 원조</li> <li>-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급변하는 사태 변화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li> <li>- 방위계획 대강에 표현된 능력 정비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재정 사정은 좋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함</li> <li>- 해상, 상공 우세(우위)를 기본으로 정보우세(우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li> <li>-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된 '열린 안정된 해양'이라는 문구를 방위계획 대강에도 강조해야 함</li> <li>- 미·일 협력 추진</li> <li>- 외교 및 안전보장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 정권에서 사용했던 '동적 방위력'이라는 용어 사용 권장</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보편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연계</li> <li>- 방위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일본·미국·호주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도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 ASEAN 일체성 후원, 한국과 폭넓은 안보협력 촉진 및 한미·일 연계 강화</li> <li>- 영국·프랑·캐나다·뉴질랜드·NATO·EU 등과 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국제적 행동규범 준수 및 투명성 향상 촉구, 러시아와의 상호이해 촉진 및 2+2 대화 교류 촉진</li> <li>-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확보</li> <li>- 방위력의 핵심은 자위대원이며, 자위대 장비 체계의 검토 필요</li> <li>- 자위대의 우주 영역 전문부대 및 사이버 방위부대 마련</li> </ul>

2004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은 탈냉전 이후에도 중국·타이완·한반도 등의 특수상황은 유지되고,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제평화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국제사회 공헌을 중시한다. 2009년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다. 민주당 정권 교체 이후인 2010년에는 '평화창조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특이한 점은 미·일 동맹 강화보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중국·러

시아·한국·호주 등과의 협력 강화로 미국 일변도 안보정책에서 탈피, 안보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는 수상관저 내에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 외교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또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2018년에는 안보 영역이 우주,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sup>11</sup> 비전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11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구상을 처음 천명한 것은 2016년 아베 수상의 케냐 연설을 통해 서였으나, 그 기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15년 3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일본 외교: 중견국 및 스윙국가에 대한 대응(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Secu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하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Denial) 전략에 맞서 해양에서 일본의 기존 국익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계기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간지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개념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일본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및 필리핀 등 스윙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언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6월 일본국제포럼(日本国際フォーラム)에서 진행된 공동연구 보고서 「신단계 미·일 동맹의 그랜드 디자인(新段階の日米同盟のグランド・デザイン)」은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일본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실시된 공동연구 성과인 「희망의 미·일 동맹(希望の日米同盟)」도 해양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오카 신이치와 호소야 유이치 등 아베 수상의 외교안보 브레인인 대거 참여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안보 목표가 “해양국가로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 항행자유 원칙을 옹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2016년 아베 수상의 케냐 연설이 나왔고,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은 일본 외교의 간판이 되었다. 남기정, 「일본의 아시아정책: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전개», <https://snuac.snu.ac.kr/?p=33249> (검색일: 2022. 5. 11.).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고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탈냉전 이후의 일본의 안전보장 변화 추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이후 안전보장에 대한 기초가 강화되었다. 2004년과 2009년, 2010년에 비해 2013년과 2018년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고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12년 말 다시 총리에 오른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전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안전보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이전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수방위 원칙 고수 등 비교적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13년 이후 미·일 동맹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외교, 안보,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구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수상관저 주도로 안보정책이 형성되고 실천되기 위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신설되는 등 수상관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아베 총리와 측근의 안보와 대외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권과 무관한 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2009년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종속적인 미·일 관계에서 탈피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 실패하면서 대등한 미·일 관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안보정책의 특징은 안보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전수방위, 군사대국 지양, 문민통제 확보, 비핵화 3원칙 준수라는 기존 방위정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PKO

●

활동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정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외교 및 안전보장은 초당파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 정권에서 사용했던 ‘동적 방위력’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는 언급이 있었듯이 이전 정권의 안보정책을 계승, 수용함으로써 안보정책에 일관성을 견지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 증강은 지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 증강은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자위대의 능력 강화, 처우 개선 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의 안보 관심 영역이 변화,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안보관심 분야는 미·일 동맹,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일본의 안보는 미·일 동맹을 넘어, ASEAN, 인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전 지구적 규모의 이슈로 관심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호주, 인도, ASEAN 등 동북아 지역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탈냉전 이후의 안보 관심 영역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 5. 결론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에는 변화가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2000

년대 들어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은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한 2022년 다발성 미사일 발사실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기 충분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 추이에 주된 동력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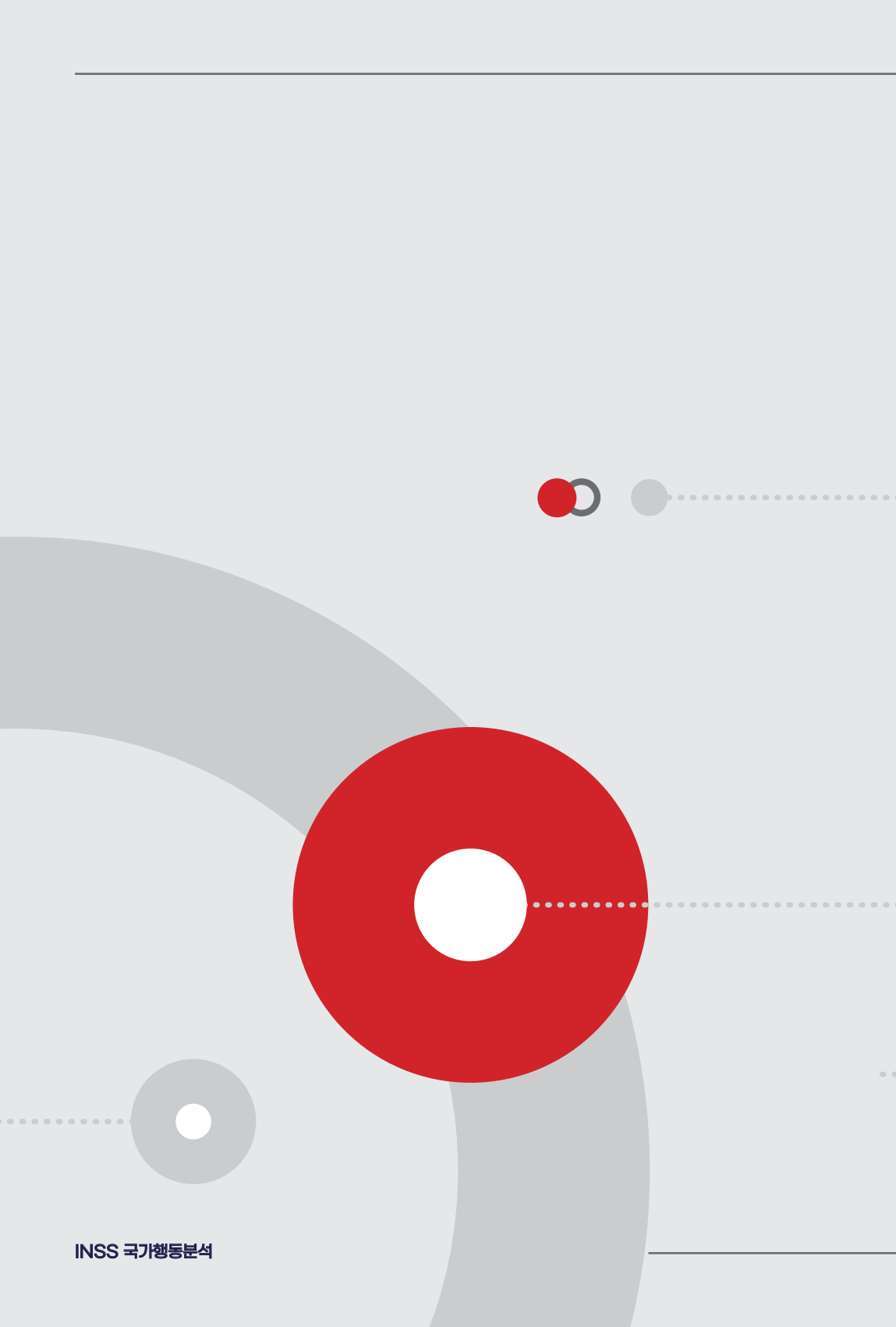
2004년 고이즈미 정부 시기 안전보장과 방위력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안보인식, 일본의 방위 관련 언급 내용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다. 2009년에는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지만, 전략적 호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대중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립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만들고,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면서 동시에 ASEAN, 인도, 유럽 등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안보정책으로 선회함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안보 분야도 우주, 사이버 등 기존의 전통안보에서 신형 안보 영역으로 안보 강화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노선 관련 정책 및 외교노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각 성청, 자민당 내 관련 연구회 등에서 논의이다. 특히, 수상관저에서 주도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구성원이나 논의되는 내용들이 집권당의 안보인식이나, 개념, 사상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간담회 문화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일종의 정치과정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

주제나 간담회의 좌장을 내각 총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담회는 총리 등 자민당 내 결정된 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입혀 주는 부수적인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에 대해 ‘우경화’, ‘보수화’, ‘군사대국화’ 등으로 명명하는 논문이나, 기사들이 다수이다. 2013년부터 7년 8개월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을 했고,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강경보수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논의되었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 강화 추이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고, 미·일 동맹 일변도를 벗어나 강화된 미·일 동맹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유럽, 중동 등 전 지구적 규모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북한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을 넘어,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 지역이 변화되고 있고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신안보 영역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강경우익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집권하게 되면 안보 강화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아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안보 강화 추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Part

# 04

##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승희  
(서울대학교)

### 1. 서론

#### 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

- 2-1. 싱크탱크의 유형 및 역할
- 2-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

### 3.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 프로그램

#### 4. 싱크탱크의 일본 외교로의 공헌

- 4-1. '창조적 구상력' 제시
- 4-2. 글로벌 연계를 통한 국내외 여론 조성
- 4-3. 일본 외교 정책의 강화

### 5. 결론

\* 이 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2호(2022년 6월)에 게재된 논문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수정한 것임.

## 1. 서론

이 장에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일본의 외교 전략 마련과 정책 추진에 미치는 역할과 기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12년 ‘외교·안전보장 관계 싱크탱크의 실태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sup>1</sup>를 개최하여 일본형 싱크탱크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외무성에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外交シンクタンクとの連携)’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외교·안전보장 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sup>2</sup> 사업과 2017년부터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영토, 주권, 역사조사연구사업’<sup>3</sup>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2012년 발표된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싱크탱크의 ‘창조적 구상력(創造的構想力)’과 ‘글로벌한 연계 추진(グローバルな連携推進力)’을 강조했다. 일본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민협력 모델’로 정부로부터 필요최소한의 ‘자금동원력(資金動員力)’을 확보하면서 정부와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민간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일본형 싱크탱크(日本型シンクタンク)’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

1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による提言の提出-「日本型シンクタンク」の構築”, 2012, [https://www.mofa.go.jp/mofaj/gaiko/gaikou\\_anzen\\_think/](https://www.mofa.go.jp/mofaj/gaiko/gaikou_anzen_think/) (검색일: 2022. 4. 1.).

2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 2022. <https://www.mofa.go.jp/mofaj/annai/shocho/hojokin/index3.html> (검색일: 2022. 4. 1.).

3 外務省,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領土・主権・歴史調査研究支援事業)”, 2022,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016.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016.html) (검색일: 2022. 4. 1.).

이후 일본 외무성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의 일환으로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연구 단위 규모별 핵심 주제에 대한 과제를 공고하고, 공고 및 선발 결과,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관련 정보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장에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교·안전보장관계 싱크탱크의 실태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이하, 유식자 간담회)’ 회의 자료와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와 각 싱크탱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정보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현황과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日本国際問題研究所, JIIA: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sup>4</sup>, 방위연구소(防衛研究所, 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sup>5</sup>, 일본국제포럼(日本国際フォーラム, JFIR: The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sup>6</sup>, 도쿄재단 정책연구소(東京財団政策研究所, The Tokyo

4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59년 창립되었고, 2021년 TTCSP(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가 주관하는 세계 싱크탱크 조사에서 2020년 올해의 싱크탱크(2020 Think Tank of the Year-Top think tank in the World)로 선정된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대표 싱크탱크이다. 일본의 젊은 국제관계연구자와 학자들을 연계하며 학계와 정책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있다.

5 방위연구소는 1952년 8월 보안정보안연수소(保安庁保安研修所)로 발족하여 2022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54년 방위청 방위연구소(防衛庁防衛研修所), 1985년 방위청 방위연구소(防衛庁防衛研究所), 2007년 방위성 방위연구소(防衛省防衛研究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일본국제포럼은 1987년 설립된 공익 정책연구 및 제언 기관이다. 정부로부터 독립한 민간·비영리 외교·국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제언 기관을 일본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핫토리 이치로(服部一郎) 초대 이사장이 2억 엔의 기본 재산을 출연하여, 1987년 3월 오오키 사부로(大来佐武郎) 초대 회장하에서 공익 재단으로 설립

Foundation for Policy Research)<sup>7</sup>, 나카소네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中曾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NPI: Nakasone Peace Institute)<sup>8</sup> 등이 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보고서, 발간물, 외무성 사업의 참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싱크탱크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일본의 유식자 간담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형 싱크탱크 모색과 관련된 일본 내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일본 외무성과 외교안보 싱크탱크 연계사업의 주요 선정기관과

---

되었다. 일본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활발히 교환하며 조사, 연구, 심의, 제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적극 발신하고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 도쿄재단 정책연구소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정책 싱크탱크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조사, 연구, 정책 제언을 실시하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일본 및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7월 1일에 공익 재단법인 일본 재단(당시 재단법인 일본선박진흥회) 및 보트 레이스 관계 법인 등에서 출연하고 국토교통상의 인가를 얻어 '국제연구정책재단'으로 출발했다. 이후 '도쿄'로부터의 정보를 세계에 향해 발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반영하여 1999년 5월에 도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0년 3월에는 내각부의 인정을 얻어 4월 1일에 공익 재단법인으로 이행했다. 2018년 2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도쿄재단 정책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실질 재산은 603억 6,096만 엔(2019년 3월 31일 기준), 2020년도 사업활동 지출 예산은 14억 9,100만 엔이다.
- 8 나카소네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1988년 설립했다. 초기 명칭은 「財団法人世界平和研究所」(IIGP: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였고 총리부, 방위청, 경제기획청,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 등 6개 부처를 주무관청으로 정부가 필요한 협력을 한다는 각의 양해를 얻어 설립되었다. 1993년 영문 명칭을 IIPS(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로 변경했고, 2018년 공익재단법인 나카소네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일본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루는 영어 학술지 『Asia-Pacific Review』를 발간해오고 있다.

주요 참여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일본형 싱크탱크 모델의 핵심 특징과 쟁점들을 논의한다. 5절은 결론으로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역할과 의미, 한계 등에 대해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공공외교가 더욱 중시되어 오고 있다. 국내외 여론 조성과 공공외교의 수행 과정에 싱크탱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의 현황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싱크탱크의 의미와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향후 일본 외교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

### 2-1. 싱크탱크의 유형 및 역할

외무성의 ‘유식자 간담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공공정책의 과제들에 대해 정책 결정자나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은 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여러 문제에 관한 정책 지향형

연구와 분석 및 제언을 실시한다.<sup>9</sup> 또한 싱크탱크는 외교·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을 계발하고,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아이디어 및 구상을 제시하는 지적 공헌을 하며, 정부에 의한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나 메시지를 폭넓게 발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10</sup>

일본의 싱크탱크는 일본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적 경쟁의 장소를 형성하는 데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2년 ‘유식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형 싱크탱크의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일본형 싱크탱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sup>11</sup>

첫째,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는 정권 교체 시 인재풀의 역할을 하며 정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유럽형 싱크탱크는 회원의 회비수입이나 사업수입, 기부문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약 10%에서 25%의 폭으로 정부 보조금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데, 재원은 정부로부터 조달받지만 조사연구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은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 모델은 ASEAN의 회원국이 ASEAN-I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합)를 구성하는 유력한 연구기관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부 간 대화(1트랙)를 지원하는 민간 대화(2트랙, 혹은 민간 대화의 장에 정부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정식으로 참가하는 1.5트랙)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9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による提言の提出- 「日本型シンクタンク」の構築.”

10 위의 글.

11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報告書”, 外務省, 2012,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24/8/pdfs/0807\\_06\\_02.pdf](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24/8/pdfs/0807_06_02.pdf) (검색일: 2022. 4. 1.).

다. 네 번째 모델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오늘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연구소 방식으로 활동비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싱크탱크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상당한 정도 일체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고 간담회 보고서는 평가한다.

이와 같이 자금 지원과 정부와의 관계는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금 지원과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싱크탱크의 활동 유형을 <표 12>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12〉 싱크탱크 활동의 유형 분석

		정부 자금			
독자 활동	제2유형 정부의 싱크탱크 지원, 독립 활동 교육 활동	제1유형 국책 연구소 정부 재원 프로젝트 참여 정부의 싱크탱크 활동	정책 연계		
	제3유형 비연계, 독립 기업 연구소	제4유형 민간 자금 운영이 기본이나 정부 재원 프로젝트 참여 정부 연계형			
		민간 자금			

제1유형은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정책 연계 활동에 집중하는 국책 연구소 유형이다. 정부 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정부의 싱크탱크로 활동한다. 방위연구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2유형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싱크탱크이지만 독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 유형이다. 정책 제언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타난다. 제3유형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 유형으로, 기업

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의 독립적인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4유형은 민간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 재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책 제언들을 적극 발신하며 정부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활동이다. 민간 연구소들의 정책 제언 활동들이 대표적이며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활동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부의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으며 정부에 정책적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제1유형과 제4유형의 싱크탱크의 활동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싱크탱크는 세계대전이나 공황 등 역사상의 위기 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정책을 제언하며 사회를 움직여 왔다.<sup>12</sup>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가 지적했듯 포퓰리즘의 대두나 정보 전쟁에 직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싱크탱크 소국으로 평가되어 왔던 일본이 추구하는 일본형 싱크탱크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 2-2. 일본형 싱크탱크의 모색<sup>13</sup>

일본 최초의 싱크탱크는 1960년대 후반 정부가 경제 성장, 산업 발전,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등장했다. 싱크탱크는 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네트워크의 일부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노

12 船橋洋一, 『シンクタンクとは何か-政策起業力の時代』(東京: 中央公論新社, 2019).

13 이 절에 대한 내용은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報告書”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무라 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 NRI: Nomura Research Institute)<sup>14</sup>가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쓰이스미토모 금융 그룹 계열의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JRI: The Japan Research Institute)<sup>15</sup>가 1969년에 설립되었고, 미쓰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 MRI: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sup>16</sup>가 1970년에 설립되었다. 싱크탱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연구개발기구(総合研究開発機構, NIRA: Nippon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sup>17</sup>가 1974년에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교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와 나카소네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PI, 전 IIPS)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싱크탱크와의 관계는 경제정책 기획과 시행을 총괄하는 통상산업성(MITI)이 주도했다. 자민당 장기 집권과 보수 엘리트들의 참여가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 싱크탱크로서의 공간이 상당히 좁아졌다. 1970년대 일본은 미국 싱크탱크들의 성장 패턴을 따랐지만, 일본의 개발국가의 고착화는 ‘약한 싱크탱크와 강한 국가를 경쟁시키는 지식 체제’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8</sup>

유식자 간담회에서 채택한 보고서<sup>19</sup>에 따르면, ‘일본형 싱크탱크’ 구축을

14 野村総合研究所, <https://www.nri.com/jp> (검색일: 2022. 4. 1.).

15 日本総合研究所, <https://www.jri.co.jp/> (검색일: 2022. 4. 1.).

16 三菱総合研究所, <https://www.mri.co.jp/> (검색일: 2022. 4. 1.).

17 NIRA総合研究開発機構, <https://www.nira.or.jp/> (검색일: 2022. 4. 1.).

18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報告書.”

19 ‘유식자 간담회’에서 실시한 앙케이트에 참가한 기관은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세계평화연구소,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일본국제포럼, 중동조사회, 도쿄재단, PHP 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센터, 국제 공공정책 연구센터, 『요미우리』 신문사 조사연 본부,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젠론NPO, 도쿄대학 동양 문화 연구소, 도쿄대학 정책 비전 연구 센터

위해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싱크탱크는 ‘창조적 구상력’, ‘글로벌 연계 추진’, ‘자금 동원력’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 속에서 이겨 나가는 경쟁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일본형 싱크탱크’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와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민간입장에서 역동적으로 발신하는 ‘새로운 관민협력 모델’이 되는 싱크탱크가 적어도 1개 기관, 보다 바람직하게는 복수 기관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up>20</sup> 싱크탱크의 독립행정법인화나 국유화라는 선택사항은 자금 동원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창조적 구상력과 글로벌한 연계 추진력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싱크탱크는 민간의 입장을 유지하고 국가가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싱크탱크는 민간의 수법을 대담하게 도입한 개혁이 필요하며 자금 획득을 위한 경영 노력의 강화, 기업 등을 스폰서로 한 사업 실시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의 영업 노력의 강화, 그리고 활동성과의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sup>21</sup>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싱크탱크를 지원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빌려 일본 정책에 반영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

터, 게이오기주쿠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정연구소 등이다.

20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報告書.”

21 위의 글.

### 3.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 프로그램

일본은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근거 조항은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 IV의 6 (2)항과 (4)항이다. 국가 안전보장을 지탱하는 국내 기반 강화와 국내외에서의 이해 촉진 중 (2)항 정보발신 강화와 (4)항 지적기반의 강화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sup>22</sup> 이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 연계 사업으로는 ‘유식자 간담회’,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조성금’,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항목이 있다.

이 중 외교 안보 연구 및 연구 보조금 사업은 일본의 연구기관(싱크탱크)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의 집단적 강점을 하나로 모으는 ‘전원참가형(全

---

22 6(2)항의 정보 발신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정책 추진 시 개념에 대해 내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신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나 신뢰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관저를 사령탑으로 하여 정부 일체가 된 통일적이고 전략적 정보 발신을 실시하고, 각종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외국어에 의한 발신 강화 등을 실시한다. 정부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전문가, 싱크탱크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세계에 일본어 보급, 전략적 홍보에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발신하여 국제 여론의 정확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제사회에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6(4)항의 지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국민적인 논의의 내실화나 질 높은 정책 입안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직원의 파견 등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장 교육의 확충·고도화, 실천적인 연구실시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이나 싱크탱크 등과 정부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여 민간 전문가와 행정관, 국가안보 인재를 육성해나간다.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戰略”, 2013, <https://www.cas.go.jp/jp/siryu/131217anzenhoshou/nss-j.pdf> (검색일: 2022. 4. 1).

員参加型)' 외교를 추진하여 일본의 국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무성은 2013 회계연도부터 일본 연구기관(싱크탱크)의 외교·안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외교·안보 연구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본의 싱크탱크가 수집, 분석, 보급, 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해 일본의 전방위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전방위외교를 촉진하여 일본의 국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기본 정보 수집 및 연구, 외국 싱크탱크 및 전문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 일본의 주장을 세계에 전파하고 국제 여론 형성에 참여, 대외·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신청 유형으로는 발전형종합사업, 종합사업, 연구조사사업 3가지로 나뉘어 있다.<sup>23</sup> 2013년 3월 28일부터 종합사업과 연구조사사업이 실시되었고, 발전형종합사업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발전형종합사업 및 종합사업은, ① 기초적 정보 수집·조사 연구(제언 포함도 가능), ② 외국 싱크탱크·전문가 등과의 연계, ③ 일본 주장의 세계로의 발신과 국제 여론 형성에 대한 참가, ④ 국민의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연구사업형은 기초적 정보 수집, 조사연구(제언 포함도 가능)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부상한액은 조사연구사업 약 843만 엔(2022년)~940만 엔(2020년), 종합사업 2,994만 엔(2021년)~4,500만 엔(2020년), 발전형 종합사업 9,350만 엔(2020년) 정도로 회계연도별로 책정된다. 선정평가, 중간평가 과정에서 기초정보, 외국과의 연계, 국제여론 형성, 국내 이해 증진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중단 및 감액 등

23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① 국제정치 및 국제정세 일반, ② 안전보장, ③ 경제·지구적 과제, ④ 해양을 둘러싼 문제, ⑤ 신영역(사이버·우주·AI)을 둘러싼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각 항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종합사업, 발전형 종합사업을 공모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이 특별 주제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22년에 모집한 조사연구사업의 주제는 ‘경제안전보장분야에서의 주요국 동향(미국·중국·유럽)과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sup>24</sup>으로 도쿄대학 미래비전 연구센터가 선정되었다. 매년도 공모 주제나 선정 주제를 살펴보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나 경쟁을 통해 선발된 해당 분야의 선도적인 주제 및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2013~2022년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선정 주제

선정 연도	주제	사업자명
2013	한반도 시나리오·플래닝(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우리나라(일본) 주변국과의 해양외교를 위한 대화 메커니즘 구축 및 연구(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세계평화연구소
	주요국의 대중 인식·정책 분석(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새로운 단계의 미·일 동맹 그랜드 디자인: 스마트파워 시대에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위하여(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동아시아 안보-미·일 동맹, 군비 관리-긴장 완화(2년 사업)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 정책비전연구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일본의 경제안보(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4 經濟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主要国の動向(米中欧)と日本が採るべき政策.

2013	사회성 평가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전략 연구 (1년 사업)	일반 재단법인 국제 개발 기구(FASID)
	차이나 리스크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대처(1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글로벌 전략 과제로서 중동: 2030년의 전망과 대응(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언론'의 힘에 의한 '강한 공공외교'(2년 사업)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
	가치관 외교를 기축으로 한 일본 외교의 활성화(1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글로벌 커먼스(사이버 공간, 우주, 북극해)에서의 미·일 동맹의 새로운 과제(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인도·태평양 시대'의 일본 외교: Secondary Powers / Swing States에 대한 대응 (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우주정책·사이버보안에 관한 외교안보 싱크탱크 형성사업(2년 사업)	주식회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싱크탱크 네트워크 형성(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사하라 지역의 이슬람 급진파 활동과 자원 분쟁 연구: 중동 국가와 글로벌 액터 간의 상호 연관 시각에서(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4	사회성 평가 기준의 국제표준화 연구 단계 II(1년 사업)	일반 재단법인 국제 개발 기구(FASID)
	일본의 자원외교와 에너지 협력(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인간의 안전보장 과제와 일본의 외교전략: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며 건강하게 늙는 사회 건설을 위해(1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2015	국제질서 동요기의 미·중 동정과 미·중 관계(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우크라이나 위기와 일본의 지구본 부담 외교(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안보정책 리얼리티 체크: 신안보법제·가이드라인과 한반도-중동정세(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적극적 평화주의 시대의 미·일 동맹: 평화적 롤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파워 동맹을 향하여(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언론의 힘, 발신력의 향상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세계 싱크탱크와의 적극 협의(2년 사업)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 공헌의 기본방향 검토 사업(1년 사업)	주식회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2015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과제와 해양 안전 보장 'country profile'(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영토 해양문제와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2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2016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일본 외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2017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강인성: 미국, 중국, 유럽을 둘러싼 정세와 그 임팩트(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국제 질서에 사이버 공간이 미치는 영향의 평가, 대항책 연구(3년 사업)	주식회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동북아에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중·일 양국에 대한 평화원칙 제안과 일중합 다자협의 메커니즘 창설(3년 사업)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겐론NPO
	안전 보장 정책의 바텀업 리뷰(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세력전환 시대 일본의 종합 외교 전략: 신흥국 대두를 둘러싼 리스크와 기회(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평화안전법제에 근거한 일본의 국제평화협력 기본 방향(방향성) 연구(2년 사업)	일반사단법인 일본전략연구포럼
	지구 규모 과제의 해결을 향한 일본의 제언력의 강화와, 일본을 발신 거점으로 하는 세계 10개국 TOP 싱크탱크 회의에 의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칙 제기(3년 사업)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겐론NPO
	반세계화 재고: 국제경제질서를 흔들 위기 요인 연구(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안전보장 환경의 변동과 일본의 대응(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미래공학연구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전보장과 '법의 지배'의 실제화를 위해: 국제 공공재의 유지 강화를 위한 일본 외교의 새로운 대응(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9	새로운 단계의 일본의 해양전략: 열리고 안정된 해양을 향하여-(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미·중 경쟁으로 인한 첨단기술 분야 안보화 배경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3년 사업)	도쿄대학 정책비전연구소 안전보장연구유닛
2020	국제질서 전환기의 일본 질서 형성 전략 대두하는 중국과 미국, 유럽의 새로운 공조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체제 간 경쟁 시대에 일본의 선택사항: 국제질서 창발에 적극 관여하기 위한 정책 제언·정보 발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시나리오 플래닝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소
	변해가는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일본의 외교전략: 중국의 대외행동 분석구조의 구축을 근거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2020	대국 간 경쟁 시대 일본의 안전보장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영역확장적인 안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전략	공익재단법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세계평화연구소
	다원적 세계화 시대 세계 다극화와 일본의 종합외교전략 '인도·태평양' 개척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국제질서 변동기 경쟁과 연계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일본 외교 제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일본의 경제 안보·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신기술	공익재단법인 미래공학연구소
	미·중 관계를 넘어: 자유롭고 열린 지역질서 구축의 '기축국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첨단기술을 통한 안보 위험 다면적 분석	공익재단법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우주·사이버 리스크 거버넌스: 새로운 위협에 대한 민관연계·국제협력력을 통한 질서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술외교전략 연구	주식회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해양 질서 구축의 다면적 전개 해양 '여론'의 창성과 확대를 위하여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	
2021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 방식과 일본의 역할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2022	경제안전보장 분야의 주요국 동향(미국·중국·유럽)과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	도쿄대학 미래비전 연구센터

\*출처: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은 일본의 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자주적인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조사연구·대외 발신행동을 지원하고, 일본의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객관적인 시점을 국내외에 발신·공유함으로써 국내외의 이해를 촉진하고, 이로써 일본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2017년, 2022년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교부금액은 2016년 3,527만 엔, 2017년 5억 1,143만 엔, 2022년도 기준 5억 160만 엔이며, 사업 실시 기간은 1~5년이다. 싱크탱크의 일본 외교 목적에 따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 동향의 파악, 기본 자료 수집, 지식인들 간의 협력, 국제 여론으로의 영향, 국내 국민으로의 공유 및 발신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도에는 ‘20세기 아시아의 역사 국제 공동연구 병행 히스토리 시도(3년 사업)’으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에는 ‘영토·역사센터를 통한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 및 효과적인 대외 발신타동(5년 사업)’으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22년에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5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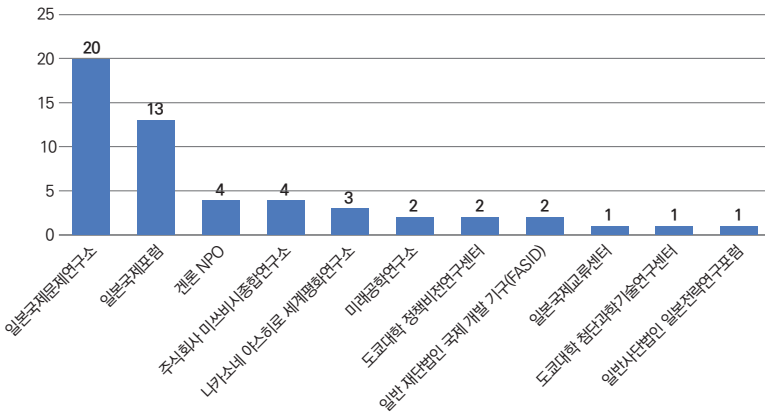
〈표 14〉 국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비 보조금(영토·주권·역사조사 연구 지원 사업)

선정 연도	주제	사업자명
2016	20세기 아시아의 역사 국제 공동연구 병행 히스토리 시도(3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7	영토·역사센터를 통한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 및 효과적인 대외 발신타동(5년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2	영토·주권·역사조사 연구 지원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출처: 外務省, “國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2013년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외교, 안전보장 조사연구사업비 조성금’에 선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건, 일본국제포럼이 13건으로 나타나고, 켄론NPO,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나카소네 세계평화연구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매년 1건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 사업 초반에는 8개의 연구 주제를, 이후 매년 3~4개의 연구 주제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은 모두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선정되었다.

〈그림 2〉 2013~2022년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출처: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함.

2020년 평가대상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sup>25</sup>들 중 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자로는 미국 전문가인 모리 사토루(森聡), 중국 전문가인 가와시마 신(川島真),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이토 아세이(伊藤亜聖), 이토 와카코(伊藤和歌子)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전문가의 비중이 높으며, 유럽, 이슬람, 러시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25 2020년 실시된 중간평가 자료 중 평가대상 각 기관의 실적보고서(実績報告書)에 참여자로 기록된 명단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2020(令和2)年度実施事業中間評価結果”, 外務省, 2021,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4.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4.html) (검색일: 2022. 4. 1.).

〈그림 3〉 2020년 평가대상 ‘연구사업비보조금’ 사업 참여자 전체 및 상위 10인



\*출처: 外務省,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2020(令和2)年度実施事業中間評価結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함.

〈표 15〉 사업 참여자 상위 10인 소속 및 전문 분야

이름	소속	전문 분야
가와사마 신(川島真)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중국 및 아시아 정치외교사
고이즈미 유(小泉悠)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강사	러시아 군사·안보
구보 후미야키(久保文明)	게이오 대학 법학부 교수 제10대 방위대학교장	미국 정치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교수	현대 중국 정치
모리 사토루(森聡)	호세이대학 법학부 국제정치학과 교수	미국 외교, 냉전사
사카모토 가즈아(坂元一哉)	오사카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일·미 관계사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恵)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	이슬람 정치사상
이토 아세이(伊藤亜聖)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준교수	경제학, 중국경제론
이토 와카코(伊藤和歌子)	국제포럼 이사 및 연구주간	중국 사회시스템
호소야 유리치(細谷雄一)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국제정치사, 영국 외교사



안보 분야 연구원으로 제너럴 커티스 명예연구원, 호소야 유이치 연구주간/정치외교검증연구회간사/포폴리즘 국제역사비교연구회간사, 진보 겐 주석 연구원,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명예연구원, 기타오카 신이치 명예연구원 등이 있다.

나카소네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중요 과제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에서 깊게 고찰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제언을 내외에 넓게 발신하는 열린 정책연구 제언기관을 표방한다. 안전보장 확보 및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일본의 국제적 책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대 회장으로 아소 다로가 2021년 10월 22일 취임했고, 평의원으로 이오키베 마코토, 이토 겐이치 일본국제포럼 대표이사, 제럴드 커티스(Gerald Curtis) 교수가, 총괄연구고문으로 기타오카 신이치, 연구본부장에 가와시마 신, 수석연구원에 호소야 유이치, 모리 사토루, 니시노 준야 교수 등이 임명되어 있다.<sup>26</sup>

#### 4. 싱크탱크의 일본 외교로의 공헌

일본의 외교안보싱크탱크 보조금 사업 평가 기준은, ① 새로운 정보 수집 및 지식 획득, ② 싱크탱크 네트워크 강화, ③ 일본 외교로 공헌, ④ 대외 발신 강화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기관이 제시한 성과를 일본형

26 NPI, “役員一覧”, <https://www.npi.or.jp/about/officer.html> (검색일: 2022. 4. 1.); NPI, “研究者紹介”, <https://www.npi.or.jp/experts/index.html> (검색일: 2022. 4. 1.).

싱크탱크의 과제로 제시되었던 창조적 구상력의 제시, 대내외 발신을 통한 여론의 조성, 그리고 새로운 정보 및 지식 발굴을 통한 일본 외교 정책의 강화라는 특징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들이 일본 외교로의 공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 4-1. ‘창조적 구상력’ 제시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사업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일본의 안보장과 일본의 강점에 방점을 두고 새로운 외교 과제들을 모색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2015~2017년에 걸쳐 정치, 국제정세 전반과 경제·지구적 과제, 영토·해양 분야로 나누었으며, 2020년에는 해양을 별도로 두고, 신영역(사이버·우주·AI) 분야가 신설되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 과제가 제시되었다.

지난 10년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크게 일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쟁점 과제들과 미·일 동맹 및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구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 개념을 제시하고, 신안보법제 가이드라인과 영역횡단적 안보거버넌스 확립을 제언했다. 미·일 동맹 및 국제연대 강화하는 흐름으로는 미·일 동맹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스마트파워 동맹 과제를 제시했으며,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국제질서 구상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가치관 외교, 법의 지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열리고 안정된 해양, 기축국가 일본 등의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다. 2015년에 우크라이나 위기와 일본의 지구본 부담 외교에 관한 과제가 수행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표 16〉 연구 주제 분류

안보 강화	미·일 동맹 및 국제연대 강화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b>해양안보</b> 자원외교, 에너지협력(2014)	<b>미·일 동맹 비전</b> 새로운 단계의 미·일 동맹 그랜드 디자인(2013)
<b>경제안보</b> 차이나 리스크와 지역경제 통합(2013)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경제안보(2013)	적극적 평화주의 시대의 미·일 동맹: 평화적 롤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파워 동맹을 향하여(2015)
<b>기술안보</b> 첨단기술 안보화(2019) 글로벌커먼스: 사이버공간, 우주, 북극해(2013)	<b>인도-태평양 및 국제질서 구상</b> 가치관 외교(2013) 우크라이나 위기와 일본의 지구본 부감 외교(2015) 해양안전보장과 '법의 지배' 실체화(2017)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2017) 열리고 안정된 해양(2017)
<b>신안보법제·가이드라인(2015)</b>	자유롭고 열린 지역질서 구축의 '기축국가 일본'(2020)
<b>영역횡단적 안보거버넌스 확립(2020)</b>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공헌(2015) 국제질서 창발(2020)
전문가 중심 연구 주도, 자료 수집, 여론 형성, 정책 홍보, 국내외 발신, 공공외교	

\*출처: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함.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경우, 지역별로는 중국연구회, 미국연구회, 유럽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경제안보연계, 안전보장과 신기술연구회, 지구규모과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sup>27</sup> 해외 주요 싱

27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경제안보연계(Linkage) 연구회’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는 분야를 시사 문제에 역점을 두어 분석했다. ‘안전보장과 신기술연구회’에서는 신기술이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황 분석 및 논점을 정리하고 장애 전망을 제시했다. ‘지구규모 과제 연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각 테마의 여러 과제를 정리하여 연구 보고서로 발표했다. ‘중동·아프리카 연구회’에서는 중동 전체의 안전보장·지역정세의 요점인 이스라엘·아랍 여러 나라의 관계 정상화나 핵협상을 중심으로 한 이란·미국 관계를 내정·외교·역사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2020(令和2)年度実施事業中間評価結果”, 2021,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3.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3.html) (검색일:

크탱크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오고 있으며,<sup>28</sup> 싱크탱크 간 그리고 1.5트랙의 회의를 개최하여 일미인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과 유럽, 일본과 나토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해양 정책, 북극해 정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5트랙 사업으로 전략연례보고와 도쿄 글로벌 다이얼로그(TGD)사업을 운영하고, ‘인도·태평양의 오늘과 내일: 전략 환경의 변용과 국제사회의 대응’과 같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비전 등을 제시하는 등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계에 적극 발신하고 있으며, 격화되는 미·중 대립, 전략적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 일본과 주변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국제포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다자 문제)과 센카쿠 열도(중국어: 다오위다오)와 같은 영역 분쟁에 대한 대응(양자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의 반영에 적극적인 호주와의 연계나,

---

2022. 4. 1.).

28 중국연구회에서는 중국 및 타이완의 유력 싱크탱크(중국국제문제연구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국제연구원)와 교류했으며, 미국연구회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폴리시 인스티튜트(ASPI), CSIS, 브루킹스연구소, 유럽과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독일 외교정책 협회(DGAP),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와의 2트랙 대화(2020. 12. 3.)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QUAD의 구체적인 협력과 호주 협력에 대해 논의하여 사이버 보안과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서 향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미호인(JIIA-Heritage-ASPI-VIF) Quad-Plus Dialogue, 인도의 델리폴리시 그룹(DPG), 미국 싱크탱크 East-West Center(EWC), 베트남 외교학원(DAV) 등과 학술교류를 추진했다.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補助事業実績報告書”,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20, 4/54,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26539.pdf> (검색일: 2022. 4.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 해양안전보장과 관련한 배의 국적이나 선사의 국적 문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공공재로 발전시킬 필요성, ASEAN에 해양안전보장 정보공유센터의 설립 필요성 등도 제안했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ICT, 빅데이터, AI, IoT, 5G, 사이버 안보 등의 기술 진화의 동향을 고려한 국제 협력, 경제안전보장 관련 논의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국제 룰(rule)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민생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시스템인 '우주 활동에 관한 장기 지속 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국내의 주요 기술을 가진 우주 관련 민간사업자와 제휴하여 우주·사이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해 나갈 것을 제시한다. 일본의 우주 분야에서의 활동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국제질서 형성에 공헌하고,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특정 분야(예를 들면, 데브리 제거, 위성통신의 암호화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를 리드함으로써 일본 외교전략에 이바지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국제포럼의 주요 활동으로는, ① 정책위원회 등에 의한 각종 정책 제언 활동, ② 홈페이지상에 설치된 e-논단 '백화제방(百花齊方)'에서의 공개 토론 활동, ③ JFIR 내외 복수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조직·운영하고 그 성과를 '연구보고'로 발표하는 조사연구 활동, ④ 각종 국제회의·심포지엄 개최나 전문가 등의 파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9</sup>

---

29 위의 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되는 ‘다원적 글로벌리즘 시대의 일본과 세계 (多元的グローバリズム時代の日本と世界 2020 to 2023)’<sup>30</sup> 연구회에서는 기존 국제질서의 기조인 ‘자유로운 글로벌리즘’이 중국 등 신흥국이 추진하는 ‘비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AI·사이버 등 ‘테크노 글로벌리즘’이 인류사회를 근본적으로 변용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21세기 세계는 ‘다원적 세계화 시대’라고 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스스로가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계속 준수하면서 신흥국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역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사적 차원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현재 일본 외교의 핵심 의제들이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일본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싱크탱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들이 제시한 분야별, 주제별 핵심 키워드들이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발신되며 창조적 구상력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 4-2. 글로벌 연계를 통한 국내외 여론 조성

일본형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과 대내외 홍보 확산 등의 역할을 적

30 “多元的グローバリズム時代の日本と世界 2020 to 2023”, 日本国際フォーラム, [https://www.jfir.or.jp/jp/studygroup\\_index/](https://www.jfir.or.jp/jp/studygroup_index/) (검색일: 2022. 4. 1.).

극 수행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로 1959년 미국 외교 협회와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등 쟁쟁한 기관들을 염두하고 설립했으며, 초기에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명성을 얻었다.

대중 발신을 위해 1960년 월간지 『国際問題(국제문제)』를 창간하여 2022년 2월 기준 제705호까지 발간했다. 영문 저널 『Japan Review』는 2017년 창간되어 2021년 제4권 제2호까지 발간되었다.<sup>31</sup> 또한 정책 회담을 주최하며 1.5트랙 및 2트랙 회의도 주최해오고 있다. 1981년에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사무국을 설치하고, 1994년에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1996년에는 군축, 비확산촉진센터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제1회 도쿄 글로벌 다이얼로그(東京グローバル・ダイアログ, TGD)를 개최했다.<sup>32</sup>

해외 발신을 위해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영문 저널 『Japan Review』를 활용하여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에 근거하는 질서에 대한 도전 등 다양한 성과를 수록한 글을 대내외에 배포했다. 동해/일본해 호칭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적 문서에 근거한 주장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대 교수의 논고를 한·중·일 3개 국어 통합책자형태로 재외공관, 영토주권전시관, 시마네현 등에 폭넓게 배포하고

31 “出版 研究所の出版物”,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2.jiia.or.jp/PUBR/> (검색일: 2022. 4. 1.).

32 “研究所概要-沿革”,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abus/enkaku.html> (검색일: 2022. 4. 1.).

『재팬 리뷰』에도 게재했다.<sup>33</sup>

방위연구소는 방위성의 방위교류 및 안전보장 대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국의 국방연구기관과의 사이에서 연구교류 및 교육교류를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 연구원을 포함한 해외 연구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국제회의의 주최 및 연구자의 해외파견 및 초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하는 2020년 세계 싱크탱크 보고의 방위·안전보장 부문에서 전체 110개 기관 중 9위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2021년 8월, 방위연구소는 문부과학성 및 일본 학술진흥회의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과학연구비)<sup>34</sup> 응모가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방위성 외부의 대학·싱크탱크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재단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세계 조류의 커다란 전환기에 국민, 시민, 생활자의 실태에 동행하고,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에 기초한 공공권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대를 이끌어 온 민주주의, 시민국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위기가 세계를 뒤덮고, 지구온난화,

33 위의 글, 5/36.

34 과학연구비 조성사업(학술 연구 조성 기금 조성금/과학 연구비 보조금)은 인문·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기초로부터 응용까지의 모든 '학술 연구'(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연구)를 현격히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연구 자금'이며, 피어 리뷰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창적·선구적인 연구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학연구소비에 대한 심사·교부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科学研究費助成事業: 科研費”,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inkou/hojyo/main5\\_a5.htm](https://www.mext.go.jp/a_menu/shinkou/hojyo/main5_a5.htm) (검색일: 2022. 4. 1.).

인권 문제, 종교적 대립, 전염병, 디지털 혁명이 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일본 국내에서는 청년 인구 급감, 1인당 GDP 급강하, 경제 격차·지역 격차 확대, 디지털화의 지연, 국가 재정의 팽박 등이 겹쳐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① 경제·재정 및 환경·자원·에너지, ② 건강·의료·간호·개호, ③ 교육·인재육성·고용·사회 보장, ④ 과학기술·이노베이션, ⑤ 디지털화와 사회구조 전환이라는 5개의 주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 시대를 담당하는 젊은 인재를 국제적인 장소를 통해 육성해나가고 장래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도 재단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위의 5대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약 30건의 연구를 약 80명의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 워킹 페이퍼, 정책 브리프, 연구 성과를 담은 단행본 등을 발간하고 있다.<sup>35</sup>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일본의 외교·안전 보장,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와 함께 중국이나 한반도의 정세도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중국의 동향, 미·중 관계, 국제 질서, 일반적인 외교관계, 해양 안보, 우주·사이버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출판물 중 『NPI Quarterly』는 2010년 창간된 기관지로 연구소의 대내외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Asia-Pacific Review(APR)』는 1994년 창간되었으며 연 2회 발행되는 영문 학술지로 외교·안보, 산업·통상, 경제·사회 등 제반 과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집필자들은 국내외 최고의 학자와 정계 리더들이며 ‘Taylor & Francis Group Online’을 통해 전 세

35 “出版物”, 東京財団政策研究所, <https://www.tkfd.or.jp/publications/> (검색일: 2022. 4. 1.).

계 2,000여 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다. 그 외 NPI관련 서적들로 연구·국제 교류·제언 등의 성과들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서적들은 영문판으로 발간되어 일본 국내외로 배포되고 있다.<sup>36</sup>

### 4-3. 일본 외교 정책의 강화

국책 연구소인 방위연구소는 방위성 정책연구의 핵심 싱크탱크로 주로 안전보장 및 전사(戰史)에 관하여 정책 지향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위대의 고급간부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대학 차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사자료의 관리, 공개 등을 통해 일본 최대의 전사연구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안전보장 회의 및 각의에서 결정된 방위계획의 대강령에서는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연구·교육 추진’을 강조했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 연구소의 안전 보장 정책과 관련되는 연구·교육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sup>37</sup>

2013년 12월 각의결정된 방위대강 내용 중에서 “방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성·자위대의 연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내의 다른 연구 교육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싱크탱크 등과의 교육·연구 교류를 포함한 각종 연계를 추진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방위연구소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6 “NPIの出版”, 中曾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https://www.npi.or.jp/publications/index.html> (검색일: 2022. 4. 1.).

37 “防衛研究所の紹介”, 防衛研究所, <http://www.nids.mod.go.jp/> (검색일: 2022. 4. 1.).

2015년 4월에 연구간사, 특별연구소를 신설했다. 방위연구소는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제교류와 정보발신을 중시해 오며 일본 안전보장정책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다.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에서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내각관방의 영토주권 전시관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토 관련 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을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sup>38</sup>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국내외로 발신하고 있다.<sup>39</sup> 이하 실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중국이 스스로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하는 문서의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1895년 이전부터 센카쿠 열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유럽고지도(전국지 1면에 보도) 등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고지도를 수집했다. 센카쿠 열도에 관해 명·청나라 때부터 중국이 관리했다는 중국 측 주장의 오류를 보여 주는 시모조 다쿠쇼쿠대 교수의 논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센카쿠 열도의 자연을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 ‘센카쿠 열도의 자연’을 작성하여 섬의 식생이나 생물 동태의 경년 변화를 3D 입체 화상 모델로 만들었다.<sup>40</sup>

독도에 관해서는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시마네대학 준교수에게 의뢰하여 고지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하는

38 “領土・歴史センター-外務省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jic/> (검색일: 2022. 4. 1.).

39 영문홈페이지는 <https://www.jiia-jic.jp/en/> (검색일: 2022. 4. 1.).

40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領土・主権・歴史調査研究支援事業)補助事業実績報告書”,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20, p. 5,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26514.pdf> (검색일: 2022. 4. 1.).

1953년, 1954년의 미국 정부 제작항공도를 발표했다.<sup>41</sup> 당시 미국 정부의 인식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측 입장을 강화하고 한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일간지에 보도한 후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영어권에도 홍보했다.

또한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1955~1997년의 미국 정부 제작 항공도 9점, 1952년의 해도 4점에 대해서도 널리 보도했다.<sup>42</sup> 또한 시마네현(島根県)의 『산인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에 의뢰하여 1945년부터 15년간의 모든 지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독도 관련 기사를 추출함으로써 한국의 점거까지의 일본과 독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당시 상황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신문에 보도되었다. 특히 1953~1954년의 미국제 항공도는 영토주권전시관에 의한 2020년도 제1회 지방순회전(広島: 히로시마, 松江: 마쓰에)의 주요 전시물<sup>43</sup> 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토 분야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歴史的權利)’, ‘침묵(沈黙)’과 같은 논점을 국제판례나 영토분쟁 해결사례에 비추어 정리 검토하고 일본 영역 ‘편입’ 과정이나 메이지 정부의 국제법 이해, 외국의 이해 등에 대해 새로운 사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했음을 밝힌다.<sup>44</sup> 역사 분야 검토회에서는 주변국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다양한 주제를 확인하고 상대국 정책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정책 결정자들의 회고록을 어떻게 해석하

---

41 위의 글, p. 3.

42 위의 글, p. 3.

43 위의 글, p. 5, p. 27.

44 위의 글, p. 4.

고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sup>45</sup>

게다가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을 경제적인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다룬 저서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총 약 1만 권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련 기관 대학·연구소·도서관 등에 널리 배포했다.<sup>46</sup> 민감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결부된 내용의 연구 및 대외 발신 활동을 싱크탱크가 담당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5. 결론

이 장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유식자 간담회 자료와 ‘외교·안전보장조사 연구사업비보조금’ 사업 현황,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의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현황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참여도와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TTCSP 세계 싱크탱크 평가에서 올해의 싱크탱크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활동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 프로그램인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사업에서는 핵심 연구 주제별 일본 외교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

45 위의 글, p. 4.

46 위의 글, p. 4.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1.5트랙 협력을 구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에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6년 사업 개시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으며,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 문제이자 난제인 센카쿠, 독도, 동해 문제 등 일본의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구 사업으로는 주제별, 지역별로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무성으로의 정책 제언을 주도하고 있다. 특정 시기의 연구사업 참여자를 횡단적으로 분석하면 당시의 일본의 국제관계, 외교안보전문가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다카하라 아키오, 가와시마 신, 모리 사토루, 호소야 유이치 등이 있으며, 특히 중국연구자들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전문가, 유럽전문가, 러시아전문가, 이슬람전문가, 안보전문가 등이 활약하고 있다.

주제 면에서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양안보, 경제안보, 기술안보 개념 등이 제시되었고, 신안보법제 가이드라인과 영역횡단적 안보거버넌스 확립이 제안되었다. 미·일 동맹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스마트파워 동맹 과제를 제시했으며,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국제질서 구상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가치 외교, 법의 지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열리고 안정된 해양, 기축국가 일본 등의 개념들을 제시한 시도들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우크라이나 위기와 일본의 지구본 부감외교를 다룬 과제가 선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형 싱크탱크의 역할은 새로운 정보 및 지식 획득, 싱크탱크 네트워크 강화, 일본 외교로의 공헌, 대외 발신 강화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는 분야별 창의적인 비전과 개념들을 형성하여 유식자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이른바 ‘창조적 구상력’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증진하며 ‘새로운 관민협력 모델’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해외 싱크탱크와의 분야별, 기관 간, 연대 및 연계를 확대해 나가는 ‘글로벌 연계 추진’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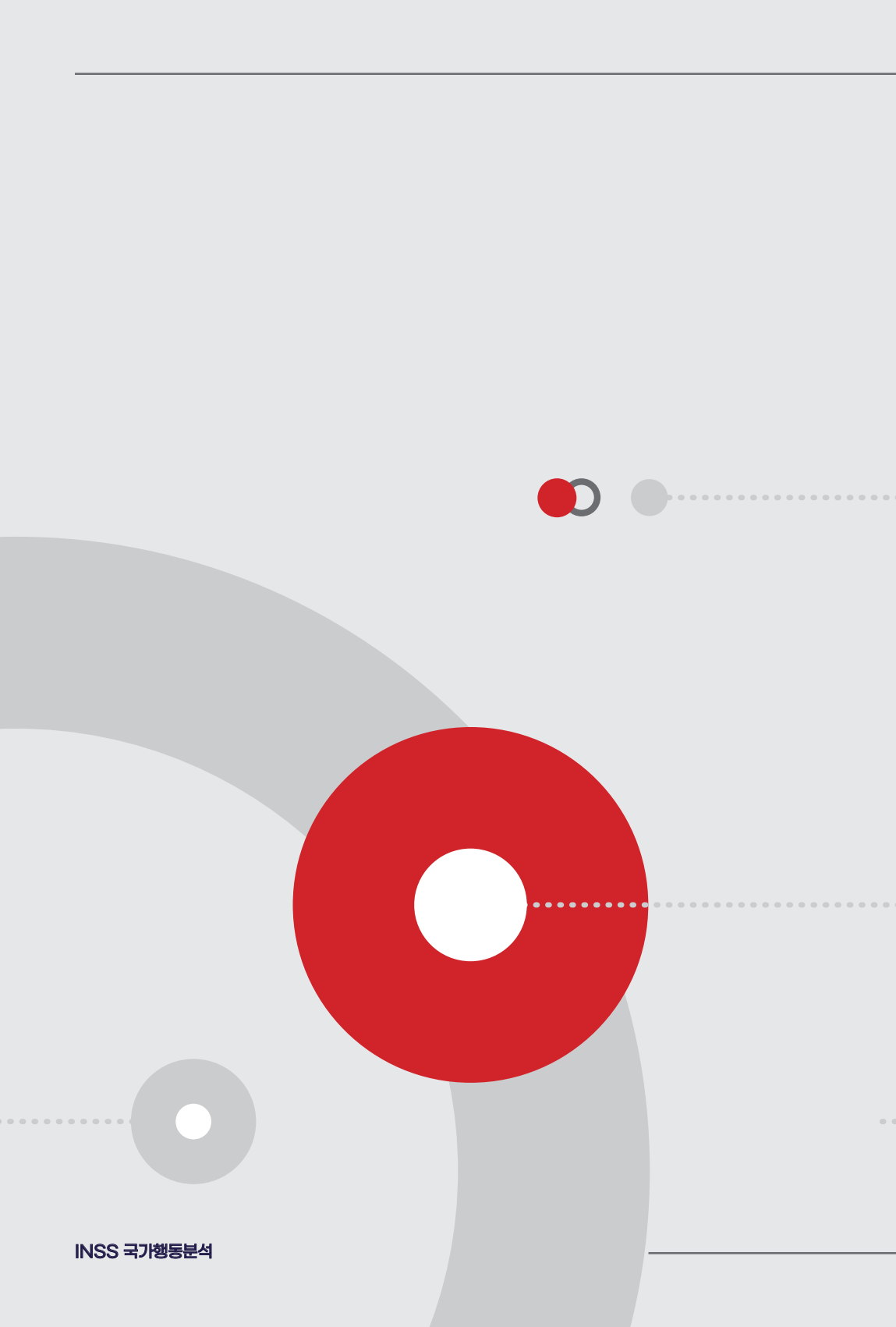
외무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제4유형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다. 전문가 그룹을 통한 창조적 발신력과 대내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일본 국가이익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일본이 표방한 새로운 관민협력의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후속연구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의 내용과 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일본형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싱크탱크가 외무성의 하부기구처럼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단지 일본 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차원에 제한된 대내외 발신과 여론 조성만으로는 싱크탱크의 존재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제언 역할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미래에 필요한 창조적 구상력을 한발 앞서 제시하고 이를 발현해 나가는 부분이 강조될 때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민주주의와 국제연대를 더욱 강조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

●

깨하는 외교와 글로벌 연계를 실현하는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와 외무성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는 ‘창조적 구상력’과 ‘글로벌한 연계 추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부와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민간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발신하는 새로운 관민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일본형 싱크탱크가 일본 외무성에 단순히 종속되는 위치가 아닌 외교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외무성의 싱크탱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Part

# 05

## 『國際問題』의 일본 외교안보 담론 분석

이정환  
(서울대학교)

1. 서론

2. 2000년 이후 『國際問題』의 내용과 저자

3. 『國際問題』의 국제질서와 일본 외교

- 3-1.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옹호자
- 3-2.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의 관계성

4. 『國際問題』의 중국 인식과 안보 담론

- 4-1. 관여적 대중정책의 지속
- 4-2. 대중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전환
- 4-3. 대중정책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5. 『國際問題』의 동아시아 인식 변화

- 5-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시대
- 5-2. 동아시아 지역주의로부터의 이탈
- 5-3.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막

6. 결론

## 1. 서론

『国際問題(국제문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월간지로 1960년부터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발행물이다. 본 연구는 『国際問題』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일본 보수주류의 외교안보 담론의 성격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国際問題』가 일본 보수 주류의 외교안보 담론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창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国際問題』의 대표성이다. 『国際問題』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월간지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의해 주도되어 1959년 창설된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외무성 OB들이 대대로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 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国際問題』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지의 성격이 아니므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영향력과 『国際問題』의 중요성을 일치해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国際問題』는 일본 주류 학자들이 당면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내는 무대로서 기능해 왔고,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영향력은 『国際問題』의 일본 외교안보 담론에서 가지는 대표적 위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国際問題』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国際問題』의 시의성에 있다. 일본 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발행물은 일본국제정치학회의 『国際政治(국제정치)』이다. 하지만, 학문적 연구 성과를 담아내는 『国際政治』에는 당장 직면한 현안에 대한 기민한 분석이 제기되지

않는다. 반면에 『國際問題』의 글은 대부분 학계 인사들이 작성하지만, 학문적 엄정성에 입각한 논리적 분석보다 대상 이슈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國際問題』는 일본 내에서 미국 외교협회의 『포린어페어스』와 유사한 성격과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國際問題』는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그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일본 주류 학계의 의견이 제시되는 곳이며,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점에서 『國際問題』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담론 창출의 주무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동안의 『國際問題』에 실린 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일본 주류 학계의 시선을 살피고자 한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인식과 안보적 대응에 대한 이슈와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 방향에 대한 이슈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전에 우선 『國際問題』에 실린 글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 2. 2000년 이후 『國際問題』의 내용과 저자

『國際問題』는 2005년까지 매년 12번 발행되었으나, 2006년에는 예외적으로 8번 발행되었다. 2007년 이후에는 매년 10회 발행 체제로 유지되어 왔으나, 2021년에는 7번만 발행되었다. 2000년부터 2021년 21년 동안 『國際問題』는 총 227회 발행되었으며, 그동안 실린 글은 1,442편(서평, 연

보, 문헌 목록 등 포함)이다. 서평, 연보, 문헌 목록 등을 제외한다면, 매 호마다 통상 4~5편 정도의 글이 실렸다. 『國際問題』는 자유기교로 구성되지 않고, 매 호마다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일관된 구성을 취하고 있다. 21년 동안 227회의 주제 리스트와 이에 대한 저자의 분류는 <부록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國際問題』의 주제를 분류해 보면 『國際問題』의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國際問題』에는 일본 외교의 방향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호, 미국의 국내 변동과 대외정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호, 중국의 국내 변동과 대외정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호가 매년 빠지지 않는 편이다. 일본의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러한 구성은 당연해 보인다. 한반도의 변동과 한·일 관계에 대한 주제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주는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에 대한 분석 중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관련 주제를 포함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주제도 자주 발견되며, UN 등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도 발견된다.

크게 보아 일본 외교, 지역, 이슈, 거버넌스로 주제가 분류되는 가운데, 미·중, 동아시아, 한반도, 경제, 안보, 역사인식을 지역과 이슈와 별도로 분류했을 때, 총 9개의 주제의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4편은 주제가 중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총 231개의 주제가 거버넌스 17회, 경제 24회, 동아시아 16회, 미·중 40회, 안보 15회, 역사인식 3회, 이슈 51회, 일본 외교 24회, 지역 36회, 한반도 5회로 분류된다. 넓게 볼 때 경제, 안보, 역사인식을 포함하면 이슈는 93회, 미·중, 동아시아, 한반도를 포함하면 97회가 된다. 『國際問題』는 지역 현안에 대한 기민한 분석과 외교안보의

과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분석이 비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2000~2021년 『國際問題』의 주제 분류

주제 분류		횟수	비율(%)
일본 외교		24	10.4
거버넌스		17	7.4
광의 지역	미·중	40	17.3
	동아시아	16	6.9
	한반도	5	2.2
	기타 지역	36	15.6
광의 이슈	경제	24	10.4
	안보	15	6.5
	역사인식	3	1.3
	기타 이슈	51	22.1
총		231	100

22년 동안 278호 1,442편 기사에 기명인 저자 및 참여자는 총 1,621에 이른다. 좌담회, 인터뷰 등과 문헌 소개 목록에 다수 인원의 성명이 함께 표시된 결과로 사실 대부분의 기사는 단독으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헌 소개 목록을 작성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실무진을 배제하면, 총 791명이 22년 동안 『國際問題』 기사 작성에 참여했다. 한 번 참여한 저자는 570명, 두 번 참여한 저자는 124명, 세 차례 이상 참여한 저자는 97명이다. 세 차례 참여한 97명 중 3회 참여 39명, 4회 참여 23명, 5회 참여 15명, 6회 이상 참여 20명이다. 세 차례 이상 참여한 97명의 명단은 〈부록 2〉로 정리했고, 다섯 차례 이상 참여한 2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8〉 2000~2021년 『国際問題』 다수 참여 20명

연번	이름		출연횟수	출생연도	배경
1	山本吉宣	야마모토 요시노부	13	1943	정치학자
2	田中明彦	다나카 아키히코	10	1954	정치학자
3	立山良司	다테야마 료우지	9	1947	정치학자
4	浦田秀次郎	우라타 슈우조로	9	1950	경제학자
5	五十嵐武士	이가라시 다케시	8	1946	정치학자
6	中西寛	나카니시 히로시	8	1962	정치학자
7	添谷芳秀	소에야 요시히데	8	1955	정치학자
8	村瀬信也	무라세 신야	8	1943	법학자
9	菊池努	기쿠치 츠토무	7	1953	정치학자
10	木村福成	기무라 후쿠나리	7	1958	경제학자
11	中山俊宏	나카야마 도시히로	7	1967	정치학자
12	下斗米伸夫	시모토마이 노부오	7	1948	정치학자
13	横田洋三	요코타 요조	7	1940	법학자
14	久保文明	구보 후미아키	6	1956	정치학자
15	納家政嗣	나야 마사쓰쿠	6	1946	정치학자
16	渡邊昭夫	와타나베 아키오	6	1932	정치학자
17	神谷万丈	가미야 마타케	6	1961	정치학자
18	五百旗頭眞	이오키베 마고토	6	1943	정치학자
19	天児慧	아마코 사토시	6	1947	정치학자
20	浅田正彦	아사다 마사히코	6		법학자

이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国際問題』는 일본 국제정치학 보수 주류의 무대이다. 우익적 성향의 지식인 그룹과 리버럴 계열 학자 그룹이 아닌 중도보수적 성향의 국제정치학 대표자들이 『国際問題』를 이끄는 중추인 것으로 파악된다.

### 3. 『国際問題』의 국제질서와 일본

#### 3-1.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옹호자

『国際問題』는 20세기 후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일본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본 외교정책의 중심 과제는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되도록 국제사회에 협조하는 것이라는 일본 주류적 외교담론의 입장을 철저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일본 외교의 대응 방향성을 논하는 『国際問題』의 좌담회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정기적으로 실렸던 국제정세의 변동과 일본 외교에 대한 좌담회는 최근 10여 년 동안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교에 대한 권두 논문 등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협조하는 일본 외교라는 방향성은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国際問題』에서 나타나는 국제구조 변동 요인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찰이다. 다만,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요인이 시기별로 달라져 가고 있으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일본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国際問題』가 보여 준 국제구조 변동에 대한 논의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핵심적 위협 요인은 테러리즘이다.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탈냉전기에 강화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주적이 미국 가행위자인 테러리즘으로 변동된 것에 대해 초점을 놓으며, 일본의 대테러

전에서의 대미 협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테러리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동 무슬림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논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와 대비되는 지역이 동아시아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이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관계, 경제관계에서 여러 난점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존재했다.<sup>1</sup>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부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당화되는 성격이 발견된다.

### 3-2.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의 관계성

하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연속성,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의미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변동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일본 외교담론상의 갈등 구조는 2009년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의 논문과 2010년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의 논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나카 히토시와 기타오카 신이치 모두 일본 외교의 중심점이 국제질서에의 협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서 번영을 이룩한 정체성에 입각한 외교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수사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또한 개발 원조를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1 谷内正太郎, 田中明彦, 田中直毅, 山本吉宣, “[座談会] 國際情勢の動向と日本外交”, 『國際問題』 第504号 (2002), pp. 2-20.

에서도 공통된다. 두 논문의 차이점은 일본이 유지해야만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와의 관계성이다. 다나카 히토시는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행이 일본 외교에서 사활적임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 다나카 히토시에게 동아시아 지역은 협력을 통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가 진전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반해, 기타오카 신이치는 2010년대 일본 외교를 논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공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타오카 신이치에게 중국의 강권적 태도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부합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회의적이다. 대신에 UN 외교와 개발협력외교를 강조하고 있다.<sup>2</sup>

2020년경에 들어서는 2010년경에 기타오카 신이치가 보여 준 인식이 일본 주류 국제정치학자의 일반적 국제정치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교란이 자유주의 세계 중심부인 미국과 영국에서 트럼프 정권 탄생과 브렉시트의 사례에서도 발견되지만, 결국 핵심은 중국의 부상에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자라는 판단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중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함께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은 일반적이다.<sup>3</sup> 다만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일본 외교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중·일 협력의 공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길항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기타오카 신이

2 田中均, “巻頭エッセイ ◎国際政治の構造変動と日本”, 『国際問題』 第586号 (2009), pp. 1-4; 北岡伸一, “巻頭エッセイ ◎2010年代の日本外交”, 『国際問題』 第588号 (2010), pp. 1-3.

3 田中明彦, “巻頭エッセイ ◎2020年の世界と日本”, 『国際問題』 第688号 (2020), pp. 1-4; 中西寛, “巻頭エッセイ ◎2020年の劈頭に考える国際秩序の行方”, 『国際問題』 第690号 (2020), pp. 1-4.

치가 최근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경합하는 중국이 일본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부정론을 전개하면서, 역사인식 차원에서 중국이 ‘역사 새로 쓰기’를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기타오카 신이치의 중국 인식이 전략론을 넘어서 문명론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더불어 기타오카 신이치는 중국과 한국을 ‘역사 새로 쓰기’에서 동일시하고 있다.<sup>4</sup> 전략론이 아닌 이념론과 문명론에서, 국제질서와 중국의 부상을 판단할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사이의 연동 인식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4. 『国際問題』의 중국 인식과 안보 담론

### 4-1. 관여적 대중정책의 지속

최근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적 과제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国際問題』에서도 이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관여적 대중정책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国際問題』의 2000년 1월호의 구체적 테마는 ‘중화인민공화국 50주년과 21세기’였고, 이 호의 좌담회에서 중국의 부

4 北岡伸一·宮家邦彦·中満泉·佐々江賢一郎, “[特別座談会] 緒方貞子氏が目指した国際社会, 岡本行夫氏が目指した日本外交”, 『国際問題』第700号 (2021), pp. 2-20.

상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중국 봉쇄는 위험하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sup>5</sup>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속은 2000년대 중·일 관계의 애로를 야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왜 고이즈미 총리가 재임 중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은 쉽지 않다. 2005년 종전 60주년 고이즈미 담화는 10년전 무라야마 담화와 차이 없이 그대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사수정주의적 신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1년 8월 13일, 2002년 4월 21일, 2003년 1월 14일, 2004년 1월 1일, 2005년 10월 17일, 2006년 8월 15일로 집권 6년 동안 매년 1회씩이며, 특징적인 점은 퇴임 예정 상태에서 8월 15일에 참배를 감행했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는 당연히 한국·중국과의 외교 마찰의 원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다. 1990년대 고이즈미와 더불어 YKK로 불리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등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했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하는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에 의구심을 가지는 가토와 같은 인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리의 참배가 불러오는 외교적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컸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도 외교적 차원에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

5 國廣道彦·田中明彦·岡部達味, “座談会 中華人民共和國: その五〇年と二一世紀”, 『國際問題』 第478号 (2000), pp. 2-22.

이 자민당 내에 커져 갔다.<sup>6</sup>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지속은 2006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총재로 선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스쿠니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가운데 집권 1년 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sup>7</sup> 그리고 이것은 고이즈미 정권기에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2006년 아베의 중국 방문 이후 2009년까지 중·일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의 가치관 외교론에 입각한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균형적 정책 지향을 지니고 있었고, 가치관 외교론을 반중 견제 구상이라는 관측도 꽤 컸다. 제1기 아베 집권 기간이 1년의 단명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었다면, 제1기 아베 정권의 대중국 정책의 성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2007년 아베의 퇴임 후 총리에 취임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는 중국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지속했고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적이어서, 2008년 5월의 ‘전략적 호혜관계’ 공동성명과 8월의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합의 등의 성과를 내었다. ‘전략적 호혜관계’ 공동성명은 중·일 양국의 관계를 기존의 파트너십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상징성을 갖는

6 中西寛, “改革から構築へ—小泉外交の経験と日本外交の課題”, 『国際問題』 第550号 (2006), pp. 4-15.

7 佐藤考一, “中国の対ASEAN関係とアメリカ: 地域主義をめぐる国際政治”, 『国際問題』 第559号 (2007), p. 39.

다. 때문에 중·일 관계의 제4의 문서로 불린다.<sup>8</sup>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내세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중국에 대한 관여 지향과 중첩되어 있다. 2009년 하반기 하토야마 정권의 친중적 자세는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그해 12월 143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된 대규모의 수행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던 이벤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망설임도 보였지만, 하토야마 내각과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sup>9</sup>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2010년 6월 사퇴하고 만다.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당내 정책일치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나 중국에 대한 관여 지향의 태도가 민주당 내에서 폭넓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 내에는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균형 지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도 다수 존재했다.

#### 4-2. 대중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전환

일본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영토 분쟁에 대해 미·일 안보체제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외적 균형전략을 적극 추구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센카쿠의 미·일 안보조약 대상지역이라는 발언을 요청했고, 오바마 정부 관

8 高木誠一郎, “日中「戰略的互惠關係」進展と課題”, 『國際問題』 第569号 (2008), pp. 1-10.

9 다카하라 아키오·마에다 히로코, 『중국근현대사 5: 개발주의 시대로, 1972-2014』, 오무송 옮김, (서울: 삼천리, 2015), p. 178.

계자들은 이에 응해 주었다.<sup>10</sup> 2010년 이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센카쿠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꾸준히 명백하게 언급해 오고 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은 센카쿠에 적용된다고 언급했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동성명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센카쿠에 적용되는 것’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센카쿠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언급했다.

양국 갈등의 중심에 센카쿠 문제가 있지만, 2013년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언행과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도전적 정책변화도 양국 관계를 경색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봄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 아베 총리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중·일 관계를 더욱 갈등적으로 만들었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는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취임 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대상으로 신형대국관계 개념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위상을 새롭게 하려고 시도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여 주는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는 대응을 추구했다.

제2기 아베 내각의 대중국정책 기조는 제1기 시절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잠재적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적 균형 전략의 성격이 강하고, 그

10 森聡, “オバマ政権2年目の対外政策の実績”, 『国際問題』第599号 (2011), pp. 25-41.

중심에 미국, 일본에 호주, 인도를 더한 4국의 유사 동맹관계 형성 노력이 있다. 제1기 아베 내각에서도 강조되던 4국 연대는 제2기 아베 내각에서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라는 가치관 외교의 성격을 가진다. 제2기 아베 내각 출범 하루 뒤인 2016년 12월 27일에 『Project Syndicate』에 아베 본인의 이름으로 기고된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논하고 있다.<sup>11</sup>

#### 4-3. 대중정책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아베 내각은 대중국 정책을 양국 관계의 현안으로 위상 지우지 않고,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를 '보편적 가치' 옹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논리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2006년 제1기 아베 내각에서 '자유와 번영의 호', '두 바다의 합류'의 개념으로 상징되던 가치관 외교 기반의 지역 전략구상은 제2기 아베 내각 시기에 '인도·태평양'의 개념 속에 재탄생되었다. 2016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두 대양(태평양과 인도양), 두 대륙(아시아와 아프리카)을 결합하는 지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민주

11 Abe, S.,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검색일: 2022. 3. 19.).

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자유와 개방성이란 규범적 성격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목표를 위한 연대와 일본의 관여를 말하고 있다. 2017년 외교청서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으로 반영되었다.<sup>12</sup>

하지만,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은 2018년에 관계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2018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에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했고, 10월에 아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다자간 정상회의 참석의 목적이 아닌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베 총리의 2018년 중국 방문에서 중·일 양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총 52개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제1회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아베 총리는 해외인프라시장에서 중·일 양국의 협력의 의의와 이를 통한 중·일 관계 개선을 논하고 있다.<sup>13</sup>

제2기 아베 내각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의 각의결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오래된 정부 입장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맹군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센카쿠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무력공격사태이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닌 미·중 사이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도 존립위기사태의 개념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

12 菊池努,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 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第687号 (2019), pp. 1-6.

13 “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 安倍総理スピーチ”,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 (검색일: 2022. 3. 19.).

다. 더불어 주변사태의 새로운 이름인 중요영향사태는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역 지원이 가능한 유사사태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 대 타이완해협이 주변사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면, 남중국해의 유사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4</sup>

『國際問題』에 나타난 중국 인식과 중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의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 전략은 일본의 지난 20여 년간의 대중국 정책의 성격 변화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國際問題』로 대표되는 외교안보담론이 일본 정부의 대중국 외교안보정책의 전방에서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반대로 일본 정부의 대중국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는 후방적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 5. 『國際問題』의 동아시아 인식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정책이다. 2000년 전후에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지역협력에 나름 적극적 모습을 보이던 일본은 중국의 부상 속에서 갈수록 배타적 성격의 제도적 균형을 위해 지역 다자협력 력들을 활용하고자 했고, 2010

14 神保謙, “インド太平洋の安全保障 戦略空間としての収斂”, 『國際問題』 第687号 (2019), pp. 7-16.

년대 들어서는 동아시아 단위가 아닌 인도·태평양 단위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주의 정책에서 전면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5-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시대

『國際問題』에는 200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통합과 지역협력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지역주의 경제협력은 무역이 아니라 금융통화 영역에서 먼저 제도화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국면에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시스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및 ASEAN 등 역내의 기존 협력포럼들이 한계를 노출하면서 금융통화 분야에서 동아시아를 단위로 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전되었다. 글로벌화된 금융환경하에서 국가들의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증가하여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높음을 실감한 상황에서 미국 및 IMF 중심의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거버넌스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체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가운데, 독자적인 역내 금융협력시스템 구축의 동기가 커졌다. ASEAN+3는 특정 국가의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ASEAN+3가 급속히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라 할 수 있다. ASEAN+3는 금융위기의 극복이라는 당면과제를 통해 제

도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sup>15</sup> 당시의 경제적 위상 측면에서 일본의 주도성은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주의 진전에 중요한 요소였다. 일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미야자와 플랜을 통해 ASEAN+3 플랫폼의 CMI 성과를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sup>16</sup> ASEAN+3 정상회담이나 재무장관회의 등의 중요 의제 구성 등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었다.

2000년대 초반은 동아시아에서 FTA 도미노가 발생한 시대였다. 한국은 1998년에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 1999년에 뉴질랜드 및 칠레 등에 FTA를 제안했다. 한편, 1999년 APEC 회의에서는 싱가포르·뉴질랜드, 싱가포르·멕시코, 일본·멕시코, 일본·싱가포르 FTA가 제안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협상이 개시하여 2001년 1월 효력이 발휘하여 역대 최초의 양자 FTA가 탄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16개 동아시아 회원국 전체적으로 150여 개의 양자 FTA가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양자 FTA 붐에서 지역주의 주도권에 대한 중·일 경쟁이 발생했다. 중·ASEAN FTA 교섭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구도 속에 동아시아 양자 FTA가 확대되었다.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ASEAN+3에서 중·ASEAN 자유무역권 구상을 제안한 이후,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2002년 1월 ASEAN 순방에서 일·ASEAN 포괄적 경제제후 구상을 제안하며 대응했다. 일본은 FTA가 지역주의 추구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견제적 전략적 차원에서 양

15 菊池努, 「東アジア」地域主義の可能性: ASEAN+3(日中韓)の経緯と展望, 『国際問題』 第494号 (2001), pp. 16-33.

16 小川英治,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金融・通貨協力」, 『国際問題』 第553号 (2006), pp. 3-21.

자 FTA를 추구했다.<sup>17</sup>

## 5-2. 동아시아 지역주의로부터의 이탈

일본 지역주의 외교의 역사에서 2000년대 초반은 지역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단위 중심성에서 이탈의 단초가 발견되는 시대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단위에 대한 유보적 태도로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 야기한 변화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지역주의 제도화에 적극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의 태도가 유보적으로 변화했다. 양자 FTA 붐 속에서 2000년 중국이 ASEAN에 FTA 제안하고 2001년 이를 실현하는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일·ASEAN FTA로 대응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단위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지역주의 외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는 FTA 다자화를 둘러싼 중·일 경쟁을 야기했다. FTA 다자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중국은 2003~2004년 말레이시아와 함께 ASEAN+3를 단위로 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의 주도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ASEAN+6의 단위를 상정하는 동아시아포괄적경제연대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호주, 뉴

17 大矢根聡, “東アジアFTA 日本の政策転換と地域構想: 「政策バンドワゴン」から「複雑な学際」へ”, 『国際問題』第528号(2004), pp. 52-66.

질랜드, 인도가 포함된 ASEAN+6는 일본의 지역주의 외교의 단위가 '동아시아'에서 '확대동아시아'로 변모했음을 상징한다.<sup>18</sup> 일본 외교 대전략에 대한 국내적 논의 구도에서 '확대동아시아' 구상은 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즉 '확대동아시아' 지역범위에 포함되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되는 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인도·태평양'과 연계된 QUAD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협력에 방점을 찍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고이즈미 정권기의 일본 외교에서 혼재되어 있던 '확대동아시아' 구상과 가치관 외교론 중에서 제1기 아베 정권은 가치관 외교론을 중심으로 삼았다. 2000년대 중반 제1기 아베 정권기는 가치관 외교론을 배경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이 탄생한 시점이다. 전후 일본 외교사에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는 언제나 강조되어 왔었다. 하지만, 제1기 아베 정권은 일본 외교의 일상적 요소로 간주되던 보편적 가치들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는 가치관 외교론을 정립했다. '인도·태평양' 외교의 배후에는 가치관 외교론이 존재하며, 이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의 도래라는 국제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이려는 차원에서 유사하지만, '확대동아시아' 구상과 가치관 외교론에서 호주, 인도의 의미는 매우 상이하다. '확대동아시아' 구상이 가지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경제 중심성은 중국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가치관 외교론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단위의 지역주의 외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

18 大庭三枝,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制度化と日本外交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パワーバランスの変容のなかで”, 『国際問題』 第588号 (2010), p. 54.

●

편적 가치를 중심에 놓았을 때, 기존에 경제 중심으로 묶여 있는 동아시아 지역 단위의 모든 국가들과 함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중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번영의 호, 두 바다의 합류 지역 구상에서 핵심 국가는 미국, 호주, 인도이고, 중국은 주변화되어 있었다. 가치관 외교론의 자유와 번영의 호, 두 바다의 합류는 더이상 동아시아 협력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았다. 가치관 외교론에 입각한 자유와 번영의 호, 두 바다의 합류를 제기한 제1기 아베 정권의 외교는 탈‘동아시아’성의 성격을 지닌다.

### 5-3.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막

2012년 12월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은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를 통해 ‘자유와 번영의 호’를 계승하며, 가치관 외교론을 복귀시켰다. 제2기 아베 정권의 글로벌 대전략은 제1기 시절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적 균형 전략 차원에서, 미국, 일본에 호주, 인도를 더한 4국의 유사 동맹관계 형성 노력이 중심에 있다. 제2기 아베 내각 출범 하루 뒤인 2012년 12월 27일에 『Project Syndicate』에 아베 본인의 이름으로 기고된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논하고 있다.

2012년 재집권하면서 2000년대 가치관 외교론을 되살려 ‘아시아의 민주적 다이아몬드’ 슬로건을 내세웠던 아베 정권은 이를 발전시켜 ‘인도·태

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아프리카개발 회의(TICAD)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두 대양, 두 대륙을 결합하는 지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자유와 개방성이라는 규범적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외교청서』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특집으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6년 인도 방문 시에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던 인도·태평양 전략 아이디어가 제2기 아베 정권에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sup>19</sup>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과 유사하다.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원칙, 규범, 가치(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우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등 국내질서 및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적 성격, TPP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범)에 초점을 둔 지역 구상이라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있다.<sup>20</sup> 인도·태평양 전략과 TPP 모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는 규범성을 강조했다. 2016~2017년에 공식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가치관 외교론이 구체화된 것으로 탈아시아적 성격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sup>21</sup>

제2기 아베 정권의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는 일본, 미국, 호

19 田中明彦,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の射程”, 『外交=Diplomacy』 第47号 (2018), pp. 36-41; 中西寛, “日本外交におけ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外交=Diplomacy』 第52号 (2018), pp. 12-19.

20 細谷雄一, “リベラルな国際秩序と日本外交”, 『国際問題』 第690号 (2020), pp. 5-12.

21 佐橋亮, “米中对立と日本: 関与から戦略的競争に移行するアメリカを中心に”, 『国際問題』 第688号 (2020), pp. 5-17.

주, 인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명시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4개국의 연대를 아베는 남중국해의 '베이징호수'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했었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이며, 따라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의 QUAD 협력의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퇴진 시점에서 공식화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매우 유기적으로 부합하는 성격을 지녔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이나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균형 전략의 성격을 강조하고, 2018년 들어 인도·태평양에 '전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덧붙이면서 그 근본적 딜레마가 부각되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이 미국을 통해 군사적 균형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일본에게 연루의 위험 인식이 강화된 것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정합성 있게 부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성격으로의 인도·태평양 개념의 차용은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일본의 대중국 접근이 이해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이 염두에 두는 지리적 공간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해양 실크로드의 대상 지역과 중복된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의 중요 내용이었던 개발협력 증진을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지경학적 차원의 대중 접근을 시도했다. 제3국 인프라 투자에서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대상국 재정의 건전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의 보편적 규범성을 유지하는 일관된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만, 대중 균형적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sup>22</sup>

이러한 대중 접근 속에서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략’ 용어 대신 ‘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도·태평양 외교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의 배려의 모양새를 만들면서 인도·태평양 구상과 일대일로의 중첩을 모색했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그리고 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구상’도 빠지고, ‘인도·태평양’으로만 기술을 다시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창출하는 위험성을 헛징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발견된다. 제2기 아베 정권의 하반기에는 미·일 관계의 강화 속에서 중·일 관계도 일정하게 개선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 경쟁 시대에 일본의 외교적 공간 확보에 일정하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은 국제질서에 대한 협조라는 대의로 논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고, 이 기조는 스가 정권은 물론 기시다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주의의 슬로건은 트럼프 시대에 구미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토대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버리고 있는 국제질서 수호에 일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한편 국제주의의 성격이 서구 지향적 일변도가 아닐 수 있다는 모호성을 제2기 아베 정권 후반부에 보여 주면서 일본은 중국, ASEAN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루 딜레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탈‘동아시아’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 지역주의 외교 역사에서 ‘인도·태평양’이 가지는 차별성이 대폭적으로 퇴색되었다.

22 添谷芳秀, “日本のインド太平洋外交と近隣外交”, 『国際問題』第688号(2020), pp. 18-32.

‘인도·태평양’의 규범성이 줄어들면서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확대 적용된 ‘확대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이 동일화되어 가는 상황이 제 2기 아베 정권 후반기에 발견된다. 아베 정권의 유연한 외교 자세는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와 같이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중도보수 관점에서 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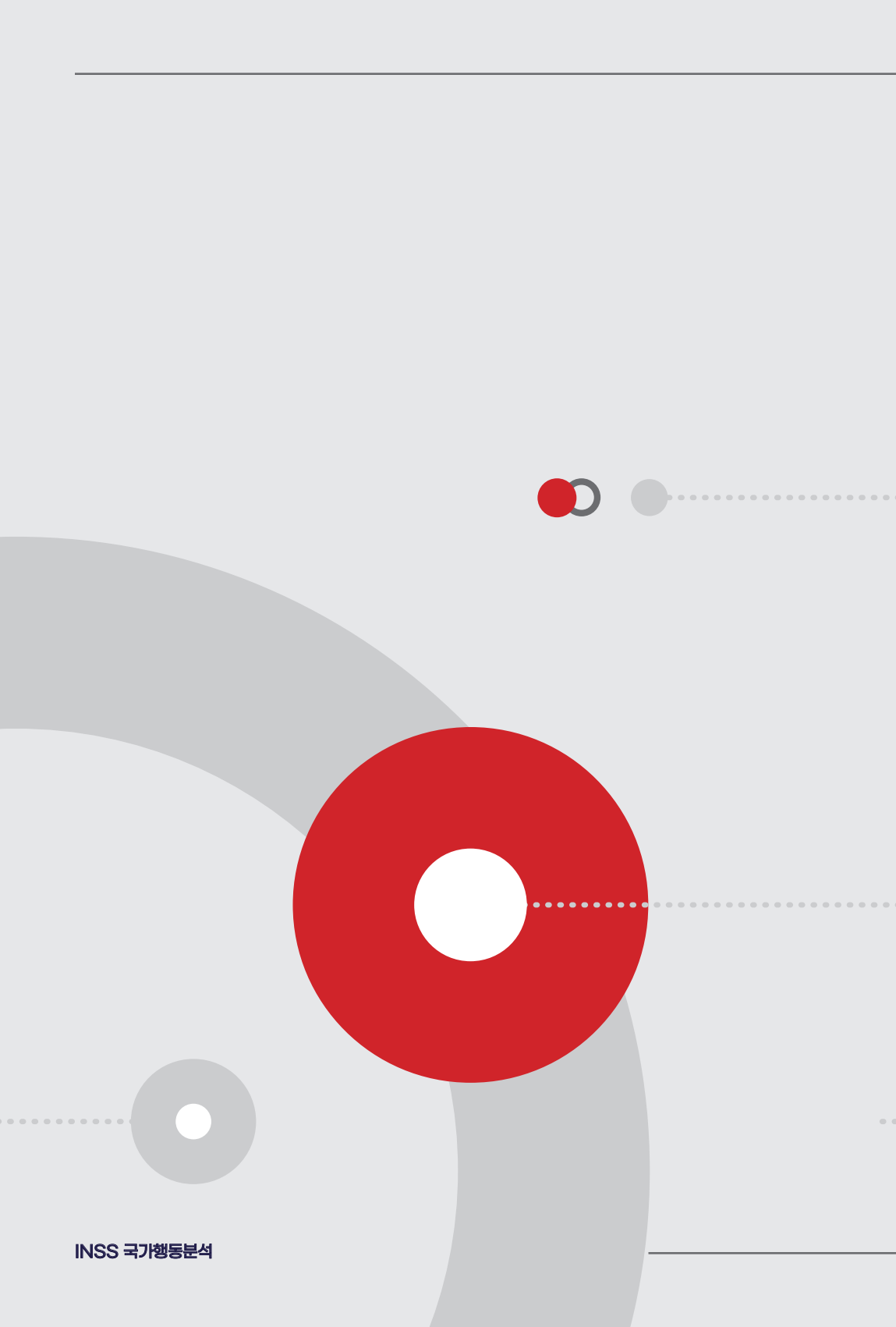
## 6. 결론

『国際問題』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매우 효과적인 창으로 기능한다. 『国際問題』에 나타난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함의는 일본 정부의 정책 내용과 일치감이 크다. 이는 『国際問題』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주류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国際問題』의 담론이 외교안보 정책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소한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정당화 기제임에는 틀림없다.

『国際問題』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의 대일 인식의 정형화된 구도를 넘는 것과 연계된다. 한국 내의 대일 인식에는 보수우경화론의 획일주의적 관점이 강하다. 역사수정주의와 결부된 우익적 정책 구상이 외교안보 정책 내용에 반영된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 일본의 정책 과정에서 정책 관여 엘리트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중요하게 기능하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의 담론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익 세력의 담론이 일본 내 대중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은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 과

정에서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의 장악력은 여전히 강하며, 이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은 우익 세력의 정서적 신념주의와는 차별화된 전략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적 태도는 『國際問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들의 정책 담론과 보수 주류 엘리트들의 정책 담론 사이에 강한 단절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世界(세카이)』는 많은 우익 잡지들과 대척점에서 있지만, 『國際問題』와 『世界』는 상호 간에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무관계의 관계로 보인다. 주류 보수 담론과 리버럴 담론 사이의 무관계의 상황이 현재 일본 외교안보정책 구도의 가장 본질적인 우려 사항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Part

# 06

## 『世界』의 외교안보론\*

김승배  
(부경대학교)

### 1. 서론

### 2. 평화헌법의 수호

- 2-1. 평화헌법의 옹호자
- 2-2. 개헌반대와 반아베 전선

### 3. 미·일 관계의 조정

- 3-1. 미·일 안보와 헌법
- 3-2. 미·일 안보와 기지
- 3-3. 미·일 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 4. 중·일 관계의 심화

- 4-1. 대중 포괄적 관여 정책
- 4-2. 중국위협론 비판
- 4-3. 중국 이해를 통한 중·일 신뢰 조성

### 5. 지역 구상의 기반

- 5-1. 한반도와 일본의 지역구상
- 5-2. 남·북 정상회담과 일본
- 5-3. 균형자 일본의 역할

### 6. 결론

\* 이 글은 『한림일본학』 제40집(2022)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가필한 것임.

## 1. 서론

일본국 헌법은 연합군 점령기인 1946년 11월에 제정되었다. 이미 소련이나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부상되어 있었지만, 일본국 헌법은 제국 일본의 권력구조 개혁에 특화한 것이었다. 일본국 헌법은 제1조에 천황이 일본과 일본 국민의 상징임을 내세웠지만, 헌법의 이념을 제시하는 전문(前文)에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헌법 9조에 있듯이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부인한다. 평화헌법의 탄생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에 따른 대한민국과 북한의 탄생(1948년), 국공 내전에 승리한 중국공산당에 따른 중국의 탄생(1949년), 6·25전쟁 발발(1950년)은 동아시아 냉전 이데올로기를 구현시켰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날에 체결되어, 1960년에 개정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탈냉전기 및 21세기에도 유지되어 있다. 평화헌법과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내적·국제적 입지를 형성했다. 이른바 ‘9조-안보체제’는 일본의 외교, 안보, 사회, 정치 규범을 형성했는데, 이는 헌법 내에서 미·일 동맹을 활용하는 틀을 마련했다.<sup>1</sup> 그렇지만 비록 국가의 외교안보가 현실 정치의 담당자들에 의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다른 담론 및 인식의 측면을 보는 것은 일본의 국가행동을 이해하는 데

1 酒井哲哉, “9条=安保体制”の終焉: 戦後日本外交と政党政治, 『国際問題』 第372号 (1991);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直す: 9条・安保体制を越えて』 (東京: NHKブックス, 2016).

쟁점의 가시화를 가능케 한다.

이 글은 일본의 전후 논단을 주도한 종합 잡지 『世界(세카이)』에 주목한다. 1946년 1월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창간된 이 잡지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과 대중 잡지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발간되었다. 초기 『世界』의 논지를 지탱한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는 창간호에서 일본 국민의 “사회적 도덕”, “공민적 도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극단적인 국가주의의 해악”을 비판한 바 있다.<sup>2</sup> 『世界』의 존재감은 1949년 3월에 정식으로 결성된 ‘평화문제담화회(平和問題談話會)’와 연계되며, 1951년 10월호에서 일본의 강화문제(講和問題)를 특집으로 다룬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世界』는 이와나미서점의 위신과 함께 “진보적 지식인”의 근거지로서 지적 공동체를 형성했다.<sup>3</sup> 1960~1970년대에는 진보·혁신 계열의 잡지로서 반미(反美), 친중(親中), 반우익(反右翼) 성향을 보였다.<sup>4</sup> 이후에도 『世界』는 일본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세계적 문제들을 망라해 왔지만, 그 핵심은 전후에 구축된 평화국가 일본의 양태에 있고, 반(反)전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한 『世界』는 21세기 일본의 외교안보를 어떻게 보는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평화헌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규범인 헌법은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핵심이며, 대외관계에서는 국가정체성(state identity)으로 작동한다. 평화헌법은 태

2 安倍能成, “剛毅と眞實と知慧とを”, 『世界』創刊號(1946. 1.), pp. 14-15.

3 根津朝彦, 『戦後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9), p. 263.

4 毎日新聞社(編), 『岩波書店と文藝春秋: 『世界』・『文藝春秋』に見る戦後思潮』(東京: 毎日新聞社, 1996).

●

생적으로 경성헌법인데, 75년 동안 개헌되지 않았다. 이는 헌법의 세계사에서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둘째, 동맹을 포함한 미·일 관계이다. 국가가 생존을 절대적 조건으로 간주할 때, 동맹은 생존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승전국 미국과 패전국 일본은 6·25전쟁 외중에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냉전 종식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다. 21세기 미·일 관계를 『世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평화헌법-미·일 동맹체제’의 논리를 더 부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 행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는 국가들에게 큰 변수이며, 외교안보의 문제와 연관된다. 미·중 경쟁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진보계열이라고 간주되는 잡지의 대중(對中) 인식을 보는 것은 권력을 수행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론과 다른 차원의 인식론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동아시아 지역 구상이다. 이전과 달리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관심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다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연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자적 안보체제 구축으로 인해 지역적 평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구상은 외교안보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위에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世界』가 다룬 시사(時事)적 ‘특집’과 이에 관련하는 글들의 논지를 추적하는 방식을 취한다.<sup>5</sup>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특집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

---

5 『世界』의 논고 출처는 내주로 표기하여, 인명, 발행 연월, 쪽수를 표시한다. 해당 목록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가'라는 현재 인식을 표출하는 지표가 된다.

## 2. 평화헌법의 수호

### 2-1. 평화헌법의 옹호자

『世界』의 헌법관은 평화헌법 수호에 있다. 과거 일본 정치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있었으나, 특히 『世界』는 아베 신조가 이끌어 가는 정권에 신랄했다. 『世界』는 2006년 9월에 출범한 아베 정권을 “개헌정권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는 아베 총리의 관념에 대해 “전전(戰前)·전중(戰中) 레짐의 부활”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베 정권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신민(臣民) 관계 형성을 시도하며, 보수정치의 반동성과 내셔널리즘을 동원한다는 것이다(編集部, 2006. 12., 40). 전후 일본의 외교 방침을 설계한 요시다 시게루는 경제 중시, 경무장 노선을 선택했다. 이에 대한 당대 대표적인 비판자는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였다. 기시는 미국에 강요된 헌법과 편무적 미·일 동맹에 회의적이었다. 『世界』의 논자는 기시를 “헌법-샌프란시스코체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했고, 아베의 사상적 원류는 기시에게 있다고 했다(原彬久, 2006. 12., 80-88).

2006년 12월 방위청은 방위성에 격상되었고,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자위대는 전수방위에 임해야 하지만,

서서히 미군의 ‘보조부대’가 되어 있다고 『世界』는 본다(編集部, 2007. 4., 128). 미국의 세계전략은 글로벌 속의 미·일 동맹의 구축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위대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방위성 탄생에 따라 자위대는 미군과 “일체화”하고, 이 연계는 지리적 및 활동적 영역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遠山武, 2007. 4., 163-164; 高見勝利, 2007. 4., 155-156). 그러나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패배하자 『世界』는 “아베 개헌노선”이 부정되었다고 했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부터 아베로 계승된 노선인 국권 강화, 국민의 권리 축소, 미·일 관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編集部, 2007. 10., 68).

『世界』에 나오는 미·일 동맹 관련 논지는 평화헌법과 연계적으로 논의된다. 안보는 국가권력의 수행과 직결하는 측면에서 통치기구의 문제인데, 평화헌법은 일본의 외교정책의 논리를 통제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면, 이는 일본 국내 통치의 구조를 건너뛰는 위험성을 초래한다(青井未帆, 2010. 6., 107-117). 일본 보수 측은 일본국 헌법이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世界』의 헌법학자는 오히려 미·일 안보 조약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 설명했다. 1951년 일본의 주권 회복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필요 불가결했으나, 제6조<sup>6</sup>에 규정되었듯이 미·일 안보조약 관련 내용이 평화조약에 규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

---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6조 (a)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이 협약의 발효 후 가능한 신속하게,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이후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합군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 또는 기타 쌍방 간에 체결된 또는 체결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 결과로 외국 군대의 일본 지역에 주재 또는 주둔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다(古関彰一, 2010. 6., 129).

『世界』는 2012년에 복귀한 아베 정권을 다시 개헌정권이라고 했다. 헌법은 권력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자 스스로 헌법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비판의 핵심이다(編集部, 2013. 3., 94-98). 실제로 아베 정권의 재등장으로 인해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되었다. 2007년 헌법 개정의 절차에 필요한 국민 투표 관련법을 채택한 아베 정권은 2012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이나 미·일 동맹 문제에 앞서 입헌주의, 민주주의, 아베 정권의 강경정책 등,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한 아베 정권의 개헌 시도는 아베의 역사인식문제로 간주되어, 이를 두고 아시아에 복귀하지 못하는 일본이라는 논리가 전개되었다(水島朝穂, 2013. 3., 94-98). 그리고 자민당에 의한 자주헌법 제정은 바로 헌법의 전면 개정을 의미하고, “국방군” 창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奥平康弘, 2013. 3., 117-127).

아베 정권은 헌법 제96조에 있는 개헌 절차를 변경하려고 했다(編集部, 2013. 6., 71). 『世界』의 논자는 아베 총리의 TPP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TPP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장점과 더불어 미·일 관계 강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다. 논자에 따르면, TPP는 경제적인 기제보다 안보적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보편적 가치를 숙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전후 일본의 법문화는 입헌주의, 자유 및 인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을 통해 발전되었는데, 아베 총리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青井未帆, 2013. 6., 83-90).

『世界』는 아베 총리가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의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인물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로 규정했다(編集部, 2013. 9., 73). 헌법학자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에 의한 안보법제 성립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안보법제 채택 여부는 일본의 양태가 “입법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라는 국가 정치체제의 문제이기도 했다(編集部, 2015. 8., 51). 논자에 따르면 원래 입헌적 통치체제에는 외측에서 권력을 제어하는 심사·통제·감독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아베 정권의 운영과 그 특징은 비(非)입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평화헌법은 특정 가상적국을 상정하지 않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적을 상정하는 동맹의 공고화로 이어진다(石川健治, 2015. 8., 58-65).

## 2-2. 개헌 반대와 반아베 전선

아베 정권의 설명이 기만적이라고 하는 『세계』는 안보법제 폐기와 더불어 아베 정치에도 맞서야 한다고 했다(編集部, 2015. 9., 55). 역사수정주의적인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평화주의를 위배했다는 것이다(編集部, 2015. 9., 115). 『세계』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역시 일본의 외교안보 방향과 직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안보법제가 채택된 2015년은 일본의 전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編集部, 2015. 10., 57). 『세계』의 입장에서 결국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 가결은 일본의 평화주의와 입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쿠데타적 행동”이었고, 이는 “비입헌·비민주·반자유의 정치”의 표출이었다(編集部, 2016. 7., 67).

2017년 10월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 및 2항을 존속하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제3항 추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계』는 “9조 개헌(加憲)”의 현실성을 포함해 국민의 정치의식,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체제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編集部, 2018. 1., 63). 『세계』의 논자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헌법 해석을 통해 인정해온 자위대의 존재 등 일본의 “자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현상유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아베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함으로써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 것이다. 아베 노선의 지지자들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자주 강조하고, 호헌파에게 대안을 요구한다. 그런데 『세계』의 논자는 이를 강박관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개헌에 반대한다는 그 자체가 대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水島朝穂, 2018. 1., 72-78). 다만, 『세계』의 논자 모두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위대의 장비와 활동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위험성이 수반되는데, 만약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할 경우, 자위대의 성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헌법 개헌안 발의에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다(坂田雅裕, 2018. 1., 73).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 시도는 결국 자위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 산업과 직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는 아베 정권이 군비 확장을 추진하며, 기업 및 아카데미즘을 동원함으로써 무기 수출과 군사연구를 촉진한다고 경계했다(坂田雅裕, 2018. 11., 73). 또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변영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 구상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될 ‘방위계획의 대강’을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全方位) 군비 증강을 목표로 삼았다. 『세계』의 논자는 이를 전수방위 구축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아베

정권에 대해 “방위정책을 통한 헌법 파괴[壞憲]”를 진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은 “고전적인 위협 대항형 전략”, 즉 가상적국을 구소련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대체하는 “전방위 군비 확장”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前田哲男, 2018. 11., 86-95).

『世界』는 아베 정권이 근린 각국과의 긴장관계를 동력으로 군비 확장을 진행한다고 본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아베 정권은 헌법에 의한 제약을 무효화하고, 군비 확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世界』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한다(編集部, 2019. 3., 103). 결국, 아베 정권의 방위정책은 개헌을 넘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언론사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아베 정권이 이러한 원칙들을 공동화(空同化)하고 군비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東京新聞社会部取材班, 2019. 3., 131-139).

### 3. 미·일 관계의 조정

#### 3-1. 미·일 안보와 헌법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을 기축으로 만들어진 냉전 후의 세계를 바꾸었다. 『世界』는 9·11 테러가 자유와 민주성 그리고 문명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했다. 다만 9·11 테러는 전쟁이 아닌 범죄 행위이며,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재판 실시를 요구했다.

보복전쟁에는 반대한다는 의지 표명이다(編集部, 2011. 11., 30-31). 일본은 미국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경찰을 통한 국제협력력을 통해 테러 대책에 공헌할 수 있으나, 평화헌법이 있는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藤原帰一, 2011. 11., 40-45; 愛敬浩二, 2001. 12., 48-55). 『世界』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전쟁 결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해방을 가져오지 못할 거라 했다. 전쟁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무력을 제한해온 제도나 보복을 금지해 온 국제질서의 규범을 후퇴시킨다는 논리이다(編集部, 2002. 1., 52). 이후 고이즈미 정권은 유사법제(有事法制)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世界』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編集部, 2002. 5., 88).

『世界』는 21세기 미·일 관계가 양자관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두라는 변수로 성격이 달라진다고 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더 긴밀하게 될 전망이 있지만, 일본, 미국, 중국의 삼각관계 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논자는 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일본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으로 미·일 동맹의 재검토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寺島実郎, 2004. 11., 100-101).

일본의 안보는 전통적으로 전수방위에 있지만, 미군의 재편은 자위대 재편 논리로 이어진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재편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世界』는 2004년 말에 발표되는 일본의 『방위개혁의 대강』에 영향을 끼칠 거라 우려했다(編集部, 2004. 12., 71). 『世界』의 논자에 따르면, 원래 일본 국민은 “자위대=전수방위”라는 이미지로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해 왔지만, 실제로 자위대는 “해외에서 미군과 함

●

계 전쟁을 하는 군대”라는 성격이 강해졌다. 논자는 일본의 안보란 주변국과의 양호적인 관계 기반에 있어야 하고, 자위대에 새로운 역할이 있다면, 자위대의 일부를 비무장 부대로 전환시키고, NGO, 경찰, 소방, 의료 등 새로운 국제협력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안보환경 변환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前田哲男 외, 2004. 12., 90-92).

『世界』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종속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을 “사고(思考) 정지 상태”라고 표현했다. 평화헌법이 있는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안전과 안정을 가져오는 행위자로서 안보정책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編集部, 2009. 7., 95). 논자들은 미·일 동맹 폐기가 아니라, 일본의 외교 및 안보정책이 “미국의 종속변수”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일 동맹·주변사태형”에서 “국제연합 중심 협력” 및 “동아시아 공통의 안전보장”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보와 헌법에 배치(背馳)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는, ① 국내적으로 미·일 안보조약의 확대해석과 밀약으로부터 탈각할 것, ② 외교 조치로서 신(新)가이드라인과 해외파병의 재검토, ③ 미·일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신아시아 외교, 즉 동북아 비핵지대설치 조약이나 동아시아 해상보안 협력협정 제창이다.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관여는 적을 공격하는 군대가 아닌 범죄자 확보를 우선하는 경찰 조직의 역할을 중시했다(我部政明 외, 2009. 7., 106-112).

### 3-2. 미·일 안보와 기지

『世界』는 2009년에 탄생한 민주당 정권(2009. 9.~2012. 12.)에 호의적이었다. 대미 종속적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 정권은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世界』는 일본이 주변 국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정권에 의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평가했다(編集部, 2009. 11., 137). 미·일 동맹에 대한 대등이란,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독자적인 전략을 구축한 후,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형태이다(豊下橋彦, 2009. 11., 146). 그런데 민주당 정권 발족 이후, 외교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설 문제였다. 민주당 정권에 의한 기지 이설 주장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미·일 관계의 위기가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世界』는 후텐마 기지 문제를 대미 종속을 변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간주했다(編集部, 2010. 2., 117). 후텐마 기지 이설 문제는 미·일 동맹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世界』는 막대한 일본의 국가비용을 통한 미군 기지의 유지에 회의적 입장을 고수했다(編集部, 2010. 6., 87).

결국, 민주당 정권이 미·일 관계의 갈등 요인은 후텐마 기지 이설 문제로 집약되었는데, 『世界』의 논자는 민주당 정권이 명확한 미·일 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총괄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일 동맹은 위무성 및 방위성 그리고 경제 관련 각료 레벨에 의한 “일미전략대화의 실현”을 이루고, 주일 미군기지 및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검토함으로써 단계적 기지 및 시설의 반환을 실현시키며, 동아시아의 안정을 고려하여 미군을 하와이, 괌까지 철퇴시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다(寺島実郎, 2010. 8., 111-112).

### 3-3. 미·일 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앞서 보았듯이 2012년 아베 정권의 재등장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였다. 종래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지만, 아베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변경시킴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했다. 『世界』는 아베가 주창한 “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언급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호소했다(編集部, 2013. 12., 69). 아베 정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일본의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編集部, 2014. 5., 6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평화헌법 해석과 미·일 동맹 변화, 그리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였다(編集部, 2014. 7., 66).

2014년 7월 1일 아베 정권은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 확대, 즉 해외파병이나 무기 사용 등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世界』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 2015년 안보법제가 헌법의 평화주의를 파괴하는 “전쟁준비를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시로 해온 전후 일본의 해체를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編集部, 2015. 6., 53). 외무성은 2014년 “유닛 셀프 디펜스(unit self-defense)”라는 개념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평상시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임무 중에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방위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의미한다. 『世界』의 논자는 이 개념이 모든 측면에서 자위대-미군 협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안보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세계 규모에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행동기준의 설정이 더 중요하게 된다(青井未帆, 2015. 6., 57-62). 논자는 일본 정부에 의한 안보법제 정비의 최대 목적이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 있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위대가 전투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안보법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 개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아베 정권은 전수방위 견지를 명시했으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할 때, 자위대는 공격적 전력으로 미군에 가담하게 된다(集團的自衛權問題研究会, 2015. 7., 80-83). 『世界』는 정부의 자세가 안보법제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여론과 국회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編集部, 2015. 7., 49).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미·일 동맹 강화에 따라 타국의 무력 행사를 억지할 수 있고, 이 억지력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맹과 억지 이론을 구사하는 논자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기대할 정도로 억지력 효과를 높이지 않고, 잠재적 도전국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栗崎周平, 2015. 9., 78-88).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그는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世界』는 핵무기 삭감이 정체되었고, 핵확산이나 테러의 위협은 오히려 증대했다고 했다. 피폭국인 일본은 핵에 반대하는 국가로 주도할지 아니면 핵우산을 전제로 하는 질서를 고집할지 역할에 대한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編集部, 2016. 8., 115). 미·일 동맹을 “미·일 핵동맹”으로 명명해 온 『世界』의 논자는 여전히 일본에서는 미국에 의한 핵우산과 원자력에 대한 신봉이 있으며, 미·일 핵동맹은 지속될 거라 전망했다(太田昌克, 2016. 8., 145-153).

2020년 미·일 동맹 강화 연장선에서 일본 정부는 상대 영토 내에 있는 시설을 공격하는 능력 보유,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수방위가 아닌 선제공격 가능성을 의미한다. 『世界』는 이를 군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명했다(編集部, 2020. 10., 89). 적기지 공격 능력은 해석 개헌의 정점에 이른다.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인

정은 평화헌법의 사문화를 초래하며, 사실상 미·일 동맹의 재정의를 의미한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대중국 정책의 확장에 따라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영될 전망이다(杉原浩司, 2020. 10., 109-115). 『世界』의 논자에 따르면, 여전히 일본의 여론 경향은 대미 종속하의 군비 확장에 관심이 없고, 미·일 안보조약 70년 속에서 “군사적 신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古関彰一, 2021. 9., 194).

## 4. 중·일 관계의 심화

### 4-1. 대중 포괄적 관여 정책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중·일 관계 구축이 요구되었다(編集部, 2001. 3., 69). 2010년 일본의 GDP를 능가한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타국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世界』는 중국을 위협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공존과 협동의 필요성을 논했다(編集部, 2010. 9., 101). 미·중 경쟁 시대의 도래 역시 일본 외교의 과제가 되었다. 2010년 2월 미국의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앞으로 미국이 대처해야 하는 상대를 중국으로 설정했다. 미·일 안보체제는 중국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counter balance)’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久江雅彦, 2010. 6., 156). 즉, 미·중 경쟁에 일본이 연루된다는 인식이

다. 『世界』의 논자는 중국의 목표가 세계 중심국가의 위상에 있다고 인지한다. 일본은 미국과 민주주의, 인권,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중국에 투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行天豊雄, 2010. 9., 104-109).

한편 일본은 중국 국내의 변혁을 촉진하는 것보다 중국이 지역안보를 포함한 국제문제에 대해 생산적이며 책임 있게 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世界』의 논자는 중국에 대한 포괄적 관여정책을 주장한다.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은 보수진영에서만 아니라 일반적 수준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에 봉쇄정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한 균형정책(soft balancing)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를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도 지역 및 국제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미국은 대중 관여 및 헷지(hedge)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松田康博, 2010. 9., 150-152).

일본에서 대중국 인식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생겼다. 『世界』는 중국의 의도와 더불어 일본 외교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였다(編集部, 2010. 12., 99). 『世界』의 논자에 따르면, 강경한 중국의 대일 외교는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셔널리즘을 활용함으로써 실시된다. 즉, 중국의 외교 형태는 자국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 과거 열강에 의한 피해자였던 입장의 기억 등이 내셔널리즘과 결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일 관계에는 갈등적 현안들이 있어도 전략적 호혜관계를 맺고 있고, 양국은 이를 발전시키는 강인성이 있다고 한다(高原明生, 2010. 12., 100-107). 대두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우선 미·일 관계의 신뢰를 양성하

며,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및 핵확산 방지와 같은 넓은 분야에서 협력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주장되었다(田中均·寺島実郎, 2011. 3., 15-20). 한편 일본은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는 미국의 가치관이나 아시아 전략에서 떠나, 일본의 독자적인 대중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주장도 있다(西原春夫, 2011. 3., 35). 논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지만, 미국과의 거리감을 통해 논의된다는 경향이 있다.

#### 4-2. 중국위협론 비판

중·일 간에 많은 난제가 있지만, 『世界』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는 부분을 재확인함으로써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編集部, 2012. 10., 91). 어떤 논자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도 단순한 중국위협론적 시각은 중·일 관계에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분명히 중국의 경제적 약진은 중·일 간의 외교, 산업, 문화교류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일본은 아시아의 국가로서 “입아탈종속(入亞脫從屬)”의 시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辻井喬, 2012. 10., 100-106).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따라 중국에서는 반일 시위가 일어났지만, 『世界』는 일본의 불필요한 언동이나 의도적인 도발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본다(編集部, 2012. 11., 85). 논자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일본을 활용하여 중국에 맞서는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에 귀착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본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려를 표시했다(孫崎享, 2012. 11., 86-92).

다른 논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움직임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중·일 관계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일본은 신뢰를 조성하는 주체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河野洋平, 2012. 10., 95-99). 일본은 내셔널리즘이나 배외주의를 고양시키지 않도록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만들어야 한다(中江要介, 2012. 11., 93-96). 또한 영토 문제에 관해 일본은 감정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이익의 모색을 해야 한다. 수단은 안보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리더십의 중요성과 더불어 민간 및 경제 교류와 환경 문제 공유 등 외교 영역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小林陽太郎, 2012. 11., 97-102). 『世界』는 중·일 간의 영토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냉전 구조를 극복할 수 있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編集部, 2012. 11., 87).

#### 4-3. 중국 이해를 통한 중·일 신뢰 조성

『世界』의 논자는 “힘에 의한 현상타파”를 시도하는 중국의 동향이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일 간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하는 “2012년 컨센서스”가 주창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주권 문제를 봉인함으로써 중·일 상호 타협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말한다. 중장기적 목표로서는 해상 행동준칙의 책정,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시행한다. 이러한 컨센서스를 마련한 후, 일본·미국·중국 간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일본

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 확장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공생을 실현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연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일 양국은 분쟁을 회피하여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高原明生, 2012. 12., 96-101).

『世界』는 홍콩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49년에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 2047년까지 50년 동안의 불변을 주창한 홍콩 젊은이들의 “민주자결”은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編集部, 2017. 8., 43). 일본에서는 중국이 홍콩이나 타이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논자는 홍콩과 타이완이 동아시아·서태평양에 있어 민주와 자유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일본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적 존재라면, 더욱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의 민주와 자유를 지키는 데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川島真 외, 2017. 8., 56).

『世界』는 미·일 동맹 체결 70년이 된 2021년에서도 여전히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일본 수도권 공역 역시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및 관료는 안보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글로벌한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지만, 다른 미래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編集部, 2021. 9., 147). 중국을 의식하는 일본은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중국위협론을 거론한다. 냉전기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은 소련을 가장 중시했다면, 현재는 “중국주적론”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략은 미사일 방위, 남서제도(南西諸島) 기지화로 이행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언급이 일본의 전략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世界』의 논자는 이러한 흐름에서 호헌과 더불어 자위대를 전수

방위에 전념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Treaty; 1972~2001)을 통해 군비를 제한했다.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 및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ABM 조약”을 체결한다. 둘째, 트럼프 정권이 파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1987~2019)의 동아시아판을 만든다. 일본이 이를 성공하게 되면, 타이완 해협이나 남서제도 미사일 기지화는 불필요하게 된다. 미사일에 의한 위협 없는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두 개의 조약이 필요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중·일 교섭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前田哲男, 2021. 9., 148-157).

## 5. 지역 구상의 기반

### 5-1. 한반도와 일본의 지역구상

고이즈미 정권(2001.4.~2006.9.)은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사 문제로 인해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즉시 제재를 발동함으로써 북한과 대립 구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世界』는 일본이 중시해야 할 외교는 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編集部, 2006. 9., 67). 『世界』의 외교안보론은 미·일 동맹이나 대중국 정책의 고찰을 거론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구상까지 논의를 펼친다.

『世界』는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編集部, 2010. 1., 43). 논자는 21세기의 글로벌화 시대에서 공동체 조건으로 북한의 참여를 들었다. 첫째, 동북아 공동체는 “비핵(非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둘째, “부전(不戰) 공동체”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억지 논리로 일본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선행적으로 핵보다 전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은 전쟁의 연장선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보장의 주도권”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한반도 긴장 강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핵화 및 군축을 유도하고, 일본과 한국은 공동으로 평화공존의 노력을 추진한다. 넷째, “체제개혁의 주도권”이다. 이는 북한 정치지도자의 자기개혁을 말한다. 우선 일본과 한국은 국내의 격차 해소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창출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그러한 모델을 통해 북한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공동체는 평화, 복지, 정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국을 초월한 공동체이며, 인간의 평등성이나 존엄, 그리고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한 “휴머니티(humanity)”의 감성과 사고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에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트랜스 리저널(trans-regional)적 시민사회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坂本義和, 2010. 1., 169-180).

미·일 관계사의 권위자는 안보와 군사력을 중시하는 지정학적인 정의(定義)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번영이나 복지 촉진 등 비지정학적 영역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미·일 관계에는 양국 시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국가 간에 있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사회 간의 신뢰, 상호이해, 연대의식이 더 중요하게 된다. 나아가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태평양이라는 공간에서 미·중·일 관계에 따른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入江昭, 2010. 2., 127-133).

『世界』는 북한에 의한 긴장 조성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한 외교적 기반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는데, 2017년 5월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평가했다(編集部, 2017. 7., 69).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발을 일으켰고, 북미관계는 위기적인 적대관계에 들어갔다. 북한은 가장 중요한 상대국으로 미국을 인식한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교 수립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납치 문제 등으로 북일교섭은 좌절된 상태이다. 『世界』의 논자는 우선 북일 국교수립을 단서로 새로운 6자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和田春樹, 2017. 7., 96-104). 일본의 외교적 역할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제체제를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불안한 가운데, 일본은 위기관리와 문제해결을 위해 연내 관계국과 외교적 연계를 수행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은 조절을 통해 북한 문제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村山富市 외, 2017. 11., 86-96).<sup>7</sup>

---

7 물론 논자들 사이에 북·일 수교, 납치 문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 5-2. 남·북 정상회담과 일본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은 한국이 주도한 결과였는데, 『世界』는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일본이 공헌하지 못했던 점을 정치적 나태라고 질타했다(編集部, 2018. 7., 53). 비핵화는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분단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북일평양선언(2002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田中均·太田昌克, 2018. 7., 54-69).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과제는 식민지 지배 청산과 국교정상화에 있는데도 납치 문제에 집중화된 상황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대결 구도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협력해야 하고, 북일평양선언에 입각한 국교수립을 통해 도쿄와 평양에서 대사관을 개설한 후, 핵, 미사일, 경제협력, 납치 문제에 대해 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본은 이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일본해”(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는 구상도 제기되었다(和田春樹, 2018. 7., 70-79).

『世界』의 논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의 지향성에 따라 ‘한반도 비핵무기시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남북한과 일본은 비핵화 국가가 되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 국가는 비핵화 국가에 대해 ‘안전의 보장’을 부여하는 ‘동북아비핵병기시대’를 최종 형태로 확립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6·25전쟁의 종결, 경제적 교류나 지원 등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조약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梅林宏道, 2018. 9., 189-200).

그러나 2019년 이후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진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고려한 방위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자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지만, 『世界』의 논자는 이를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 있다고 간파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북·미 교섭과 남·북 대화, 비핵화 교섭 등이 필요하고, 중국에 관해서는 군비 확장 경쟁에 돌입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거론되었다. ① 동북아에서의 핵 및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군축·군비 관리의 협의를 발전시킨다. ② 일본은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주변국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 ③ 세계적인 핵군축의 진전을 촉진한다. ④ 기후 변동이나 감염병이 ‘인간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集团的自衛權問題研究会, 2020. 10., 116-119).

### 5-3. 균형자 일본의 역할

『世界』는 아베 정권 이후의 일본에 필요한 것이 입헌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의 재건이며, 일본 외교에도 쇄신을 요구했다(編集部, 2020. 11., 89). 미·중 경쟁이 가시화된 시대에서 여전히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 추진을 주된 방침으로 삼고 있다. 『世界』의 논자는 일본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는 한편, 양안관계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관해서는 미·중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이미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은 군사력 증가를 목표로 하거나 미·일 동맹 강화 추진이 아니라, 미·중 양국과의 양호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에 대해 세계를 이분하는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존재 의의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더 진언할 수 입장이며, 이로써 미·중 경쟁 완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를 위해 중견국인 일본은 한국이나 동남아 각국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안인 한국과의 역사 문제는 극복과 화해가 필요한데,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해도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양호한 관계는 일본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논자는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와 경제적 다국간주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중국이 단독주의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猿田佐世, 2020. 11., 141-143). 『世界』 및 논자들이 주장하는 지역 구상은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과 북한의 동태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미·중 경쟁 시대 속에서 중국을 지역 구상에 인도시키려 한다. 결국, 일본의 주체적이며 균형적인 역할이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 6. 결론

과거와 달리, 현재 『世界』가 일본 논단의 주축(主軸)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世界』는 일본에 있는 하나의 정치적 기축(基軸)을 견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1~2021년에 간행된 『世界』의 외교안보론에서 평화헌법, 미·일 관계, 중·일 관계 그리고 지역 구상 네 가지 이슈 영역을 추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이슈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본론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世界』에서 논의되는 일본의 외교안보론은 상대적으로 평화헌법에서 파생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일본 정치사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있었으나, 특히 개헌에 적극적인 아베 정권을 민주주의, 입헌주의,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정권이라고 보았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문제시했다. 『世界』는 냉전 종식 이후, 자위대의 활동공간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권이 평화헌법의 이념보다 해석 논리로 외교안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만, 명확한 자위대의 성격 규정과 군비 확장을 억제하는 법규범이 확립되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견해를 제시한 논자도 있었다.

둘째, 『世界』는 동맹을 포함한 미·일 관계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다. 물론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대미 종속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고립화, 일본 정부의 군사적 신봉,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있지만, 미·일 동맹 해체를 호소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으로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이나 전쟁에 크게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수방위를 유지하면서 미·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世界』는 군사적 측면이 강조되는 미·일 관계를 문제시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다방면에 이르는 협력적 관계 발전에 관해서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것으로 본다.

셋째, 『世界』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대국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 있는 극단적 중국위협론을 견제한다. 비록 2010년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의 충돌 사건,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했음에도 『世界』의 비판 대상은 중국보다 일본 외교에 비중을 두었다. 중국에 대해 일본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교교섭을 시도하며, 상호이해와 교류 심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중 경쟁 시대에서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연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넷째, 결국 『세계』의 외교안보론을 둘러싼 거시적 지향성은 전쟁이나 핵이 없는 동아시아 지역 구상의 형성에 있다. 이러한 지역 구상의 성립은 현행 평화헌법 준수, 미·일 관계의 유지,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된다. 특히 『세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반도 문제를 중시해 왔는데, 동아시아 지역 구상의 관건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진전이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일본은 북·일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 및 동남아 각국과 연계해야 하는데, 중견국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국간주의적 지역질서 건설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에는 학자, 실무자, 평론가 등이 기고하지만, 견고한 진보·혁신계열만으로 점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법학자들의 경우, 법적 관점에서 정권의 헌법 해석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외교안보를 비판하지만, 이는 선행적으로 평화헌법이 외교안보 영역을 결정하는 일본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법학자들의 성찰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편 외교정책 연구자들은 평화헌법의 장치를 쟁점화하지 않고, 보다 일본이 가능한 외교안보론을 거론한다. 여기에 극단적인 이상주의적 색깔은 없다. 외교정책 연구자들은 법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포함하면서도 국제정치에 있는 힘의 논리를 인지하고 국가라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무게를 둔 온건적 현실주의적 사고를 표출하는 자도 있었다. 특히 이는 중·일 관계 및 미·일 관계 이슈에서 감지된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를 둘러싼 『세계』의 위치를 재확인한다. 패전 후부터 냉전 종식까지 일본의 논단은 좌측의 “비무장중립, 개헌 반대, 미·일 안보 반대”, 우측의 “재군비, 개헌, 미·일 관계의 대등” 그리고 중도의 “경무

장, 현행 헌법 유지,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냉전기에 보인 세 가지 분류법을 기능적으로 21세기 『世界』의 논지 경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

우선 『世界』는 비무장중립이 아니라, 전수방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최소 필요 한도의 경무장을 지향하고, 일본의 군비 확장에는 비판적이다(중도). 헌법에 관해 『世界』는 개헌반대 혹은 현행 헌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좌측·중도).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개헌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 상황이다. 만약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경시하지 않는 정권이 자위대의 대외 비군사적 역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 역시 이를 지지할 때, 『世界』는 개헌 반대의 명목을 상실할 것이다. 미·일 관계에 관해 『世界』는 동맹 강화나 과도한 미일 일체화에 대해 반대하지만, 동맹 해체나 미·일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초점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연루되는 상황이 문제이며, 평화적 협력체로서의 미·일 관계의 진화에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현상유지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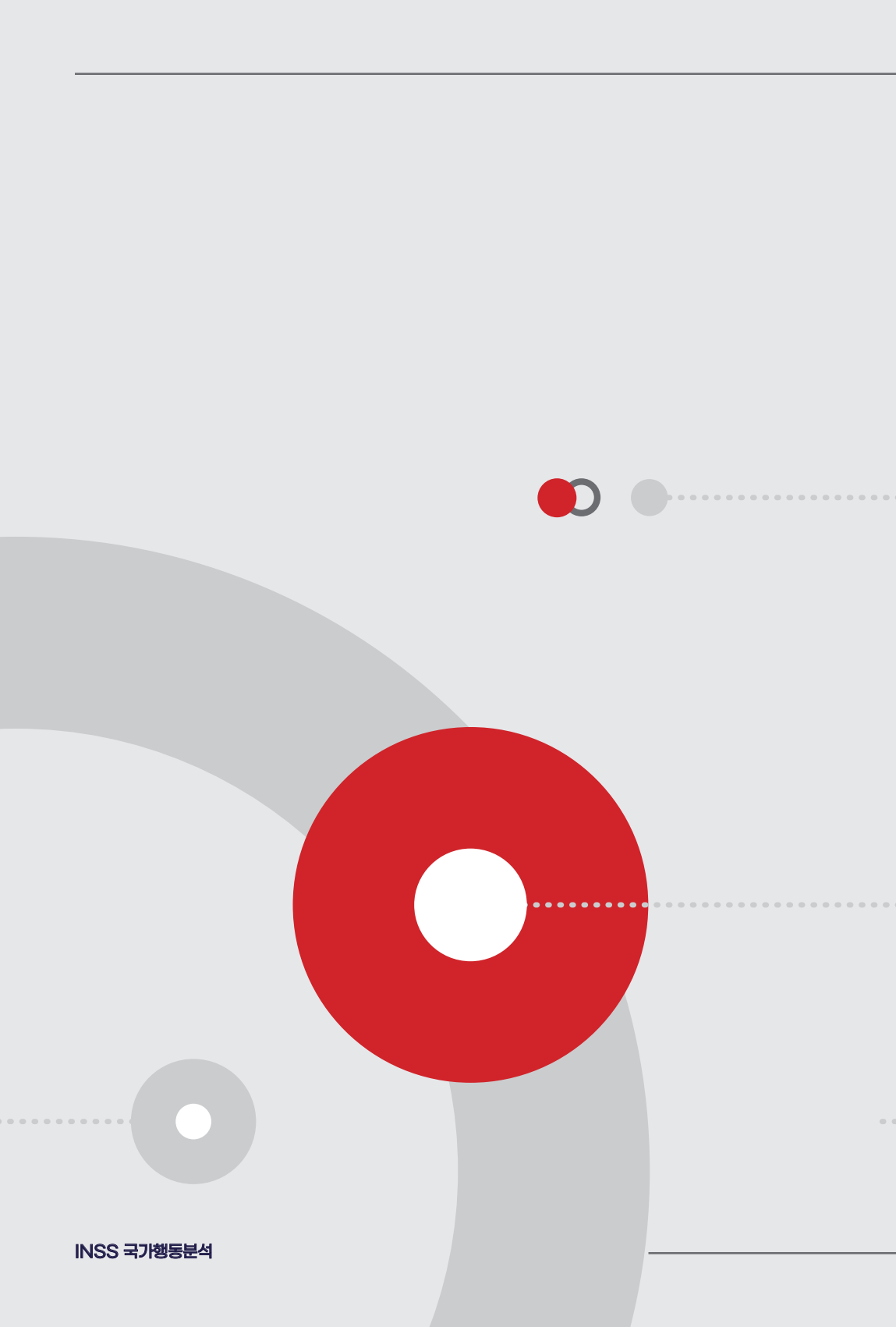
『世界』는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를 거부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일본의 소국주의나 행동 없는 중립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世界』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과 공간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본의 국제적 공헌에 대한 자발적 관여를 촉구한다. 한편 우측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 대등이라는 점은 『世界』에서도 보이는 경향이지만, 이는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힘의 논리(우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의

8 植田麻記子, “戦後論壇における日本外交論: 敗戦直後から冷戦終結まで”, 添谷芳秀 (編), 『秩序変動と日本外交: 拡大と収縮の七〇年』(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pp. 29-30.



문제이다. 미·일 관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 연계자로서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등적 입지를 지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시한 기존의 좌측·우측·중도의 척도를 통해 본다면 『世界』는 좌측이 아닌 중도에 보다 가깝다.






---

Part

# 07

결론

남기정  
(서울대학교)

1.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2. 수상 자문그룹의 존재와 역할
  3. 수상관저 '간담회'의 역할과 활동
  4.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역할
  5. 『國際問題(국제문제)』로 보는 보수 주류의 외교안보 담론
  6. 『世界(세카이)』로 보는 평화주의 안보 담론
  7. 요약과 제언
- 
-

## 1.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아베 장기 집권을 거쳐, 일본이 국제정치의 적극적 행위자로 돌아왔다. 그 변화의 기점은 탈냉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대외적 국가행동 기조는 서서히 변화하여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말에 시작되어 2020년 여름까지 지속된 아베 장기 집권 내각을 거쳐, 요시다 독트린을 대신한 아베 독트린이 일본 외교의 기본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이 ‘요시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냉전기 이후 전개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외교의 내용도 통상 업무와 같은 일상적 경제외교에서 위기 대응의 안보외교로 중심이 이동했다. 그에 따라 일본 외교를 분석하는 틀로서 관료정치 모델은 유효성을 상실해 갔으며, 대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졌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소집단, 특히 수상관저는 일본의 대외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로서 소집단인 수상관저에 주목하여 일본 국가행동을 목적론,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은 ‘일본의 꿈’과 관련한 논의들로 구성된다. 일본의 꿈은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군사적 보통국가로서 일본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주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의 꿈은 ‘보통국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희구는 ‘전후체제’에 대한 부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이 아닌 것을 상상하는 것이 꿈일진대, 일본이 벗어나기를 갈구했던 현실이란 ‘기지국가’의 현실이었다. ‘기지국가’의 현실이 ‘전후체제’의 내용이며, ‘기지국가’는 전후 일본의 존재론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이 ‘기지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은 일본의 안보논쟁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했다.

일본 국가행동의 ‘목적론’과 ‘존재론’은 일본의 국가행동을 분석 평가하는 데 당분간 변화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이미 주어진 상수로 볼 수 있다. 즉 ‘기지국가’의 현실을 ‘삶’의 조건으로 하고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 움직이는 것이 일본 국가행동의 기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국가행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그 위에 ‘본질’이 외화하여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일본 국가행동의 실천 영역이며, 본질과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인식(‘삶’)의 공간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일본 국가행동 분석에서 실천론(‘함’)의 영역은 ‘전략구상 및 안보담론’의 공간이다. 그 결과들은 일본 국가행동의 연기(performance)로 나타나,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같등하거나 협력하는 게임을 펼치기도 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생의 복합연기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인식론이 차지하는 영역은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그룹들에 정보와 인식의 틀을 투입하는 경로들로 채워져 있다. 수상관저에서 구성되는 여러 ‘간담회’들과, 이 간담회들에 기초적 참고자료와 이론 틀을 제공하는 ‘싱크 탱크’들이 이 경로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위자들이다.

## 2. 수상 자문그룹의 존재와 역할

일본 수상 자문그룹은 전후 일본 정치·사회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는 핵심적인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쟁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전제를 현실로 인식하고 일본 국가의 지위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왔다. 탈냉전 이후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하고 국제질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시기에 공식적 여론(public opinion)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자문그룹 멤버들은 미국의 군사적 힘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 정체성, 이익, 의도 그리고 행동을 평화헌법 체계 속에서, 또는 평화헌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전후 일본 사회의 주류 보수 세력으로 등장한 뒤, 탈냉전기에 비전통적 위협의 등장과 정치·경제·군사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국가이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탈냉전 시기 일본 수상 자문그룹의 구성은 냉전 시기에 비해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또한 그룹 멤버들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도 더 이상 일체화되고 통합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고 갈등, 대립하며 서로를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존재는 지금의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하나의 정치세력에 의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에 직면하여 보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보수 그룹들이 경쟁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지금의 보수화 과정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항구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유동

적인 국제질서에 조응하여 새로운 단계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일본 보수진영의 노력이 낳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점증하는 국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자문그룹의 헌법 개정론은 자주 독립파와 중도 미·일 협력파 등 보수 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구조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독립파’도 미·일 협력론을 중심으로 ‘협력파’와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상 자문그룹의 대부분은 일본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평화헌법의 한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당장은 미국이 형성한 지정학적인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미·일 동맹을 일본의 대전략에서 부동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 동맹으로의 경사는, 보수적인 헌법 개정론자들조차도 기술적으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에도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개정 여부를 떠나 보수 세력을 전체적으로 결집하고 개인의 역할을 국가발전의 목표 속에서 재구성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 보수주의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즉 개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여 국가 중심적인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 3. 수상관저 ‘간담회’의 역할과 활동

수상 자문그룹이 수상관저의 ‘간담회’에 결집하여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을 주도하는 구도는 2000년대 들어와서 정착되었다. 고이즈미 정부 시기인

2004년의 ‘안전보장과 방위력 간담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다. 2009년에는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지만, 전략적 호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대중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수상관저 ‘간담회’에서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국가안전보장전략 책정 등을 통해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ASEAN, 인도, 유럽 등으로 일본 외교의 외연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래의 미·일 동맹 중심의 안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안보정책으로 선회합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그 분야도 확대되어, 우주, 사이버 등이 일본의 안보 논의에서 중심 주제로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전통안보에서 신흥 안보 영역으로 안보 강화 논의가 확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노선 관련 정책 및 외교노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각 성청, 자민당 내 관련 연구회 등의 논의이다. 특히, 수상관저에서 주도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구성원이나 논의되는 내용들이 집권당의 안보 인식이나, 개념, 사상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간담회 문화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일종의 정치 과정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 주제나 간담회의 좌장을 내각 총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담회는 총리 등 자민당 내 결정된 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입혀 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전략에 대해 ‘우경화’, ‘보수화’, ‘군사대국화’ 등으로 명명하는 논문이나, 기사들을 다수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7년 8개월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을 했고, 그 아

베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강경보수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논의되었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 강화 추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고, 미·일 동맹 일변도를 벗어나 강화된 미·일 동맹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유럽, 중동 등 전 지구적 규모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북한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을 넘어,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 지역이 변화되고 있고 전통안보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신안보 영역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강경우익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집권하게 되면 안보 강화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아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안보 강화 추이는 크게 보아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4.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역할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싱크탱크를 분석하는 가운데서도 확인된다. 일본 외무성의 전문가 간담회 자료와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사업 현황,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의 연구 결과 등에서 일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현황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가장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20년 TTCSP 세계 싱크탱크 평가에서 올해의 싱크탱크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동

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무성과 싱크탱크의 연계 프로그램인 ‘외교·안전보장조사연구사업비보조금’ 사업에서는 핵심 연구 주제별 일본 외교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1.5트랙 협력을 구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비조성금’ 사업에서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2016년 사업 개시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으며,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 문제이자 난제인 센카쿠, 독도, 동해 문제 등 일본의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형 싱크탱크의 역할은 새로운 정보 및 지식 획득, 싱크탱크 네트워크 강화, 일본 외교로의 공헌, 대외 발신 강화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는 분야별 창의적인 비전과 개념들을 형성하여 유식자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이른바 ‘창조적 구상력’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증진하며 ‘새로운 관민협력 모델’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해외 싱크탱크와의 분야별, 기관 간, 연대 및 연계를 확대해 나가는 ‘글로벌 연계 추진’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활동을 종합해 볼 때, 일본형 싱크탱크의 역할에서 한계가 확인되기도 한다. 싱크탱크가 외무성의 하부기구처럼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단지 일본 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차원에 제한된 대내외 발신과 여론 조성만으로는 싱크탱크의 존재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조차 있다.

## 5. 『国際問題(국제문제)』로 보는 보수 주류의 외교안보 담론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国際問題』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매우 효과적인 창으로 기능한다. 『国際問題』에 나타난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함의는 일본 정부의 정책 내용과 일치감이 크다. 이는 『国際問題』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주류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国際問題』의 담론이 외교안보 정책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소한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정당화 기제임에는 틀림없다.

『国際問題』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의 대일 인식의 정형화된 구도를 넘는 것과 연계된다. 한국 내의 대일 인식에는 보수우경화론의 획일주의적 관점이 강하다. 역사수정주의와 결부된 우익적 정책 구상이 외교안보 정책 내용에 반영된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 일본의 정책 과정에서 정책 관여 엘리트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중요하게 기능하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의 담론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익 세력의 담론이 일본 내 대중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은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의 장악력은 여전히 강하며, 이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은 우익 세력의 정서적 신념주의와는 차별화된 전략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적 태도는 『国際問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들의 정책 담론과 보수 주류 엘리트들의 정책 담론 사이에 강한 단절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世界(세카이)』는 많

은 우익 잡지들과 대척점에서 있지만, 『國際問題』와 『世界』는 상호 간에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무관계의 관계로 보인다. 주류 보수 담론과 리버럴 담론 사이의 무관계의 상황이 현재 일본 외교안보정책 구도의 가장 본질적인 우려 사항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6. 『世界(세카이)』로 보는 평화주의 안보 담론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교양 잡지 『世界』는 이제는 일본 논단의 주축(主軸)이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일본에 있는 하나의 정치적 기축(基軸)을 견지하고 있다. 『世界』는 일본에서 ‘암반과도 같은 평화주의’ 여론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일본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행하는 역할보다는 변화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지연시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면, 『世界』와 이에 모인 담론 생산자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다.

『世界』는 비무장중립이 아니라, 전수방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최소 필요 한도의 경무장을 지향하고, 일본의 군비 확장에는 비판적이다. 헌법에 관해 『世界』는 개헌 반대 혹은 현행 헌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개헌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 상황이다. 만약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경시하지 않는 정권이 자위대의 대외 비군사적 역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 역시 이를 지지할 때, 『世界』는 개헌 반대의 명목을 상실할 것이다. 미·일 관계에 관해 『世界』는 동맹 강화나 과도한 미·일 일체화에 대해 반대하지만, 동맹 해체나 미·일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초점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연루되는 상황이 문제이며, 평화적 협력체로서의 미·일 관계의 진화에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현상유지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는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를 거부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일본의 소국주의나 행동 없는 중립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과 공간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본의 국제적 공헌에 대한 자발적 관여를 촉구한다. 한편 보수 우파가 중시하는 미·일 관계 대등화는 『세계』에서도 중시하는 경향이지만, 이는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힘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을 극복 하자는 주장에서 나오고 있다. 미·일 관계 조정을 통해 일본이 동아시아에 관여하는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세계』는 일본 정치의 좌우 정치지형 속에서 혁신 좌파보다는 중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7. 요약과 제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탈냉전기 이후 진행된 ‘보통국가’로의 장기적인 변화 끝에 국제사회에서 ‘외압반응형’의 소극적 행위자로부터 ‘선제주도형’의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했다. 이를 요시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의 변화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베의 외교안보 노선이 아베 독트린으로 정립되자 기시다의 정책 지향과 아베의 그것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시

다에 계승된 요시다 독트린의 흔적이 아베 독트린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아베 내각 시기의 변화는 탈냉전 이후 전개된 장기적인 변화 추세 속에 있는 것으로 이를 주도해 온 것은 수상관저에 설립된 안보정책 관련 ‘간담회’였으며, 이는 이미 냉전기에 존재했던 수상에 대한 자문그룹의 존재와 역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이 적극적 행위자로 변화한 것이 다시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상관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즉 외교안보 분야에서 수상관저의 리더십 강화가 일본을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시켰고, 일본이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한 것이 수상관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화되고 있는 일본형 싱크탱크를 매개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의 장악력은 여전히 강하며, 이 제도권 보수 엘리트들은 우익 세력의 정서적 신념주의와는 차별화된 전략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국수적 대외팽창적 국가로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 독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평화주의 안보론은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중도로 이동하면서, 보수적 현실주의적 안보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평화주의 안보론은 현실주의 안보론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현실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갖지 못한 채 여론 속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데 머물러 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헌법 개정의 결과로 출현할 새로운 일본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할 필

요가 있다. 기시다 내각하에서도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며, 헌법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 될 것이며, 국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개헌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일본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돌출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일본이 전수방위에 입각한 소극적 안보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을 전제로 군사 강국 일본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대일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안의 강경 보수에 대한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독트린하에서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보수 강경파를 상대로 한 대일외교를 강화하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통해 기시다가 계승하려고 하는 전통적 보수본류의 주변국 중시 외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수상관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수상관저에 모인 '유식자'들을 상대로 한 대일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베 장기집권을 거쳐 일본에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입각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착되고 있으며, 수상관저에 설치된 '간담회' 등 정책자문 그룹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개별 싱크탱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부록

〈부록 1〉『國際問題』의 호별 주제와 분류 (2000-2021)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1	2000年1月 No.478	중국	미·중
2	2000年2月 No.479	미국	미·중
3	2000年3月 No.480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4	2000年4月 No.481	창간 40주년 기념호	일본 외교
5	2000年5月 No.482	세계표준 개념과 세계경제	경제
6	2000年6月 No.483	종족갈등 문제	이슈
7	2000年7月 No.484	시민사회론	거버넌스
8	2000年8月 No.485	푸틴 정권과 러시아	지역
9	2000年9月 No.486	세계경제 이슈	경제
10	2000年10月 No.487	중동 문제	지역
11	2000年11月 No.488	타이완 문제	미·중
12	2000年12月 No.489	세계화	이슈
13	2001年1月 No.490	신세기의 일본 외교	일본 외교
14	2001年2月 No.491	미국	미·중
15	2001年3月 No.492	중국	미·중
16	2001年4月 No.493	인도적 개입	이슈
17	2001年5月 No.494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18	2001年6月 No.495	IT혁명	경제
19	2001年7月 No.496	발칸문제	지역
20	2001年8月 No.497	세계화	이슈
21	2001年9月 No.498	개발협력	이슈
22	2001年10月 No.499	아프리카	지역
23	2001年11月 No.500	창간 500호 기념호	일본 외교
24	2001年12月 No.501	역사인식	역사인식
25	2002年1月 No.502	중국	미·중
26	2002年2月 No.503	테러리즘	이슈
27	2002年3月 No.504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28	2002年4月 No.505	테러리즘	이슈
29	2002年5月 No.506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30	2002年6月 No.507	선진국 정상회담	거버넌스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31	2002年7月 No.508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
32	2002年8月 No.509	유럽통합	지역
33	2002年9月 No.510	지적재산권	경제
34	2002年10月 No.511	안보	안보
35	2002年11月 No.512	중동 문제	지역
36	2002年12月 No.513	난민 문제	이슈
37	2003年1月 No.514	중국	미·중
38	2003年2月 No.515	미국	미·중
39	2003年3月 No.516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40	2003年4月 No.517	ODA	이슈
41	2003年5月 No.518	한반도	한반도
42	2003年6月 No.519	NGO	이슈
43	2003年7月 No.520	체제이행	이슈
44	2003年8月 No.521	테러리즘	이슈
45	2003年9月 No.522	중동 문제	지역
46	2003年10月 No.523	국제연합	거버넌스
47	2003年11月 No.524	에너지	이슈
48	2003年12月 No.525	감염병	이슈
49	2004年1月 No.526	미국	미·중
50	2004年2月 No.527	중국	미·중
51	2004年3月 No.528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52	2004年4月 No.529	군축	이슈
53	2004年5月 No.530	인간의 안전보장	이슈
54	2004年6月 No.531	러시아	지역
55	2004年7月 No.532	WTO	경제
56	2004年8月 No.533	아프리카	지역
57	2004年9月 No.534	국제연합	거버넌스
58	2004年10月 No.535	아시아 선거	지역
59	2004年11月 No.536	중남미	지역
60	2004年12月 No.537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61	2005年1月 No.538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62	2005年2月 No.539	미국	미·중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63	2005年3月 No.540	중국	미·중
64	2005年4月 No.541	에너지	이슈
65	2005年5月 No.542	독일	지역
66	2005年6月 No.543	안보	안보
67	2005年7月 No.544	구소련 지역	지역
68	2005年8月 No.545	국제분쟁	이슈
69	2005年9月 No.546	외교사	일본 외교
70	2005年10月 No.547	평화유지 활동	안보
71	2005年11月 No.548	ODA	일본 외교
72	2005年12月 No.549	역사인식	역사인식
73	2006年4月 No.550	2006년 국제관계	일본 외교
74	2006年5月 No.551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75	2006年6月 No.552	기후변동	이슈
76	2006年7月 No.553	동아시아 경제통합	동아시아
77	2006年9月 No.554	핵확산	안보
78	2006年10月 No.555	유럽	지역
79	2006年11月 No.556	자위권	안보
80	2006年12月 No.557	중남미	지역
81	2007年1月 No.558	일본의 국가정체성	일본 외교
82	2007年3月 No.559	미국과 중국	미·중
83	2007年4月 No.560	국제형사재판	거버넌스
84	2007年5月 No.561	노무현 정권	한반도
85	2007年6月 No.562	글로벌 거버넌스	거버넌스
86	2007年7月 No.563	위기 10년 후 아시아 경제	경제
87	2007年9月 No.564	평화구축	이슈
88	2007年10月 No.565	대륙붕	이슈
89	2007年11月 No.566	FTA 네트워크	경제
90	2007年12月 No.567	경제안보	경제/안보
91	2008年1月 No.568	미국	미·중
92	2008年3月 No.569	일본 외교	일본 외교
93	2008年4月 No.570	국제연합	거버넌스
94	2008年5月 No.571	세계경제와 부채	경제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95	2008年6月 No.572	환경 문제	이슈
96	2008年7月 No.573	대통령제	지역
97	2008年9月 No.574	국제노동시장	경제
98	2008年10月 No.575	싱크탱크	거버넌스
99	2008年11月 No.576	ASEAN	동아시아
100	2008年12月 No.577	식량 문제	이슈
101	2009年1月 No.578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102	2009年3月 No.579	미국	미·중
103	2009年4月 No.580	러시아	지역
104	2009年5月 No.581	중국	미·중
105	2009年6月 No.582	세계 금융위기	경제
106	2009年7月 No.583	해적	이슈
107	2009年9月 No.584	대공황	경제
108	2009年10月 No.585	APEC	동아시아
109	2009年11月 No.586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110	2009年12月 No.587	오와타조약	이슈
111	2010年1月 No.588	2010년대 일본 외교	일본 외교
112	2010年3月 No.589	미국	미·중
113	2010年4月 No.590	중국	미·중
114	2010年5月 No.591	아프리카	지역
115	2010年6月 No.592	인권	이슈
116	2010年7月 No.593	인구 문제	이슈
117	2010年9月 No.594	미·일 안보조약	안보
118	2010年10月 No.595	핵정책	안보
119	2010年11月 No.596	중동 문제	지역
120	2010年12月 No.597	국제재판	거버넌스
121	2011年1月 No.598	국제정세 변동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122	2011年3月 No.599	미국	미·중
123	2011年4月 No.600	창간 600호 기념	일본 외교
124	2011年5月 No.601	글로벌 거버넌스	거버넌스
125	2011年6月 No.602	신해혁명	미·중
126	2011年7月 No.603	인간의 안전보장	이슈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127	2011年9月 No.604	패권 전이	미·중
128	2011年10月 No.605	아랍의 봄	지역
129	2011年11月 No.606	에너지	이슈
130	2011年12月 No.607	가족 문제	이슈
131	2012年1月 No.608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외교	일본 외교
132	2012年3月 No.609	미국	미·중
133	2012年4月 No.610	중국	미·중
134	2012年5月 No.611	유럽통합	지역
135	2012年6月 No.612	해외직접투자	경제
136	2012年7月 No.613	중국	미·중
137	2012年9月 No.614	러시아	지역
138	2012年10月 No.615	한반도	한반도
139	2012年11月 No.616	ODA	이슈
140	2012年12月 No.617	UN 해양법조약	이슈
141	2013年1月 No.618	신흥국의 대두	거버넌스
142	2013年3月 No.619	미국	미·중
143	2013年4月 No.620	중국	미·중
144	2013年5月 No.621	아프리카	지역
145	2013年6月 No.622	동아시아 지역통합	동아시아
146	2013年7月 No.623	아시아 외교	동아시아
147	2013年9月 No.624	영토분쟁	이슈
148	2013年10月 No.625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149	2013年11月 No.626	노동이동	경제
150	2013年12月 No.627	북극해	이슈
151	2014年1月 No.628	미·중 관계	미·중
152	2014年3月 No.629	중동 문제	지역
153	2014年4月 No.630	미국	미·중
154	2014年5月 No.631	중국	미·중
155	2014年6月 No.632	메가 FTA	경제
156	2014年7月 No.633	중소특국의 뒷	경제
157	2014年9月 No.634	경제안보	경제/안보
158	2014年10月 No.635	공공외교	이슈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159	2014年11月 No.636	포경재판	이슈
160	2014年12月 No.637	ODA	이슈
161	2015年1月 No.638	요시다 노선	일본 외교
162	2015年3月 No.639	식량 문제	이슈
163	2015年4月 No.640	중국	미·중
164	2015年5月 No.641	EU	지역
165	2015年6月 No.642	국제사회의 조직화	거버넌스
166	2015年7月 No.643	동아시아 정치	동아시아
167	2015年9月 No.644	전후 일본	일본 외교
168	2015年10月 No.645	브라질	지역
169	2015年11月 No.646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170	2015年12月 No.647	중앙아시아	지역
171	2016年1月 No.648	신안보법제	안보
172	2016年3月 No.649	중국	미·중
173	2016年4月 No.650	아프리카	지역
174	2016年5月 No.651	정상회담	거버넌스
175	2016年6月 No.652	TPP	경제/동아시아
176	2016年7月 No.653	미국	미·중
177	2016年9月 No.654	일본의 국제연합 외교	거버넌스
178	2016年10月 No.655	한반도	한반도
179	2016年11月 No.656	중동 문제	지역
180	2016年12月 No.657	격차 문제	경제
181	2017年1月 No.658	사이버 전쟁	안보
182	2017年3月 No.659	남중국해	안보
183	2017年4月 No.660	유럽	지역
184	2017年5月 No.661	중국	미·중
185	2017年6月 No.662	난민 문제	이슈
186	2017年7月 No.663	미국	미·중
187	2017年9月 No.664	중국경제	미·중/경제
188	2017年10月 No.665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189	2017年11月 No.666	법의 지배	거버넌스
190	2017年12月 No.667	러시아	지역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191	2018년1월 No.668	국제질서	일본 외교
192	2018년3월 No.669	인도	지역
193	2018년4월 No.670	한반도	한반도
194	2018년5월 No.671	중동 지역질서	지역
195	2018년6월 No.672	군축	안보
196	2018년7월 No.673	중국	미·중
197	2018년9월 No.674	해양질서 재편	이슈
198	2018년10월 No.675	종교와 국제정치	이슈
199	2018년11월 No.676	권위주의체제	이슈
200	2018년12월 No.677	자유무역체제	경제
201	2019년1월 No.678	다국간주의	거버넌스
202	2019년3월 No.679	이행기정의	역사인식
203	2019년4월 No.680	인권	이슈
204	2019년5월 No.681	미국과 중국	미·중
205	2019년6월 No.682	아프리카	지역
206	2019년7월 No.683	사이버 안보	안보
207	2019년9월 No.684	우주의 국제정치	안보
208	2019년10월 No.685	중국	미·중
209	2019년11월 No.686	국제분쟁과 국제기구	거버넌스
210	2019년12월 No.687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동아시아
211	2020년1월 No.688	2020년의 세계와 일본 외교	일본 외교
212	2020년3월 No.689	국제무역	경제
213	2020년4월 No.690	국제질서	일본 외교
214	2020년5월 No.691	EU	지역
215	2020년6월 No.692	기후변화	이슈
216	2020년7월 No.693	코로나19	이슈
217	2020년9월 No.694	미국	미·중
218	2020년10월 No.695	감염병	이슈
219	2020년11월 No.696	포스트코로나 세계경제질서	경제
220	2020년12월 No.697	코로나 후의 세계질서	이슈
221	2021년1월 No.698	감염병 대책	이슈
222	2021년3월 No.699	감염병과 국제법	이슈

연번	발행일	주제	분류
223	2021年4月 No.700	창간 700호 특집	일본 외교
224	2021年6月 No.701	미국	미·중
225	2021年8月 No.702	중동 문제	지역
226	2021年10月 No.703	노동시장	경제
227	2021年12月 No.704	인권 문제	이슈

〈부록 2〉 『國際問題』 기사의 저자 및 참여자 (3회 이상, 2000-2021)

연번	이름		출연횟수	출생연도	배경
1	山本吉宣	아마모토 요시노부	13	1943	정치학자
2	田中明彦	다나카 아키히코	10	1954	정치학자
3	立山良司	다테야마 료우지	9	1947	정치학자
4	浦田秀次郎	우라타 슈우조로	9	1950	경제학자
5	五十嵐武士	이가라시 다케시	8	1946	정치학자
6	中西寛	나카니시 히로시	8	1962	정치학자
7	添谷芳秀	소에야 요시히데	8	1955	정치학자
8	村瀬信也	무라세 신야	8	1943	법학자
9	菊池努	기구치 츠토무	7	1953	정치학자
10	木村福成	기무라 후쿠나리	7	1958	경제학자
11	中山俊宏	나카야마 도시히로	7	1967	정치학자
12	下斗米伸夫	시모토마이 노부오	7	1948	정치학자
13	横田洋三	요코타 요조	7	1940	법학자
14	久保文明	구보 후미아키	6	1956	정치학자
15	納家政嗣	나야 마사쓰쿠	6	1946	정치학자
16	渡邊昭夫	와타나베 아키오	6	1932	정치학자
17	神谷万丈	가미야 마타케	6	1961	정치학자
18	五百旗頭眞	이오키베 마고토	6	1943	정치학자
19	天児慧	아마코 사토시	6	1947	정치학자
20	浅田正彦	아사다 마사히코	6		법학자

연번	이름		출연횟수	출생연도	배경
21	高木誠一郎	다카기 세이이치로	5	1943	정치학자
22	関志雄	간 시유	5	1957	경제학자
23	梅本哲也	우메모토 데쓰야	5	1953	정치학자
24	北岡伸一	기타오카 신이치	5	1948	정치학자
25	山影進	아마가게 쓰스무	5	1949	정치학자
26	細野豊樹	호소노 도요키	5		정치학자
27	小此木政夫	오코노기 마사오	5	1945	정치학자
28	松永泰行	마쓰나가 야스유키	5	1963	정치학자
29	遠藤乾	엔도 겐	5	1966	정치학자
30	遠藤貢	엔도 미스기	5		정치학자
31	佐藤考一	사토 고이치	5		정치학자
32	佐々江賢一郎	사사에 겐이치로	5	1951	외교관
33	浅野亮	아사노 료	5		정치학자
34	青山瑠妙	아오야마 루미	5	1967	정치학자
35	村田晃嗣	무라타 고우지	5	1964	정치학자
36	岡部達味	오카베 다쓰미	4	1932	정치학자
37	高原明生	다카하라 아키오	4	1958	정치학자
38	龜山康子	카메야마 야스코	4		정치학자
39	大芝亮	오시바 료	4	1954	정치학자
40	藤田久一	후지타 히사카즈	4	1937	법학자
41	柳井俊二	야나이 쉰지	4	1937	외교관
42	本間正義	혼마 마사요시	4	1951	경제학자
43	山田哲也	야마다 테쓰야	4		법학자
44	西村弓	니시무라 유미	4		정치학자
45	石川卓	이시카와 다쿠	4		정치학자
46	石川薫	이시카와 가오루	4		외교관
47	小和田恆	오와다 히사시	4	1932	외교관
48	勝俣誠	가쓰마다 마코토	4	1946	경제학자
49	深川由起子	후카가와 유기코	4	1958	경제학자

연번	이름		출연횟수	출생연도	배경
50	伊藤隆敏	이토 다카토시	4	1950	경제학자
51	田中素香	다나카 소코우	4	1945	경제학자
52	田中俊郎	다나카 도시로	4	1946	정치학자
53	中谷和弘	나카타니 가즈히로	4	1960	법학자
54	池内恵	이케우치 사토시	4	1973	정치학자
55	池田明史	이케다 아키후미	4	1955	정치학자
56	秋山信将	아키야마 노부마사	4	1967	정치학자
57	坂元茂樹	사카모토 시게키	4	1950	법학자
58	後藤純一	고토 준이치	4	1951	경제학자
59	加藤朗	가토 아키라	3	1951	정치학자
60	兼原敦子	가네하라 아쓰코	3		정치학자
61	古城佳子	고조 요시코	3	1956	정치학자
62	袴田茂樹	하카마다 시게키	3	1944	정치학자
63	谷内正太郎	야치 쇼타로	3	1944	외교관
64	国分良成	고쿠분 료세이	3	1953	정치학자
65	堀本武功	호리모토 다케노리	3	1943	정치학자
66	堀坂浩太郎	호리사가 고타로	3	1944	경제학자
67	近藤誠一	곤도 세이치	3	1946	외교관
68	大橋英夫	오하시 히데오	3	1956	경제학자
69	大西裕	오니시 유타카	3	1965	정치학자
70	渡邊啓貴	와타나베 히로타카	3	1954	정치학자
71	渡邊頼純	와타나베 요리즈미	3		정치학자
72	鈴木一人	스즈키 가즈토	3	1970	정치학자
73	明石康	아카시 야스시	3	1931	외교관
74	毛里和子	모리 가즈코	3	1940	정치학자
75	木宮正史	기미야 다다시	3	1960	정치학자
76	福田安志	후쿠다 사다시	3		경제학자
77	山田高敬	야마다 다카히로	3	1959	정치학자
78	森井裕一	모리이 유키치	3	1965	정치학자

연번	이름		출연횟수	출생연도	배경
79	上野俊彦	우에노 도시히코	3	1953	정치학자
80	西田恒夫	니시다 츠넌오	3	1947	외교관
81	星野俊也	호시노 도시야	3	1959	외교관
82	細谷雄一	호소야 유이치	3	1971	정치학자
83	小島眞	고지마 마코토	3		경제학자
84	小川英治	오카네 에이지	3	1957	경제학자
85	安井明彦	야스이 아키히코	3		평론가
86	岩間陽子	이와마 요코	3	1964	정치학자
87	若林正丈	와카바야시 마사히로	3	1949	정치학자
88	薬師寺公夫	야쿠시지 기미오	3		법학자
89	巖善平	안 선평	3		경제학자
90	奥脇直也	오쿠와키 나오키	3	1946	법학자
91	田所昌幸	다도고로 마사유키	3	1956	정치학자
92	定形衛	사다가타 마모루	3	1953	정치학자
93	酒井啓亘	사카이 히로노부	3	1963	법학자
94	倉田秀也	구라다 히데야	3	1961	정치학자
95	波多野澄雄	하타노 스미오	3	1947	정치학자
96	恒川恵市	스네가와 케이치	3	1948	정치학자
97	絵所秀紀	에소 히데키	3	1947	경제학자

### 〈부록 3〉 본문에서 활용한 『世界』의 글 제목 (2001~2021)

발행 연월	권호	작성자	제목
2001. 3.	685	編集部	特集 中国とどう向き合うのか: グローバル化の中で
2001. 11.	694	編集部	特集 報復戦争に反対する
2001. 11.	694	藤原帰一	日本がなすべきことは何か: テロリズム克服の条件
2001. 12.	695	愛敬浩二	米軍支援は「憲法の枠内」ではない: 「国際連帯」という危険な正当化論を批判する
2002. 1.	697	編集部	特集 戦争で平和はつくれるのか
2002. 5.	701	編集部	特集 何のための「有事法制」か

발행 연월	권호	작성자	제목
2004. 11.	733	寺島実郎	米国大統領選挙と日米関係
2004. 12.	734	編集部	特集 米軍再編と自衛隊再編: 日本は米軍事戦略の最前線へ?
2004. 12.	734	前田哲男 半田滋 川崎哲	安全保障政策の大転換がはじまった
2006. 9.	756	編集部	特集 東アジア外交の構築を: ミサイル発射, 日中関係, 靖国
2006. 12.	758	編集部	特集 安倍改憲政権の研究
2006. 12.	758	原彬久	岸信介と安倍晋三
2007. 4.	763	編集部	特集 日本軍事政策の大転換: 自衛隊はどこへ行く?
2007. 4.	763	遠山武	分岐点に立つ自衛隊: 動き出す「グローバルな日米安保」の中で
2007. 4.	763	高見勝利	憲法九条の「解釈改憲」と「明文改正」: 安倍の戦略と米国の影
2007. 10.	770	編集部	特集 否定された「安倍改憲路線」: 逆転参院選とその後
2009. 7.	793	編集部	特集 「非核の東アジア」の実現を!: 安全保障政策のオルタナティブ
2009. 7.	793	我部政明 前田哲男 田巻一彦 古関彰一	共同提言 安全保障政策のオルタナティブ: 対米従属・思考停止からの脱却を
2009. 11.	797	編集部	特集 「対等な日米関係」とは何か: 核密約と日米安保
2009. 11.	797	豊下禎彦	日米安保における「対等性」とは何か
2010. 1.	800	編集部	特集 韓国併合100年: 現代への問い
2010. 1.	800	坂本義和	アジアを越えた「東アジア共同体」の構想を: ヒューマニティと多文化世界
2010. 2.	801	編集部	特集 普天間基地移設問題の真実
2010. 2.	801	入江昭	これからの日米同盟をどう考えるか
2010. 6.	805	編集部	特集 日米安保を根底から考え直す
2010. 6.	805	青井未帆	日米安保条約と憲法9条
2010. 6.	805	古関彰一	日米安保 Q&A
2010. 6.	805	久江雅彦	日米安保 Q&A
2010. 8.	807	寺島実郎	日米同盟は「進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普天間迷走の総括と今後
2010. 9.	808	編集部	特集 巨大な隣人・中国とともに生きる
2010. 9.	808	行天豊雄	豊かで強い中国とどう向き合うか

발행 연월	권호	작성자	제목
2010. 9.	808	松田康博	「不確実性」としての中国に向き合う
2010. 12.	811	編集部	特集 尖閣“衝突”と日中関係
2010. 12.	811	高原明生	中国にどのような変化が起きているか: 日中関係の脆弱性と強靱性
2011. 3.	816	田中均 寺島実郎	対談 大国・中国とどう向き合うか: 問われる日本外交の理念と戦略
2011. 3.	816	西原春夫	大きな歴史の流れの中で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
2012. 10.	835	編集部	特集 日中国交回復40年: 対立を越えるために
2012. 10.	835	河野洋平	日本外交に理性と誠実さを
2012. 10.	835	辻井喬	新世紀の日中関係への展望: 「入亜脱従属」の構想
2012. 11.	836	編集部	特集 「尖閣問題」: 東アジアの真の平和のために
2012. 11.	836	孫崎享	尖閣問題 日本の誤解
2012. 11.	836	中江要介	ともに築き上げた平和と友好を踏みにじってはならない
2012. 11.	836	小林陽太郎	いま交流を跡絶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日中は東アジアの「平和の大国」をめざせ
2012. 12.	837	編集部	特集 領土問題と歴史認識: 対話の道を探る
2012. 12.	837	高原明生	尖閣問題をバンドラの箱にしまいなおす: 「2012年コンセンサス」の策定に向けて
2013. 3.	840	編集部	特集 安倍「改憲政権」を問う
2013. 3.	840	水島朝穂	「壊憲」にどう対抗するか: 改めて問われる立憲主義の意味
2013. 3.	840	奥平康弘	「自主憲法制定=全面改正」論批判
2013. 6.	844	編集部	特集 「96条からの改憲」に抗する
2013. 6.	844	青井未帆	憲法は何のためにあるのか: 自由と人権,そして立憲主義について
2013. 9.	847	編集部	特集 問われる安倍政権の歴史認識
2013. 12.	850	編集部	特集 暴走する安全保障政策
2014. 5.	856	編集部	特集 集团的自衛権を問う
2014. 7.	858	編集部	特集 日本外交の分水嶺
2015. 6.	870	編集部	特集 安保法制と「戦後」の本質
2015. 6.	870	青井未帆	安保法制は何を転換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か
2015. 7.	871	編集部	特集 戦争立法を問う
2015. 7.	871	集团的 自衛権問題 研究会	安全保障法制の焦点2

발행 연월	권호	작성자	제목
2015. 8.	872	編集部	特集「違憲」安保法案を廃案に
2015. 8.	872	石川健治	集团的自衛権というホトドキスの卵: 「非立憲」政権によるクーデターが起きた
2015. 9.	873	編集部	特集1 安保法案: 深まる欺瞞と矛盾
2015. 9.	873	編集部	特集2 戦後70年: 「戦」の「後」でありつづけるために
2015. 9.	873	栗崎周平	「集团的自衛権行使による抑止力向上」は本当か: ゲーム理論から考える
2015. 10.	874	編集部	特集 2015年夏という分岐点
2016. 7.	884	編集部	特集 非立憲政治を終わらせないために: 2016年の争点
2016. 8.	885	編集部	特集2 「核なき」未来は可能か: オバマ大統領広島訪問から考える
2016. 8.	885	太田昌克	「アトミック・サンシャイン」の影で: 歴史的訪問が照射する日米核同盟の実相
2017. 7.	897	編集部	特集1 韓国新政権と東アジアの未来: 北朝鮮危機の中で
2017. 7.	897	和田春樹	北朝鮮危機と平和国家日本の平和外交
2017. 8.	898	編集部	特集 中国の「最前線」はいま: 香港返還二〇年
2017. 8.	898	川島真 倉田徹 福田円	座談会 民主と自由の最前線: 香港・台湾から考える東アジアの未来
2017. 11.	901	村山富市 小此木政夫 伊豆見元 美根慶樹 李鍾元 吉田進 小牧輝夫 木宮正史 和田春樹	討論会記録: 北朝鮮危機と日本のなすべきこと
2018. 1.	903	編集部	特集1 民主政治の混迷と「安倍改憲」
2018. 1.	903	水島朝穂	安倍「九条加憲」に対案は必要ない: 憲法改正の「作法」
2018. 1.	903	坂田雅裕	憲法9条改正の論点: 自衛隊の明記は可能か
2018. 7.	910	編集部	特集 朝鮮半島の歴史的返還: 日本外交の責任
2018. 7.	910	田中均 太田昌克	対談 米朝核交渉と日本外交
2018. 7.	910	和田春樹	米朝首脳会談: 何がはじ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2018. 9.	912	梅林宏道	北東アジア新秩序へ: 非核兵器地帯化への積極的関与を
2018. 11.	914	編集部	特集1 軍縮: とるべき選択

발행 연월	권호	작성자	제목
2018. 11.	914	前田哲男	安倍軍拡はどこへ向かうのか: 防衛大綱と概算要求にみる新段階
2019. 3.	918	編集部	特集 拡大する違憲状況
2019. 3.	918	東京新聞 社会部取材班	戦略なき軍拡: アメリカ製兵器「爆買い」の実態
2020. 10.	937	編集部	特集 攻撃する自衛隊
2020. 10.	937	杉原浩司	「敵基地攻撃能力」保有論を批判する
2020. 10.	937	集团的 自衛権問題 研究会	敵地攻撃能力ではなく,北東アジアの軍縮会議を
2020. 11.	938	編集部	特集 新政権の構造と本質
2020. 11.	938	猿田佐世	米中の狭間における日本の進路は
2021. 9.	948	編集部	特集2 最前線列島: 日米安保70年
2021. 9.	948	前田哲男	東アジアINF条約というリアリティ
2021. 9.	948	古関彰一	戦後日本の主権と領土: 日米安保七〇年の現在

## ● 참고문헌

- 권연이. “제2기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요인.” 『일본연구논총』 제54호 (2021), pp. 5-28.
- 김영일·김유정. “일본 헌법 제9조 해석 변경의 배경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88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 남기정. “자위대에서 군대로?: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일본연구논총』 제43호 (2016a), pp. 149-192.
- 남기정.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3) 일본의 아시아정책: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전개.” <https://snuac.snu.ac.kr/?p=33249> (검색일: 2022년 5월 2일).
-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b.
- 다카하라 아키오·마에다 히로코. 『중국근현대사 5: 개발주의 시대로, 1972-2014』. 오무 송 옮김. 서울: 삼천리, 2015.
- 박인휘. “세계화시대의 외교정책과 싱크탱크: 정책지식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2호 (2012), pp. 93-116.
- 볼턴, 존. 『그 일이 일어난 방: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 시사저널사, 2020.
- 손열 편.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EAI, 2013.
- 이현우. “일본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사례.” 『이슈 열린광장』 (경기연구원, 2013. 7. 23.).
- 천자현.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와 한일관계.” 『평화+통일』 제185호 (2022. 3.).
- 최은미. “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일본 외교의 변화와 연속성.” 『일본연구논총』 제49권 (2019), pp. 110-141.
- 하영선.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한울아카데미, 2019.
- “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 安倍総理スピーチ.”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 (검색일: 2022. 3. 19.).

-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2004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https://www.kantei.go.jp/jp/> (검색일: 2022. 3. 1.-2022. 5. 13.).
- 高木誠一郎. “日中「戦略的互惠関係」進展と課題.” 『国際問題』 第569号 (2008), pp. 1-10.
- 高坂正堯. “海洋国家日本の構想.” 『中央公論』 第79卷 第9号 (1964), pp. 48-80.
- 高坂正堯. “現実主義者の平和論.” 『中央公論』, 1963. 1.
- 谷内正太郎・田中明彦・田中直毅・山本吉宣. “[座談会] 国際情勢の動向と日本外交.” 『国際問題』 第504号 (2002), pp. 2-20.
- 國廣道彦・田中明彦・岡部達味. “座談会 中華人民共和国: その五〇年と二一世紀.” 『国際問題』 第478号 (2000), pp. 2-22.
- 菊池努.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 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第687号 (2019), pp. 1-6.
- 菊池努. “「東アジア」地域主義の可能性: ASEAN+3(日中韓)の経緯と展望.” 『国際問題』 第494号 (2001), pp. 16-33.
- 宮下明聡・佐藤洋一郎. 『現代日本のアジア外交: 対米協調と自主外交のはざままで』. ミネルヴァ書房, 2004.
- 根津朝彦. 『戦後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9.
- 吉田茂. 『回想十年(1)』. 中央文庫, 1998.
-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 <https://www.cas.go.jp/jp/siryou/131217anzenhos-hou/nss-j.pdf> (검색일: 2022. 4. 1.).
- 大矢根聡. “東アジアFTA 日本の政策転換と地域構想: 「政策バンドワゴニング」から「複雑な学習」へ.” 『国際問題』 第528号 (2004), pp. 52-66.
- 大庭三枝.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制度化と日本外交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パワーバランスの変容のなかで.” 『国際問題』 第588号 (2010), pp. 48-58.
- 大下英治. 『安倍晋三と岸信介』. 角川新書, 2013.
- 渡邊昭夫. 「冷戦後の米中ソ関係と日本外交の選択」. 1990.
- 東京財団政策研究所. “出版物.” <https://www.tkfd.or.jp/publications/> (검색일: 2022. 4. 1.).

- 東京財団政策研究所. <https://www.tkfd.or.jp/> (검색일: 2022. 4. 1.).
- 鈴木壯治. “シンクタンク一橋総研「円卓会議」レポート (Vol. 55) 次世代の資本主義と日本の経済安全保障.” 『セキュリティ研究』 第24巻 第7号 (2021), pp. 12-16.
- 毎日新聞社 (編). 『岩波書店と文藝春秋: 『世界』・『文藝春秋』に見る戦後思潮』. 東京: 毎日新聞社, 1996.
- 牧原出. 『「安倍一強」の謎』. 朝日新書, 2016.
- 牧原出. 『崩れる政治を立て直す: 21世紀の日本行政改革論』. 講談社, 2018.
- 文部科学省. “科学研究費助成事業.” [https://www.mext.go.jp/a\\_menu/shinkou/hojyo/main5\\_a5.htm](https://www.mext.go.jp/a_menu/shinkou/hojyo/main5_a5.htm) (검색일: 2022. 4. 1.).
- 飯塚俊太郎, 堤麻衣. “シンクタンクの役割と影響—国政における事業仕分けの採用過程—.” 『公共政策研究』 15 (2015), pp. 104-115.
- 防衛研究所. “防衛研究所の紹介. <http://www.nids.mod.go.jp/> (검색일: 2022. 4. 1.).
- 防衛研究所. “出版物.” <http://www.nids.mod.go.jp/> (검색일: 2022. 4. 1.).
- 福井治弘. 『沖縄返還交渉の政治過程』. 『国際政治』, 52号, 1975.
- 北岡伸一. “巻頭エッセイ ◎2010年代の日本外交.” 『国際問題』 第588号 (2010), pp. 1-3.
- 北岡伸一. “海洋国家日本の戦略: 福沢諭吉から吉田茂まで.” 防衛庁, 2019.
- 北岡伸一. “憲法9条の呪縛から抜け出すとき.” 『This is 読売』, 1999. 3.
- 北岡伸一. 『西太平洋連合のすすめ: 日本の「新しい地政学」』. 東洋経済新報社, 2021.
- 北岡伸一. “演題: 今後の日本の国際協力.” 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0. 8. 28.
- 北岡伸一·宮家邦彦·中満泉·佐々江賢一郎. “[特別座談会] 緒方貞子氏が目指した国際社会, 岡本行夫氏が目指した日本外交.” 『国際問題』 第700号 (2021), pp. 2-20.
- 森聡. “オバマ政権2年目の対外政策の実績.” 『国際問題』 第599号 (2011), pp. 25-41.
- 上野友也. “神川彦松: 独自の国際政治学の体系化を目指して.” 初瀬龍平 (他編). 『国際関係論の生成と展開: 日本の先達との対話』. ナカニシヤ出版, 2017.
- 西部邁. 『保守の遺言』 (電子書籍版). 平凡社, 2018.

- 船橋洋一. 『シンクタンクとは何か-政策起業力の時代』.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9.
- 細谷雄一. “リベラルな国際秩序と日本外交.” 『国際問題』 第690号 (2020), pp. 5-12.
- 細谷雄一. 『外交: 多文明時代の対話と交渉』. 有斐閣, 2007.
- 小川英治.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金融・通貨協力.” 『国際問題』 第553号 (2006), pp. 3-21.
- 矢野義昭. “シンクタンク-橋総研「円卓会議」レポート (Vol. 56) 日本の経済安全保障戦略: 国家総力を挙げた国産半導体生産基盤確立と軍需産業の振興.” 『セキュリティ研究』 第24巻 第8号 (2021), pp. 10-14.
- 柿崎明二. 『検証・安倍イズム: 胎動する新国家主義』. 岩波書店, 2015.
- 植田麻記子. “戦後論壇における日本外交論: 敗戦直後から冷戦終結まで.” 添谷芳秀編. 『秩序変動と日本外交: 拡大と収縮の七〇年』.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 神保謙. “インド太平洋の安全保障 戦略空間としての収斂.” 『国際問題』 第687号 (2019), pp. 7-16.
- 信田智人. 「対外政策決定: 『小泉外交』における政治過程」. 日本国際政治学会 (編). 『学としての国際政治 (日本の国際政治学1)』. 有斐閣, 2009.
- 神川彦松. 「半独立日本の外交」. 『改造』, 1952. 8.
- 神川彦松. 「新日本外交の前途」. 『実業之日本』, 1953. 1.
- 阿南友亮. “海洋に賭ける習近平政権の「夢」 「平和的発展」路線の迷走と「失地回復」神話の創成.” 『国際問題』 第631号 (2014), pp. 42-56.
- 安倍能成. “剛毅と眞實と知慧とを.” 『世界』 創刊號 (1946. 1.).
-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Kindle版). 文春新書, 2006.
-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 完全版)』 (Kindle版). 文春新書, 2013.
- 岸田文雄. 『岸田ビジョン: 分断から協調へ』 (Kindle版). 講談社, 2021.
- 岸田文雄. 『核兵器のない世界へ: 勇気ある平和国家の志』 (Kindle版). 日経BP, 2020.
- 鈴木崇弘. 『日本に「民主主義」を起業する-自伝的シンクタンク論』. 東京: 第一書林, 2007.

- 永井陽之助. 『現代と戦略』. 中央公論社, 1967.
- 永井陽之助. 『現代と戦略』. 文藝春秋, 1985.
- 外務省.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016.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016.html)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2020(令和2)年度実施事業 中間評価結果.”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4.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4.html)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 [https://www.mofa.go.jp/mofaj/gaiko/gaikou\\_zen\\_think/](https://www.mofa.go.jp/mofaj/gaiko/gaikou_zen_think/)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報告書: 日本における外交・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のあり方について～外交力を強化する「日本型シンクタンク」の構築～.”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24/8/pdfs/0807\\_06\\_02.pdf](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24/8/pdfs/0807_06_02.pdf)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 <https://www.mofa.go.jp/mofaj/annai/shocho/hojokin/index3.html>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2020(令和2)年度実施事業中間評価結果.” 2021. [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3.html](https://www.mofa.go.jp/mofaj/fp/pp/page24_001453.html) (검색일: 2022. 4. 1.).
- 外務省. “外交シンクタンクとの連携.” <https://www.mofa.go.jp/mofaj/annai/shocho/hojokin/index.html>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フォーラム(JFIR). [https://www.jfir.or.jp/jp/studygroup\\_index/](https://www.jfir.or.jp/jp/studygroup_index/)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領土・主権・歴史調査研究支援事業)補助事業実績報告書.” 2020.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26514.pdf>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領土・歴史センター-外務省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 <https://www.jiia.or.jp/jic/>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研究スタッフ.” <https://www.jiia.or.jp/staff/> (검색일: 2022. 4. 1.).

-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研究所概要: 沿革.” <https://www.jiia.or.jp/abus/enkaku.html>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金補助事業実績報告書.”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26539.pdf>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出版 研究所の出版物.” <https://www2.jiia.or.jp/PUBR/>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会員について.” <https://www.jiia.or.jp/memb/> (검색일: 2022. 4. 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 (검색일: 2022. 4. 1.).
- 入江明. 『新・日本の外交』. 中公新書, 1991.
- 田中均. “巻頭エッセイ ◎国際政治の構造変動と日本.” 『国際問題』 第586号 (2009), pp. 1-4.
- 田中明彦・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編. 『提言, 日米同盟の組み直し: 東アジアリスクと安全保障改革』.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 田中明彦.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の射程.” 『外交=Diplomacy』 第47号 (2018), pp. 36-41
- 田中明彦. “巻頭エッセイ ◎2020年の世界と日本.” 『国際問題』 第688号 (2020), pp. 1-4.
- 田中秀明. 「第2次安倍政権における政策形成過程のガバナンス」. 『年報行政研究』 第54巻, 2019.
- 佐橋亮. “米中対立と日本: 関与から戦略的競争に移行するアメリカを中心に.” 『国際問題』 第688号 (2020), 5-17.
- 佐藤考一. “中国の対ASEAN関係とアメリカ: 地域主義をめぐる国際政治.” 『国際問題』 第559号 (2007), pp. 34-44.
- 佐藤太久磨. 「自主憲法精神, その起源と揺曳」.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第105号, 2015.
- 酒井哲哉. “「9条=安保体制」の終焉: 戦後日本外交と政党政治.” 『国際問題』 第372号

- (1991), pp. 32-45.
- 竹中治堅. 『首相支配: 日本政治の変貌』. 中公新書, 2006.
- 中西寛. “改革から構築へ—小泉外交の経験と日本外交の課題.” 『国際問題』 第550号 (2006), pp. 4-15.
- 中西寛. “巻巻頭エッセイ ◎2020年の劈頭に考える国際秩序の行方.” 『国際問題』 第690号 (2020), pp. 1-4.
- 中西寛. “日本外交におけ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外交=Diplomacy』 第52号 (2018), pp. 12-19.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NPIの出版.” <https://www.npi.or.jp/publications/index.html> (검색일: 2022. 4. 1.).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役員一覧.” <https://www.npi.or.jp/about/officer.html> (검색일: 2022. 4. 1.).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研究者紹介.” <https://www.npi.or.jp/experts/index.html> (검색일: 2022. 4. 1.).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費補助事業 実績報告書.” <https://www.npi.or.jp/research/2021/04/09153710.html> (검색일: 2022. 4. 1.).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政策提言.” <https://www.npi.or.jp/research/policy/index.html> (검색일: 2022. 4. 1.).
- 中曽根康弘世界平和研究所. <https://www.npi.or.jp/index.html> (검색일: 2022. 4. 1.).
- 添谷芳秀 (編). 『秩序変動と日本外交: 拡大と収縮の70年』.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 添谷芳秀. “日本のインド太平洋外交と近隣外交.” 『国際問題』 第688号 (2020), pp. 18-32.
- 添谷芳秀. 『日本外交と中国』.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97.
-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直す: 「九条·安保体制」を越えて』. 東京: NHKブックス, 2016.

- 添谷芳秀・田所昌幸・ディヴィッド・A・ウェルチ. 『「普通」の国・日本』. 千倉書房, 2014.
- 初瀬龍平. 「総論」. 初瀬龍平 (他編). 『国際関係論の生成と展開: 日本の先達との対話』.  
ナカニシヤ出版, 2017.
- 村田晃嗣. 「リアリズム: その日本の特徴」. 『日本の国際政治学1: 学としての国際政  
治』. 有斐閣, 2009.
- 坂本義和. 「中立日本の防衛構想: 日米安保体制に代るもの」, 『世界』. 1959. 8.
- 豊下楯彦. 『安保条約の論理その生成と展開』. 柏書房, 1999.
- 河野康子・渡邊昭夫. 『安全保障政策と戦後日本, 1972~1994: 記憶と記録の中の日米  
安保』. 東京: 千倉書房, 2016.
- Abe, S.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a-strategic-  
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검색일: 2022. 3. 19).
- Abelson, D. E. *Do Think Tank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y  
Institution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9.
- Allison, G.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1971.
- Blaker, M. "Evaluating Japan's Diplomatic Performance." In G. L.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M.E.Sharpe, 1993.
- Calder, K. E.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 40, Issue. 4 (1988), pp. 517-541.  
Department of State: Airgram (Subject: Specified Industries Bill Fails of Passage  
for Third Time), Embassy Tōkyō, July 9, 1964.
- Goldstein, J. and Robert O. K. (Eds.).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Hudson, V. M. *Foreign Policy Analysis: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 Rowman & Littlefield, 2007.
- Hughes, C. W.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Palgrave Macmillan, 2015.
- Jackson, V. "America's Indo-Pacific Folly: Adding New Commitments in Asia Will Only Invite Disaster." *Foreign Affairs*, Snapshot (March 12, 2021).
-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Köllner, P., Zhu, X. and Abb, P. "INTRODUCTIO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Think Tanks in Mainland China, Taiwan, and Japan." *Pacific Affairs*, Vol. 91, No. 1 (March, 2018), pp. 5-26.
- Maslow, S. "Knowledge Regimes in Post-Developmental States: Assessing the Role of Think Tanks in Japan's Policymaking Process." *Pacific Affairs*, Vol. 91, No. 1 (March, 2018), pp. 95-117.
- McGann, J. G. "2020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9&context=think\\_tanks](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9&context=think_tanks) (검색일: 2022. 4. 1.).
- Rix, A. "Dynamism, Foreign Policy and Trade Policy." In J. A. A. Stockwin et al. (Eds.), *Dynamics and Immobilist Politics in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 Samuels, R. "Securing Japan: The Current Discours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33 No.1, 2007.
- Smith, S.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van Wolferen, K.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New York, NY: Vintage Books, 1990.

# INSS 국가행동 분석

일본

인쇄일 2022년 8월 10일

발행일 2022년 8월 17일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이태운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처 한국학술정보(주)

※ 본 책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INSS 국가행동 분석

일본

Japan



비매품/무료



93340

9 791189 781781  
ISBN 979-11-89781-78-1